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1996. 10.

余 仁 坤(國際研究室長)
金 永 椿(國際研究室 研究委員)
申 相 振(國際研究室 研究委員)
崔 大 錫(國際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요 약

냉전종식 이후 동북아지역은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지 못하고 과도기 상태에 있다. 반면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지역평화와 안보 유지에 이바지하여온 「유럽안보協力會議」(CSCE)가 「유럽안보協力機構」(OSCE)로 발전하여 냉전종식 이후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안보위협 요인들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지역에서는 「아세안지역포럼」(ARF)이 창설되어 역내 질서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동북아지역에서도 역내 안보위협을 사전 방지, 해결하고 지역평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동북아 역내의 안보역학관계 속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平和體制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CSCE/OSCE와 ARF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안보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동북아 평화체제의 造成方案을 강구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1. 동북아 안보정세와 역내국가들의 정세인식

1990년대 들어 美·러간 대립국면이 해소되고, 韓國이 러시아, 中國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한편, 北韓이 미국 및 일본과 접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동북아의 긴장완화 추세가 가시화되었다. 또한 동북아질서의 多極化와 역내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도 심화도 지역안보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에서는 아직도 미·일·중·러 등 4강대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중국과 한반도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세계의 마지막 냉전지대로 남아 있다.

또한 領土問題와 군비경쟁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체제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혼란도 동북아 안보환경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동북아 지역질서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 지역에서 아직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지 못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과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동북아 역내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정세인식을 갖고 있다.

미국은 냉전의 종식으로 동북아지역을 포함한 亞·太地域 전반에서 초강대국이었던 구소련과의 대결 가능성이 거의 사라짐으로써 동지역이 안정 및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으나, 양자 동맹관계의 이완과 북한의 위협,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 지역 불안정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냉전종식과 소련의 사회주의체제 붕괴로 러시아의 직접적인 안보위협은 감소하였지만 아직까지 군사력은 위협적인 수준에 있으며, 미국의 개입능력 저하와 역내국가간 軍備競爭으로 인하여 지역분쟁 위험은 오히려 증대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급속한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한 중국의 軍事力 現代化 및 해외개입 능력 증대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미·소의 양극체제가 와해되고 미·일·중의 3극체제가 형성되고 있으며, 러시아·한국 등과의 선린관계 對 미국·일본과의 대립관계라는 이중적 안보구조가 배태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동북아 역내국가간의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러시아는 역내국가간의 제반관계가 상호의존적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협력체제가 형성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

나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기초로 역내에서 지도적 역할을 견지하려는 미국의 동북아정책,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 노력, 한반도 상황의 불안정 및 역내의 영토분쟁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내부 체제위기와 대외고립 국면에 처하여 있는 북한은 역내국가간 정치·군사적 불신, 한반도의 비대칭적 대외관계 및 중국과 북한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平和的 移行戰略이 동북아지역 국가간 긴장관계를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2.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에 대한 각국의 입장

미국은 동북아를 포함한 아·태지역에서 양자동맹 관계의 약화 등을 우려하여 다자간 지역안보 논의를 거부하여 왔다. 그러나 1993년 클린턴 미행정부의 발족과 더불어 미국은 「介入과 擴大」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대외정책을 수립하면서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필요성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클린턴 미대통령은 1993년 7월 「新太平洋共同體」를 제안하였는 바, 동 구상은 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지역안보 공약준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시장확대 및 교역신장을 위한 지역환경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민간 차원의 東北亞 多者安保對話로서 1993년 출범한 NEACD를 적극 후원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양자관계를 중심으로 동북아지역에서의 안보이해를 확보하여 온 미국은 지역안보 협력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의제, 협의범위, 참여국의 수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형의 CSCE보다는 APEC을 안보 포럼으로 개편하여 이를 아·태지역 안보협력의 기초로 삼고, 한·미와 미·일 안보동맹을 보완하는 차원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냉전시대에 아·태지역 다자안보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왔으나 냉전종식 이후 북한의 핵위협, 美軍撤收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야자와 일본 수상은 1992년 아시아판 다자안보협력기구의 창설을 주장한 바 있으며, 1994년 출범한 ARF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동북아지역과 관련, 일본의 이즈미 교수는 동북아 비핵지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NEACD에 참여하여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도 정부차원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형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바 없다.

중국은 이념대립 지속, 分斷問題 등 동북아를 포함한 아·태지역이 지닌 특수한 사정을 이유로 CSCE와 같은 포괄적인 안보협력체 형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1990년대에 들어 중국은 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 행사 및 일본의 역할증대를 견제하려는 ASEAN과의 이해일치 등으로 ARF에 참여하고 있으나, 포괄적인 형태의 협력체를 수립하는데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동북아지역 차원에서도 중국은 NEACD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4강의 이익이 첨예하게 교차되고 있고 상호 신뢰기반이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정부차원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가 구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역내국가들이 양자간의 신뢰를 우선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인들은 구소련시대에 集團安保體制 형성을 주장하여 왔으나 현재는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의 창설을 도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광역차원에서 아·태지역에 「地域安保共同體」의 형성을 희망하고 있다. 아·태 차원에서 ARF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는 미국의 아·태정책 견제, ASEAN 국가들과의 무역·경제관계 확대 및 이들에 대한 무기수출 등의 목적으로 아·태지역 안보공동체의 형성을 희망하고 있다. 동북아지역과 관련 러시아는 NEACD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아·태 지역안보공동체의 준비단계로서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또는 「北亞·太 安保協議體」의 창설을 제의하고 있다. 러시아의 이러한 정책은 대미 군사긴장 완화 유도, 일·중의 군사력 증대 견제, 한반도에서의 분쟁방지 및 자국 영향력 증대 등을 달성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동유럽과 소련 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은 이미 1993년에 서방세계에 의하여 주도되는 아·태 다자안보협력기구 형성 움직임을 자신의 안보이익을 위협하는 ‘새로운 빨럭’으로 간주하고 이에 반대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은 1994년 러시아가 제안한 8자회담에 반대하고 1996년 4월 한·미가 제의한 4자회담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다국간 협의를 통한 韓半島問題 해결에 반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역내국가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종합·평가될 수 있다. 중국과 북한을 제외한 역내국가들이 아·태지역에 다자안보협력체를 형성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ARF나 APEC 등을 통하여 아·태지역의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을 위한 논의는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시아에 정부차원의 다자안보협력체를 수립하려는 역내국가들의 의지는 아직 미미한 상태에 있다. 미국은 雙務的 同盟關係를 기초로 역내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려 하기 때문에 아·태지역에서의 「신태평양공동체」 같이 구체적인 안을 제의한 바가 없다. 한국과 러시아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수립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력을 가지고 역내의 모든 국가들이 만족할 수 있는 속도와 방법으로 타협점을 찾을 경우, 정부차원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을 통한 平和體制 構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동북아 역내의 모든 국가들이 냉전종식 이후 포괄적 안보개념에 따라서 정부차원의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3. 협력안보체의 사례연구 : CSCE/OSCE와 ARF

유럽지역의 협력안보체로서 1973년 창설된 CSCE는 냉전시대에 동서 양진영의 이념적·군사적 대립구도 속에서 신뢰구축과 군축에 합의하여 다자간 안보협의체 조성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유럽의 새로운 질서창출에 이바지 하였다. 또한 CSCE가 제도화된 형태의 OSCE는 현재 유럽지역의 紛爭防止와 위기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협력안보체로서 불과 2년전에 창설된 ARF도 동남아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안보문제의 투명성 증대와 신뢰구축을 통하여 지역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동서진영간의 상이한 이해로 35개국이 참가한 최초의 CSCE가 개

최될 때까지는 약 20년이 걸렸으며, ARF가 협의체 수립제의 이후 3년만에 출범할 수 있었던 것도 ASEAN 틀 밖에서 1970년대 초부터 역내 안보문제를 다루어 왔기 때문이었다. 신뢰·안보구축 문제와 관련, CSCE는 참가국들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10원칙, 안보와 경제, 과학·기술, 환경 및 인도주의 등을 포함하는 「헬싱키 최종합의서」를 1975년 채택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信賴構築 → 信賴·安保構築 → 軍縮의 순으로 유럽국가간 불신을 해소하고 군비경쟁을 방지하였다. ARF는 1995년 제2차회의에서 기본목표를 단순히 군사적 측면만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들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에 입각하여 안보환경을 개선하는데 두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ARF는 이러한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信賴構築 增進 → 豫防外交의 開發 → 紛爭解決 努力이라는 3단계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다.

제도화와 관련, CSCE는 1995년 1월 1일부로 OSCE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안보기능이 확대되었다. 유엔헌장 제52조가 인정하는 ‘지역적 기관’이 된 OSCE는 유럽지역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유엔보다 우선순위를 갖게 되었다. OSCE는 현재 활동목표를 예방외교, 중재를 통한 무력분쟁의 확산 방지, 전쟁확대 방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치주의적·민주적 관계구축의 지원 등에 두고 유럽평화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아직까지 지역포럼의 수준에 있는 ARF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제도화됨으로써 동남아 및 아·태지역 평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CSCE/OSCE와 ARF는 협력안보체가 갖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즉 CSCE/OSCE는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속력의 결여와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의

사결정 과정 때문에 유럽내의 분쟁을 포괄적으로 조정하지 못하여 왔다. ARF는 강대국인 미·일·중·러와 창설을 주도한 비강대국 세력인 ASEAN과의 주도권 경쟁, 향후 전망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4. 동북아 평화체제의 조성방안

CSCE/OSCE와 ARF가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 발전되어 온 경험과 각 지역에 대한 기여점 및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동북아 평화체제의 조성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평화체제 구축, 양자적 접근과 다자적 접근의 병행추진, 다자간 협력안보 과정의 제도화라는 3가지 기본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을 통하여 동북아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세부 추진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적으로 정부차원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민간차원의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인 NEACD나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체인 CSCAP을 정부차원으로 격상시키거나, 한·미가 제안하고 있는 4자회담이 성사될 경우, 남북한 간 平和協定 체결 이후 일·러를 참여시키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정부차원의 다자안보협력체 명칭은 한국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동북아 안보대화」(NEASED), 또는 역내국가간 협력을 확대·강화한다는 의미에서 「東北亞 安保協力對話」(NEASCD)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안보(협력)대화」에 대한 참가국은 남북한·미·일·중·러를 기본으로 하되, 역내 세력균형 유지 및 검증과 군비통제를 위하

여 캐나다, 호주, 몽고 등이 대화 상대국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의사결정방식은 滿場一致의 원칙을 채택하되, 만장일치제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CSCE/OSCE의 경우와 같이 '만장일치-1' 합의방식의 원용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동북아 안보(협력)대화」의 성공여부는 참여국 상호간 신뢰·안보의 구축수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 바, 政治的 信賴構築 → 軍事的 信賴構築 → 軍備統制와 軍縮이라는 3단계 접근법을 통한 합의도출이 필요하다.

셋째,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안보(협력)대화」를 「東北亞 安保(協力)機構」로 제도화함으로써 OSCE의 경우와 같이 유엔이 인정하는 지역적 기관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록 이론상으로 논리적이고 훌륭한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의 기본방향과 세부 추진방안들이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안보적, 경제적 이해를 달리하는 역내의 모든 국가들이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평화체제의 조성에 더욱 필요한 것은 동북아지역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역내국가들의 굳은 의지 및 모든 국가들이 만족할 수 있는 속도와 방법으로 타협점을 찾겠다는 역내국가들의 忍耐力이라고 할 수 있다.

- 目 次 -

要 約

第Ⅰ章 序 論	1
第Ⅱ章 東北亞 安保情勢의 特徵	5
1. 緊張緩和 要因	6
가. 域內秩序의 多極化 趨勢	6
나. 經濟的 相互依存度 深化	12
2. 潛在的 葛藤要因	15
가. 強大國間 利害對立	15
나. 分斷國問題	23
다. 領土紛爭	26
라. 軍備競爭	28
마. 中國과 北韓의 體制變化	31
第Ⅲ章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에 대한 周邊國의 立場	34
1. 美國	34
가. 東北亞 安保情勢 認識	34
나. 東北亞 平和體制에 대한 美國의 立場	39
2. 日本	48
가. 東北亞 安保情勢 認識	48
나. 東北亞 平和體制에 대한 日本의 立場	55

3. 中國	65
가. 東北亞 安保情勢 認識	65
나. 東北亞 平和體制에 대한 中國의 立場	71
4. 러시아	79
가. 東北亞 安保情勢 認識	79
나. 東北亞 平和體制에 대한 러시아의 立場	89
5. 北韓	93
가. 東北亞 安保情勢 認識	93
나. 東北亞 平和體制에 대한 北韓의 立場	99
6. 綜合評價	102
第IV章 새로운 東北亞 平和體制的 造成方案	105
1. 地域 平和體制 形成의 理論과 事例	105
가. 平和의 概念과 地域 平和體制	105
나. 事例研究: 유럽(CSCE/OSCE)과 동남아(ARF)	114
2.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177
가. 基本方向	177
나. 細部 推進方案	184
第V章 結 論	195
參 考 文 獻	200

- 表目次 -

<표 1> 동북아 역내 국가의 군사비 추이	29
<표 2> 지역 안보협력에 대한 각국의 입장	103
<표 3> 평화이론	109
<표 4>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조직	136
<표 5> 유럽 재래식전력(CFE) 감축협정	141
<표 6> 유럽의 安保機構	142
<표 7> 헬싱키 CBMs과 스톡홀름 CSBMs	148
<표 8> CSCE 과정	161
<표 9>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성국가('95.11 현재)	170
<표 10>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180

- 略語表 -

APEC : 아·태 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RF : 아세안 지역포럼 (ASEAN Regional Forum)

ARF-SOM : 아세안 지역포럼 고위간부회의
(ARF Senior Officials Meetings)

ASEAN : 동남아 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PMC : 동남아 국가연합 확대외무장관 회담
(ASEAN Post-Ministerial Conference)

CBMs : 신뢰구축조치 (Confidence-Building Measures)

CDE : 유럽군축회의 (Conference on Disarmament in Europe)

CFE : 유럽재래식군사력 (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CSBMs : 신뢰·안보구축조치
(Confidence - and Security - Building Measures)

CSCAP : 아·태 안보협력이사회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Asia Pacific)

CSCE : 유럽안보협력회의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EAEC : 동아시아 경제협의체 (East Asian Economic Caucus)

EASI : 동아시아 전략구상 (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

EASR : 동·아태지역 안보전략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또는 East Asia Strategy Report)

EC : 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y)
EEZ : 배타적 경제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s)
FSC : 안보협력포럼 (Forum for Security Cooperation)
GDP : 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KEDO :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
(Kore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MBFR : 군사력 상호균형감축
(Mutual and Balanced Force Reduction)
MRM : 상호안심조치 (Mutual Reassurance Measures)
NATO : 북대서양 조약기구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EACD : 동북아 협력대화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NEASED : 동북아 안보대화 (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
NPT : 핵비확산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PECC : 태평양 경제협력회의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OSCE : 유럽안보협력기구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START : 전략무기감축협정 (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
WTO : 바르샤바조약기구 (Warsaw Treaty Organization)

第 I 章 序 論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독일통일 및 소련의 붕괴는 40년간 지속되어 온 동서진영간의 冷戰體制를 종식시켰다. 이에 따라서 냉전 종식 이후 세계질서는 미국이 경제력의 상대적 약화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초강대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냉전시대의 兩極體制를 지역적 下位體制들(regional subsystems)이 대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럽지역의 하위체제는 民主主義 확산과 경제적·제도적 상호연결로 인하여 서구를 중심으로 국가간 통합과 조화를 지향하는 안정된 多極體制로 나아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지역 평화와 안보유지에 이바지하여온 「유럽안보協力會議」(CSCE)가 「유럽안보協力機構」(OSCE)로 발전하여 냉전종식 이후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안보위협요인들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는 「아세안지역포럼」(ARF)이 창설되어 역내 질서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반면 동북아시아의 하위체제는 역내국가들의 다양한 정치체제와 독자적인 경제발전 전략 및 강한 民族主義 등으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지 못하고 과도기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서 동북아시아에서도 역내 안보위협을 사전에 방지·해결하고 지역평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平和體制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질적인 질서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들로 구성된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견해와 지역협력을 통한 평화체제의 구축이 반드시 어렵

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두 견해가 갈려 있다.

前者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 역내국가들은 안보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주로 현실주의적인 접근, 즉 軍備增強과 同盟體制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주의적 접근이 탈냉전 이후 지역내 세력구조의 재편과정에서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지역내 냉전요소의 상존이다. 한반도의 분단과 南北韓간의 적대감, 中·대만 관계, 러·日간의 북방영토문제, 韓·日간의 전통적인 불신 등 지역내 잠재적 갈등요인은 탈냉전 이후에도 계속 존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탈냉전으로 인하여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 동북아지역의 경쟁적인 군비증강 움직임이다. 탈냉전 이후 전세계적 탈군사화의 추세와 실질적인 군비축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역내국가들의 군사비 지출은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각국은 경쟁적으로 첨단무기를 구입하고 있다.¹⁾

반면 동북아에서 地域協力을 통한 平和體制의 구축이 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 질서를 지배하고 있는 강대국간의 갈등이 크게 완화되면서 軍備統制와 군축 및 군사기술의 확산방지 등 역내국가간 협력의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확보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역내국가들은 기존의 안보장치가 냉전종식 이후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바, 새로운 安保體制의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군 주둔과 확고한 방위조약에 의하여 비교적 안정이 유지되어온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축소 가능성은 동맹국들로 하여금 억지

1) 김태현, "신태평양공동체와 지역안보협력," 「신태평양공동체 구상과 한국」(서울: 세종연구소, 1994), p. 95.

논리에 근거한 기존의 안보체제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안보개념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안보의 주체는 국가로 한정되어, 안보문제에 관한 국가는 제로섬(zero-sum)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한 包括的 安保論(comprehensive security)은 군사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그 대상영역의 확대를 요구한다. 특히 탈냉전 이후 경제문제가 정책결정의 우선순위를 점하게 됨으로써 국가경제는 단순히 안보의 수단이 아니라 안보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 더욱이 국가경쟁력, 환경보전, 사회적 안정 등이 모두 국가안보의 주요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문제에 대한 역내국가간의 논의와 협력을 통하여 동북아 평화체제의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²⁾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동북아 역내의 안보역학관계 속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平和體制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가능한 경우 한국의 안보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평화체제의 造成方案을 강구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논문의 제2장에서는 과도기상태에 있는 동북아 안보정세의 특징을 긴장완화 요인과 잠재적 갈등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3장은 이러한 동북아 안보정세에 대한 美·日·中·러·北韓 5국의 인식과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에 대한 이들 국가의 입장을 고찰하고 있다. 또한 이를 기초로하여 東北亞 平和體制의 조성가능성 여부가 판단되었다. 제4장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한 동북아 평화체제의 조성방안이 제시되었다. 먼저 지역평화체제 형성에 관한 이론과 관련하여 평화의 개념과 평화체제 유지방법 및 지

2) 앞의 글, pp. 104~106.

역차원에서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다자간 지역안보 유형들이 서술되었다. 다음에는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을 위한 시사점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유럽과 동남아시아의 안보와 평화를 보장하고 있는 CSCE/OSCE와 ARF에 대한 사례분석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평화관련 이론과 사례분석에 기초하여 한반도의 안정유지 및 평화통일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북아 평화체제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강구·제시되었다.

第Ⅱ章 東北亞 安保情勢의 特徵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이래 동북아에서 공산주의진영의 영도적 역할을 하여온 소련이 붕괴된 이후, 동북아지역에서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냉전의 잔재가 해소되고 새로운 질서가 구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팽배하였다. 1990년대 들어 동북아에서 美·러간 대립국면이 해소되고, 韓國이 러시아, 中國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北韓이 미국 및 일본과 접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동북아의 긴장완화 추세가 가시화되었다. 또한 동북아질서의 多極化와 역내국가간 경제적 상호 의존도 심화도 지역안보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에서는 아직도 미·일·중·러 등 4강대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중국과 한반도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세계의 마지막 냉전지대로 남아 있다. 또한 領土問題와 環境問題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체제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혼란도 동북아 안보 환경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유럽과 달리 동북아에서는 지역분쟁을 사전에 예방·완화시켜 줄 수 있는 다자안보 협력기구가 부재한 상태로,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강대국간 세력균형에 의한 불안한 평화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동북아 지역질서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 지역에서 아직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지 못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과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1. 緊張緩和 要因

가. 域內秩序의 多極化 趨勢

소련의 붕괴와 미국의 경제력 쇠퇴로 1990년대 동북아지역에서 일본과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남북한의 외교적 입지가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

냉전종식 이후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남아있는 미국은 동북아에서도 여전히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경제 쇠퇴로 인하여 동북아질서를 독자적으로 주도하기 보다는 지역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야기되고 있는 지역분쟁에 계속 개입하고 있지만, 域內國家들과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1993년 이후 북한 핵문제가 세계의 관심사로 부각되었을 때, 미국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한반도문제에 대처하고자 하였다.³⁾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게 주둔군의 경비부담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나, 일본과 「新安保共同宣言」을 채택하여 일본 자위대에게 활동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해 준 것도 지역 동맹국과의 협조하에 동북아지역 질서를 유지해 나가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클린턴 행정부가 기존의 양자동맹 이외에도 지역국들과의 多者安保對話를 통하여 동북아지역의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

3) 1994년 10월 미국은 북한과의 핵합의를 달성한 이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결성하였는 바, 북한에 경수로 건설을 지원할 때에도 대부분의 경비를 한국과 일본에게 부담시키려 하고 있다.

려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안보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는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냉전시대 일본은 안보면에서 미국의 예속하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독자적인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平和憲法의 제약으로 일본 자위대는 일본 본토와 영해 이외의 지역에서 어떠한 군사행동도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걸프전 당시 일본이 막대한 비율의 전쟁분담금을 제공하고도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자 일본내에서 정치·군사적 역할증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일본이 축적한 세계 2위의 경제력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지렛대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는 정부레벨의 차관과 민간기업의 투자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발언권을 높여주는 카드가 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전쟁배상금 규모도 북·일 수교교섭 과정에서 북한의 유연한 태도를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제침체와 중국의 부상은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를 용인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과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의 성공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1995년 중국은 국민총생산액을 기준으로 할 때 6,690억달러로서 세계 8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심지어 1993년 세계은행은 구매력평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중국이 이미 세계 3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하였고, 2010년에는 미국과 일본을 초월하여 세계 최대 경

제대국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제시하였다.⁴⁾ 이러한 중국의 경제력 증강은 중국으로 하여금 군사 무기·장비의 現代化 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대외관계에서 보다 강력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으로 북방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이 해소됨으로써 중국은 보다 유리한 안보환경하에서 동북아시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되었다. 1980년대까지 中國은 소련의 군사위협에 직면하여 美國 및 日本과의 전략적 협력을 필요로 하였는바, 對미·일관계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고 군사적 교류를 증대함으로써 중국은 과거 중·소 국경선 지역에 집중하였던 군사력을 감축할 수 있게 되고 미국과 일본 등 해양세력에 대해 자국의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가운데 지역안보 문제에 대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과거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던 러시아는 대내문제로 지역문제에 직접 개입하여 발언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활동범위가 과거에 비해 제한되고 1961년 이래 북한과 유지해 오던 軍事同盟條約도 1996년 9월 10일부로 폐기되었다.⁵⁾ 최근 러시아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족주의 추세와 좌파세력의 부상으로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

4) Susumu Awanohara and Lincoln Kaye, "Number Game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ly 15, 1993, p. 74.

5) 러·북간 군사동맹조약 폐기문제에 대해서는 여인곤,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 폐기의 의미와 평가」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 7~19 참조.

복원을 모색하는 한편, 자국의 참여를 배제하였다는 이유로 한국과 미국이 제안한 4자회담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등 동북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회복을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대외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대내외 여건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바, 당분간 동북아시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이 동북아 지역내 강대국간 勢力均衡이 변화됨에 따라서 역내국가들의 독자적 외교영역이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은 러시아 및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여 이들 북방지역 국가와 접촉을 확대하고 있으며,⁶⁾ 미국과 평시작전권 환원에 합의하고 駐韓美軍地位協定 개정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또한 북한도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남북한이 과거 적대관계에 있었던 강대국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은 상당부분 탈냉전의 여파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역내질서의 多極化도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역내질서의 다극화가 평등한 국가관계를 촉진시키고 국가간 관계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동북아시아 질서의 다극화 추세는 역내국가들로 하여금 기존의 양자간 동맹관계만으로 역내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 하고, 多者間 安保協力の 필요성을 절감하도록 하고 있다.

6) 특히 한국은 중국과 정치·안보 차원에서 협력관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우려를 자아내는 요인이 되고 있다. Robert G. Sutter, "Korea: Improved South Korean-Chinese Relations - Motives and Implications," 「연합통신」, 1996. 3. 2, pp. 英 12~15.

일부 국가는 이미 냉전시기부터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지만, 역내국가들로부터 광범한 호응을 얻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등에 의해서 끊이지 않고 제의되어 온 多者安保協力 구상은 이미 상당한 논의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 당시인 1991년 11월 베이커 국무장관을 통하여 남북한과 주변 4국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⁷⁾ 베이커 당시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위협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반도 주변 4국이 「2+4」 형식의 협의체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남북대화 지원 등 한반도 긴장완화를 동 협의체의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은 도쿄에서 「新太平洋共同體」 구상을 밝혔는 바, 이는 미국이 경제면에서는 「亞·太經濟協議體」(APEC)를 통하여, 그리고 안보면에서는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형성을 통하여 역내 군비경쟁을 억제하고 각국간 신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안정을 유지한다는 정책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⁸⁾ 미국은 기존의 양자관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역내 국가들과의 다자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이미 1988년 「東北亞 6개국 平和協議會」 창설을 통하여 미·소 대립완화, 일·소간 영토분쟁 해결, 중·소화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 등 지역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고, 1993년 5월 한승주 외무장관을 통하여 동북아지역에서 「小유럽安保

7) 「한겨레신문」, 1991. 11. 9.

8) Michael Richardson, "Clinton, With Eye on Trade, Calls for a Pacific Rim Summit,"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ly 9, 1993.

協力會議」(mini-CSCE) 형식의 안보협력체를 추진하여 역내에서 군비를 통제하고 국가간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⁹⁾ 한국은 동북아 역내국가간 多者安보對話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남북한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전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의존해 왔던 일본은 냉전종식으로 역내 안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 다자간 안보 대화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미야자와 일본 수상은 1992년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역내 안전보장을 위한 정치적 대화의 틀을 구축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 일본은 역내 다자안보 대화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자국이 軍事大國化를 추구하려 한다는 주변국들의 우려를 완화하는 동시에 역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현재 동북아지역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자안보협력 논의로서는 「東北亞協力對話」(NEACD)가 있다. NEACD는 1993년 10월 미국 무부 지원아래 샌디에고대학 주최로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현재까지 5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미·일·중·러 및 남북한의 외무부와 국방부 관리와 민간학자들이 참여하는 民官(two-track)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아직까지는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개진하고 역내국가간 안보정책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증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역내국

9) 한승주, “한국 신외교의 기초,” 한국외교협회 기초연설문(1993. 5. 31); 홍규덕,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체 형성전망과 대응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54~58.

가들의 미온적인 태도, 특히 중국이 동 회의를 정부차원의 제도화된 협의체로 격상시키는데 반대하고 북한이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NEACD가 OSCE와 같은 수준으로 제도화 되지는 못하고 있다.

나. 經濟的 相互依存度 深化

동북아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경제성장 속도가 빠른 지역의 하나로써 역내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냉전종식 이후 미국은 대내경제문제 해결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경제대국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을 이용하여 亞·太지역에서 경제주도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고, 중국은 改革·開放政策을 통하여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있다.¹⁰⁾ 각종 대내 문제에 직면해 있는 러시아도 경제회복에 최우선적인 비중을 두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세계 마지막 폐쇄국가로 남아있는 북한도 나진·선봉지역 개발 등 제한적인 개방을 통하여 침체된 경제를 회생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동북아 역내국가들의 경제발전은 상호간 經濟交流 확대를 유도하고 국가간 거리를 단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한·중·일 등 동북아 3국과 매년 2,000억달러를 넘는 교역을 하고 있고, 이들 3국 모두가 미국의 10대 교역국에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대외무역에서 미·중·한국 등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10) 특히 중국은 1990년대 들어 계속 두자리수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1995년에도 10.2%의 성장율을 기록하였다. 國家統計局, “1995年經濟形勢與1996年趨勢展望,” 「人民日報」, 1996. 3. 1.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만큼 높다. 대외의존적 경제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도 이들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교류·협력을 무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¹¹⁾

역내국가들의 경제가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최근 세계 경제가 지역주의화 및 집단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북아 국가간의 상호 經濟依存度는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한국과 일본은 자원빈국으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고, 産業構造 高度化 과정에서 勞動集約産業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미국·일본·한국의 자본 및 기술도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은 韓·中·日 등 동북아시아의 시장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탈냉전기 국가간 군사경쟁이 경제경쟁으로 대체되고 세계 경제가 집단화 및 지역주의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동북아시아 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유럽共同體」(EC)는 1992년말 이미 상품과 노동력,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이동을 허용하는 통일시장을 이룩하였고, 1993년 11월 「마스트리히트 條約」 체결을 계기로 1994년을 기해 유럽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게 되었다. 1993년말 북미지역에서도 이에 대항하기 위한 「북미自由貿易地帶」(NAFTA)가 창설되었으며, 아·태지역에서도 APEC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집단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¹²⁾ 세계적 차원에서

11) 동북아 역내국가간 무역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1980년의 11.9%에서 1985년에는 14.7%, 1991년에는 15.8%로 증가되어 왔다. 김규륜, 「동북아 경제협력의 발전방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 20 참조.

12) 王和興, “世界經濟區域集團化的新發展及問題,” 「國際問題研究」, 1993年 第4期 (1993. 10), pp. 32~39.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지역경제 집단화 추세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역외무역에 장애가 되는 측면이 있는 바,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역내국가들과의 상호 경제교류 증대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동북아시아에서는 「東北亞經濟圈」, 「黃海經濟圈」, 「環渤海經濟圈」, 「環日本海經濟圈」 등 지역경제 집단화 구상이 제시되고 있다.

13)

동북아시아 국가간의 경제의존도 심화는 소위 「自然經濟地帶」(NET)라는 개념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¹⁴⁾ 특히 韓·中·日 3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서 동해를 사이에 두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동북 3개성이 하나의 경제지대로 형성되고 있으며, 황해를 사이에 두고 한국의 서부와 중국의 동부 그리고 일본이 하나의 긴밀한 경제지대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상호 경제의존도 심화 현상은 APEC의 貿易自由化를 촉진시키는데 뿐만 아니라, 지역 안정을 유지시키는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¹⁵⁾

13) 김명선, “환발해경제권에 대한 전망: 발전전망과 협력모델의 연구,” 정영록 편, 「환발해만 경제협력강화 방안 모색」(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pp. 56~71.

14) 「자연경제지대」(NET)의 개념에 대해서는 Jane Khanna and Chang-jae Lee, “Northeast Asia in an Era of Change: Opportunity and Challenges for Economic Cooperation in the Yellow Sea,” Jane Khanna and Chang-jae Lee, (ed.),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Challenges To The Nation-State: Economic Cooperation in the Yellow Rim* (Seoul: Pacific Forum CSIS/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996), pp. 1~2.

15) 미국과 일본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개입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것도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 심화를 통하여 중국을 지역 안정유지 세력으로 길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계속 부여해 주고 있고, 일본도 중국에 대한 정부차관 제공을 통하여 중국내 개

2. 潛在的 葛藤要因

가. 強大國間 利害對立

동북아시아 강대국간의 관계에서 美·日, 美·中, 中·日 및 中·러관계가 향후 동북아 안보질서의 향배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국가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역 강대국간 이해대립적 측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미·일간에 있어서 안보적 차원에서는 「新安保共同宣言」 채택 등 雙務間 安保協議로 인하여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나, 경제면에서는 마찰을 빚고 있다. 미국이 대내경제 문제를 최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가 감소되지 않고 계속 증가함으로써 미·일간 경제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일본은 아직도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국으로 남아 있고, 미국과 일본의 교역 형태를 감안할 때 미·일간 무역불균형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脫冷戰時代 국가간의 경쟁이 군사부문에서 경제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일간의 경제마찰은 미·일관계의 진일보한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일은 「包括 經濟 協議」를 통하여 무역마찰을 완화시켜 나가고 있으나, 미국산 자동차의 대일 수출을 비롯한 일본내 市場開放 확대문제 등이 양국간 통상마찰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미·일간의 경제마찰은 다자경제기구내의 활동을 통해서도 발견되

혁·개방세력의 입지를 강화시켜주려 하고 있다.

고 있다. 미국은 APEC을 자국의 주도하에 점차 정치·안보적 협력기구로 발전시키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아시아와 태평양 연안 국가들간에 정치·경제·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교류·접촉 증대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지역적 정치·안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94년 11월 미국이 APEC 지도자회의를 주재하여 아·태지역 국가간의 신뢰구축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것은 미국의 의도를 잘 나타내 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일본은 APEC을 정치·안보적 차원으로 발전시키려는 미국의 정책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APEC이 정치·안보적 차원으로까지 발전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이 주장하는 아·태 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지 않다.¹⁶⁾

안보적 차원에서 미·일간에는 몇가지 잠재적 긴장요인을 가지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保守 右翼勢力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있어서 일본이 미국의 방위 우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내 동향은 세계 제3위의 방위예산과 1995년 「新防衛計劃大綱」 확정 등을 통한 군사역할 증대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미·중간에도 대만문제, 중국내 인권문제, 중국의 대외 군사무기 수출문제 및 무역역조문제 등으로 인하여 첨예한 대립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소련붕괴 이후 미국이 중국과의 戰略的 協力關係를 강화할 필요성이 감소함으로써 냉전시대에 미·중간에 잠재되어 있었던 갈등요인들이 일시에 분출되고 있다. 미·중간에 전개되고 있는 갈등관계는 소련붕괴 이후 중국이 축적된 경제력을 군사부문으로 전이

16) 庶雨, “世紀之交的多極化趨勢,” 「現代國際關係」, 1996年 第4期 (1996. 4), p. 3.

시켜 아시아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 측면이 많다. 따라서 미·중간의 갈등은 구조적으로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만문제는 미·중관계를 긴장시키는 핵심적인 사안이 되고 있다. 미국은 1994년 9월 對대만 관계격상 정책을 채택하여 워싱턴 주재 대만대표부의 명칭을 기존의 「北美事務協調委員會」에서 「駐美 臺北經濟文化代表處」로 변경하도록 허용하고 대만 관리의 미국 방문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¹⁷⁾ 또한 미국 의회가 중심이 되어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적극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95년 6월에는 비록 사적인 형식을 띤 것이었으나, 미국은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李登輝 대만 총통의 방미를 허용하였다. 이등휘 총통의 방미는 1979년 미국과 대만관계 단절 이후 대만 지도자의 최초 방미라는 점에서 미·중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은 미국의 對대만 관계격상 정책에 대해 불만을 품고 주미 대사를 소환하고 고위지도자 교환방문 계획을 취소하는 등 대미 강경 자세를 취하였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과의 관계를 격상시키려는 궁극적인 의도가 중국을 견제·봉쇄하려는데 있다고 판단하고 미국의 정책을 원천적으로 저지하려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대만의 국제공간 확대 노력을 차단하기 위하여 대만해협에 대해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초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만문제에 대한 중국의 강경

17) 楊力宇, “美中美台關係面臨新形勢,” 「爭鳴」, 1994年 12月號(1994.12), pp. 62~63; Patrick E. Tyler, “China Assails Expanded U.S. Ties to Taiwan,”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September 9, 1994.

정책은 중국 내부정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은 현재 권력 승계의 과도기에 처하여 民族主義와 愛國主義를 국가통합의 이데올로기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지도자들은 대만의 대만화와 대만문제의 국제화를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1996년 5월 20일 취임사에서 이등휘 총통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천명하지 않고 實用主義 外交를 통해 국제지위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 바,¹⁸⁾ 앞으로도 대만 헌정사상 최초의 민선 총통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유엔가입 등 국제활동공간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대만의 국제지위 확대정책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중·대만간 군사위기가 고조될 경우 미국이 다시 대만해협 인근지역에 군사력을 파견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내 인권문제와 중국의 군사력 증강문제도 미·중관계에 긴장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은 1991년부터 6년동안 계속 「유엔 인권위원회」에 중국 인권문제를 상정하여 중국내 반인권적 사례를 국제문제화하려 하였으며, 최혜국대우 연장을 중국내 인권상황 개선과 연계시키려 하였다.¹⁹⁾ 또한 미국 의회는 티벳에 대사를 파견하여 티벳 주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클린턴 대통령은 1995년 티벳 소수민족 지도자인 달레이 라마를 접견함으로써 중국을 자극하였다. 중국은 중국내 인권문제와 티벳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중국의 발전을 견제하고 중국의 안정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18) 李登輝 총통의 취임사 전문은 「中國時報」, 1996. 5. 20 참조.

19) 클린턴 행정부는 1994년 5월 인권문제와 최혜국대우 연장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는 판단하에 대중 최혜국대우 연장 여부 결정시 중국내 인권문제를 더 이상 결부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Bill Clinton, "To Advance the Common Interest in a More Open Chin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ne 1, 1994.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²⁰⁾ 중국은 인권문제와 티벳문제는 어디까지나 중국의 내정문제이며, 중국과 같은 발전도상국에서는 자유권보다는 생존권과 발전권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대량살상무기를 이란과 파키스탄 등 잠재위협국에 수출하고 강대국간 핵실험 유예체제를 위협하면서 핵실험을 지속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경제력을 군사력 증강에 집중 투입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적 지위를 확보하려 할지 모른다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1993년 이래 ‘中國威脅論’을 강조하고, 1994년 헌팅턴 교수가 기독교문명권과 이슬람·유교 문명권간의 ‘文明衝突論’을 제기한 것도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심리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핵관련 기술을 외국에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평화적 목적의 핵실험 주장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²¹⁾ 중국의 경제력이 신장될수록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관련 미·중간 갈등이 지속·강화될 소지가 있다.

미·중은 경제부문에서도 마찰을 보이고 있다. 1995년 미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350억 달러에 이르는 적자를 보았으며, 중국에서 미국의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의 반대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 무역관행을 철폐하고, 중국내 불법복제품 공장을 봉쇄하며, 국제규범에 따라 시장개방조치를 과감하게 단

20) 任言實, “借人權反華走入死胡同,” 「人民日報」, 1996. 4. 25.

21) “China will Escape U.S. Sanctions over Nuclear Sale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y 11~12, 1996; Babara Crossette, “China Drops Condition to Nuclear Test Ban Treaty,”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ne 7, 1996.

행해야만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중은 상호 상대방과의 경제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마찰을 피하기 위해 타협을 모색할 것이지만, 두번째로 많은 교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市場開放 압력은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1978년 鄧小平의 방일시 합의된 원칙에 따라 가능한 한 현안은 덮어두고 공동의 이익을 모색함으로써 중·일간에는 협력관계가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중국은 군사력을 증강하고 남사군도를 비롯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패권적 성향의 대외정책을 전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본은 1995년 「防衛計劃大綱」을 확정하여 기존의 「專守防衛」정책을 「地域防衛」정책으로 전환하는 한편 1996년 미국과 「新安保共同宣言」을 채택하여 대미 안보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중·일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과거사문제와 대만문제도 중·일관계에 긴장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1992년 3월 역내국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영해법을 통과시켜 남사군도와 서사군도 그리고 조어대열도 등을 일방적으로 자국령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정책은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아 海路安全을 중시하는 일본에게 잠재적으로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조어대열도는 19세기 중반부터 현재까지 일본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領海法 制定은 일본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1996년 조어대열도 부근에 석유탐사선을 파견하여 석유시추 작업을 기도하는 한편, 조어대열도의 공동개발을 일본측에 요구하고 있다.²²⁾ 향후 중국이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등 해

군력을 강화하게 될 경우, 조어대열도 영유권문제와 海路 안전문제 등으로 중·일간 마찰이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문제도 양국관계에 마찰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1995년 11월 통과된 일본의 「新防衛計劃大綱」이 세계군사대국을 지향하고 아·태지역에서 政治大國化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일본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이 자위대의 방위범위를 일본 본토에서 주변지역으로 확대하고, 무력사용의 조건을 적국의 침략에서 일본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는 상황으로 넓히는 등 군사전략을 공격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이 세계에서 세번째로 많은 방위예산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의 성격변화는 직접 역내 안보질서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²²⁾ 특히 중국은 1996년 4월 미·일간 「新安保共同宣言」을 통한 안보협력관계 강화추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아시아의 질서를 주도함으로써 새로운 「大東亞共榮圈」 창설을 기도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이 기본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역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가져올 심각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이 변경방어의 소극적 군사전략을 근해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積極的 防禦戰略으로 군사전략을 전환하고 1989년 이래 매년 10% 이상씩 군사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점을 경계하고 있

22) 「人民日報」, 1996. 8. 30.

23) 陳鋒, “日本邁向政治和軍事大國的文件,” 「瞭望」, 1996年 第4期 (1996. 1. 22), pp. 45~46.

다. 특히 일본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위협과 중국의 핵실험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일본의 海路安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1995년 이등휘 총통 방미 이후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위협 정책이 완화되도록 노력해 왔다. 또한 일본은 1995년 8월 중국이 핵실험 자제 요청을 거부하고 핵탄두의 소형화와 핵무기 운반수단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하여 핵실험을 재개하자 대중 무상원조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엔차관 축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²⁴⁾

과거사문제는 여전히 중·일간 신뢰회복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내에서 보수 우익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중국에서도 강택민 지도부가 국민과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주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강경입장을 고수함으로써 과거사문제가 중·일간 마찰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중국은 일부 일본 관리들의 군국주의적 발언이 중·일간 신뢰관계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일본이 과거사를 진정으로 반성하도록 촉구하고 있다.²⁵⁾ 특히 1995년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 방한시 중국은 한국과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여 일본 보수우익세력의 과거사 인식을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중·일간의 정치·안보적 마찰은 양국이 역내 질서재편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21세기 미국이 아시아에서 미군을 철수하게 될 경우 중·

24) 「文匯報」, 1995. 9. 20.

25) “中日兩國外長舉行會談,” 「人民日報」, 1996. 4. 1; “外交部發言人發表評論,” 「人民日報」, 1996. 6. 7.

일간 지역 패권확보를 위한 경쟁은 현실로 부각될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상호 상대방을 21세기 최대 적대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넷째, 최근 중·러관계가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해지고 있으나, 1860년 「네르친스크 조약」과 1872년 「북경 조약」 이후 제기되어온 영토 문제와 러시아 극동지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문제 등이 중·러관계 발전에 제약이 되고 있다.²⁶⁾ 또한 러시아는 중국의 국력신장이 러시아 자신의 안전에 위협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과도한 접근은 서방으로부터의 경제협력확보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중국에 대한 첨단 군사무기수출을 자제하고, 제삼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도 대내경제 발전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등 서방국가들을 자극하면서까지 러시아와의 戰略的 協力을 모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중·러 양국간 역사적 불신을 감안할 때 중국의 국력이 대폭 증강되고 러시아가 대만과의 關係改善政策을 추진할 경우, 중·러관계가 긴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分斷國問題

소련 붕괴이후 유럽지역에서는 냉전체제가 완전히 종식되었으나,

26) V. Portyakov, "Are the Chinese Coming? Migration Processes in Russia's Far East," *International Affairs*, Vol. 42, No. 1 (January-February 1996), pp. 132~140.

동북아시아에서는 냉전시대의 잔재가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유럽에 비해 문화적, 이념적 다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념의 제약을 덜 받아왔다. 따라서 미·소간 냉전적 대립의 종식이 동북아 역내 질서변화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 밖에 없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사회주의체제가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중국과 한반도의 분단상태 지속은 동북아시아 국가간 신뢰관계회복을 어렵게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은 1991년 이래 양국의 半官半民 조직인 「海峽兩岸關係協會」(海協會)와 「海峽兩岸交流基金會」(海基會)를 통하여 접촉해 왔으며, 1993년에는 싱가포르에서 양 기구의 대표가 회합하여 회담의 제도화문제 등을 논의하였다.²⁷⁾ 이를 계기로 중국과 대만간 접촉이 비정치적 차원에서 공식적인 정치교류의 단계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간의 半공식적 교류는 1995년 6월 이등휘 총통의 미국방문 이후 단절상태에 놓여 있다. 중·대만간에는 경제·문화적 차원의 교류가 증가되어 실질적으로는 분단의 의미가 감소되고 있으나, 대만의 국제지위강화 노력과 대만 내 독립 움직임은 중·대만간 긴장완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1996년 3월 대만 총통선거를 전후하여 대만해협에서 전개된 군사긴장은 중·대만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질서를 긴장

27) 중국과 대만은 1993년 4월 27일 싱가포르에서 최초로 반관반민 형식의 접촉을 통해 4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Hungdah Chiu, "The Koo-Wang Talks and the Prospect of Building Constructive and Stable Relations Across the Taiwan Straits," *Issues and Studies*, Vol. 29, No. 8 (August 1993), pp. 1~19 참조.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만의 지리적 위치와 정치·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대만문제는 중국과 미·일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동아시아 역내국가들의 해로안전에도 치명적인 위협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대만에서 世代交替와 政治民主化가 심화될수록 대만의 독립문제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만문제는 동북아질서 안정을 저해하는 잠재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반도문제도 동북아정세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다. 北韓은 經濟難과 국제고립으로 인한 체제위기를 핵무기개발과 정전체제 무력화 기도 등 ‘벼랑끝 外交’를 통하여 해소하려 하고 있다. 1994년 10월 北·美간 핵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또한 북한은 현재 불안정하나마 남북한간 정전체제를 유지시켜 주고 있는 停戰協定을 무시하고 판문점 비무장지역에 무장력을 동원함으로써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1994년 김일성 사망이후 현재까지 남북한간에는 공식적 차원의 접촉과 교류가 단절된 상태이고 관계진전의 움직임을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996년 4월 16일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제의한 「4者會談」도 북한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인하여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정부와의 관계진전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미국 및 일본과만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대북정책을 흡수통일을 위한 음모로 간주하고 남한과의 접촉을 꺼리고 있다.

한반도는 주변 4국의 이해가 직간접적으로 교차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정세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의 核擴散 방지정책에 전면 저촉되는 것이므로 북한

을 포용하면서 핵개발을 중단시키는 한편, 「4자회담」을 통하여 한반도내 긴장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대북정책이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전반적인 동아시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간주하고, 북한과의 관계복원정책을 적극화하는 한편, 한국과의 관계발전을 통하여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 속도를 완화시키려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에서 남북한간 긴장국면 지속은 한반도에 대한 중·미간 영향력 확대 경쟁을 유도하는 등 역내 질서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 領土紛爭

북방 4개도서 반환문제, 중·러간 변경문제, 조어대열도 영유권문제 및 韓·中·日間 어업문제 등도 동북아질서 안정을 저해하는 잠재요인이 되고 있다. 이들 영토문제는 탈냉전시기 동북아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民族主義 추세로 인하여 해결될 기미를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련붕괴 이후 일본과 러시아간 북방 4개도서 반환문제가 심도있게 제기되었으나, 러시아내 민족주의세력의 반대로 인하여 북방 4개도서 반환문제는 담보상태에 놓여 있다. 탈냉전기 정치·군사 역할중대를 기도하고 있는 일본은 북방 4개도서 반환을 위하여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전개해 왔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하여 공식·비공식 경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북방 4개도서 반환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강경 입장을 완화시키려 노력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방 4개도서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과 이것이 대내외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

효과를 우려하여 강경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1996년 6월 러시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러시아 국민들의 민족주의 추세를 감안 할 때, 북방 4개도서 반환협상의 조기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1991년 「東部國境線協定」과 1994년 「西部國境線協定」 그리고 1996년 「上海協定」을 통하여 대부분의 국경선을 확정 지었으나, 우수리강 黑割子島 지역의 일부 문제는 아직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국민간 역사적 불신감을 고려할 때, 이미 합의된 국경협정의 이행문제도 아직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1994년 러시아 극동지역 출신 의회대표들 사이에서 중·러 국경선 협정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국경선협정의 비준거부운동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 바 있다.²⁸⁾

중·일간의 釣魚臺列島 영유권문제도 동북아지역 정세에 잠재적 긴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78년 등소평 방일시 중국은 조어대열도 영유권 분쟁을 덮어두고 후대에 맡긴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조어대열도 영유권문제가 표면화 되지 않고 잠재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탈냉전기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중국과 일본의 국력이 신장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 확대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동북아 역내정세는 중·일 양국으로 하여금 海洋權益 確保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하고, 조어대열도 영유권문제에 대한 양국의 관심을 배가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내 보수 우익세력의 등장과 중국내 권력승계 과정에

28) 柏樺, “中俄關係榛新階段,” 「文匯報」, 1995. 6. 28.

서 나타나고 있는 民族主義·愛國主義化 추세는 양국으로 하여금 국가주권문제에 대해 타협적 태도를 견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어대열도 영유권문제가 중·일관계 진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제기될 수 있다. 1996년 7월 일본의 우익단체가 조어대열도에 등대를 설치한 후 중·일간은 영토주권문제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한·중·일간 어업권문제도 동북아지역의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1996년 5월 중국이 자국에 유리하게 영해기선을 확정·발표한 이후 한·중·일간의 어업권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일본도 200해리 「排他的 經濟水域」(EEZ) 설정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있고, 한국도 유엔해양법에 기초하여 경제수역을 설정하였다. 한·중·일은 대외의존적 경제발전정책을 채택하고 있어서 海洋權益을 중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영해확정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일 삼국은 200해리 EEZ 선포에 따르는 분쟁가능성을 사전 대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라. 軍備競爭

탈냉전기 동북아지역 정세의 유동성으로 인하여 역내국가간 군비경쟁 추세가 완화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은 탈냉전기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으며, 남북한과 대만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동북아 역내 국가의 군사비 추이

()는 對GNP비율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미 국(백만달러)	304,085	306,170	280,292	305,141	297,637	286,366
(%)	(5.8)	(5.5)	(4.9)	(5.1)	(4.7)	
일 본(10억엔)	3,864.9	4,099.4	4,329.3	4,518.0	4,546.3	4,648.3
(%)	(1.0)	(1.0)	(1.0)	(1.0)	(1.0)	
중국(10억 유안)	25.1	29.0	33.0	37.8	42.6	52.4
(%)	(1.6)	(1.6)	(1.6)	(1.6)	(1.4)	
러시아(1조루블)	-	-	-	-	10,090	40,626
(%)						
남 한(10억원)	5,921	6,665	7,892	8,709	9,040	10,390
(%)	(4.0)	(3.7)	(3.7)	(3.6)	(3.4)	
북 한(백만원)	4,060	4,314	4,466	4,582	4,692	4,800
(%)						

출처 : SIPRI Yearbook 1995 :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p. 434~451.

우선 중국은 경제발전을 통하여 축적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러시아와 이스라엘 등으로부터 첨단군사무기와 장비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걸프전 이후 중국은 현대전에서 첨단군사무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사장비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와의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對外依存的 經濟發展政策의 채택에 따라서 해양권익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지상군보다 해군력과 공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이 海軍力과 空軍力의 尖端化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또다른 이유는 대만문제와 남사군도 영유권문제 등 국가주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현재 강택민체제로의 이행기에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바, 국방예산이 계속 증대되고 군사력증강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핵실험 유예체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핵실험을 계속 강행하고 있는 사실은 군사력 증강에 대한 중국의 열의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²⁹⁾

걸프전 당시 막대한 분담금을 지불하고도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한 일본은 현재 동아시아지역에서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95년 11월 일본은 「新防衛計劃大綱」을 확정하여 군사전략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專守防衛’에서 ‘地域防衛’ 개념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³⁰⁾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1996년 4월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을 통하여 보다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다. 일본 자위대가 향후 동아시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일본은 현재 국민총생산의 1%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방위예산을 지출하고 있지만 일본 自衛隊의 방위비지출은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제력과 과학기술수준을 감안할 때, 향후 일본의 군사력 증강의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일본이 동아시아 국가를 침략한 경험이 있고, 현재도 일본의 우익보수 세력들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29) 중국은 1996년에도 두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하여 핵탄두의 소형화와 핵탄두 운반체제의 정밀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체결을 위한 제3차 회의 개최 직전인 1996년 7월 29일 45번째 핵실험을 실시하고, 당분간 핵실험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中華人民共和國政府聲明,” 「人民日報」, 1996. 7. 30.

30) 陳鋒, “日本邁向政治和軍事大國的文件,” p. 45.

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는 동북아질서 안정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남북한간에도 軍備競爭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100만을 넘는 병력을 유지하고 있고, 남한도 60만에 달하는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추진한 바 있으며, 「노동 1호」와 「노동 2호」 미사일을 개발하여 실용화 단계에 있다. 남북한간 군비경쟁은 한반도 긴장상황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동북아지역은 타지역과 달리 실질 군사비가 증가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다. 특히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고, 역내국가간 상호불신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군비경쟁이 더욱 심화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군비경쟁에 따른 긴장국면을 완화하고 지역국가간 신뢰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역내국가들의 군사훈련, 군사예산 및 군사력에 대한 투명성 제고노력이 필요하다.

마. 中國과 北韓의 體制變化

1990년대 들어 소련과 동유럽에서는 사회주의국가들이 해체되었으나, 동북아지역의 사회주의국가인 중국과 북한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社會主義路線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 사회주의국가들은 현재 최고 지도자 사망에 대비해야 하는 정치적 과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측이 극히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중국은 1978년 이래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하여 급속한 경제발전

을 이룩함으로써 체제안정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특히 1992년 14차 당대회에서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를 도입하기로 확정한 이후, 중국은 형식적으로 사회주의체제를 견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장점을 대폭 도입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이념적 제약에서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

그러나 중국 사회주의체제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 있다. 최고 실권자 등소평 사망 이후에도 중국이 정치적 안정하에 경제발전을 이룩해 나갈 수 있을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중국의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진척될 경우, 중국 국민들의 의식변화가 체제변화를 불가피하게 유도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경제발전의 부작용으로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빈부격차, 公職者 不正 腐敗, 인플레이션 악화 및 실업자 증가 등 제반 요인들이 공산당과 현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자극하게 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12억에 달하는 인구를 가진 거대한 국가라는 점에서 중국의 체제혼란이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실로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후 2년을 넘긴 현재까지도 최고지도자를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에 있다. 김정일은 대내 경제난과 대외 고립에 따른 체제위기를 김일성 유훈통치를 통하여 극복하고자 하고 있으며, 군부의 지지를 통한 兵營統治를 지속하고 있다. 1995년 수해와 경제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북한은 食糧難과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등 총체적인 經濟難에 처해 있다. 북한의 공장 가동율은 50%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은 아사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경

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경제난을 조기에 극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위기상황은 북한의 비이성적 행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즉, 북한은 체제위기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기 위하여 제한적인 對南軍事挑發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第Ⅲ章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에 대한 周邊國의 立場

1. 美國

가. 東北亞 安保情勢 認識

미국은 냉전의 종식으로 동북아지역을 포함한 亞·太地域이 안정 및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으나, 양자 동맹관계의 이완과 북한의 위협,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 지역 불안정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향후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역내국가의 정치적 불안과 혼란이 야기되어 이것이 지역안정과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정세인식하에 동 지역에서 미국의 사활적 이해를 지키기 위하여 주둔미군의 단계적 감축을 골자로 하는 기존의 「東아시아 戰略構想 I, II」(EASI I, II)를 폐기하고, 역내 주둔 미군 병력의 현 수준에서의 동결과 이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東亞·太地域 安保戰略」(EASR)을 채택한 바 있다. 본 절은 이러한 미국의 기본적인 동북아 정세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東北亞 平和體制 조성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1) 經濟的 力動性

지난 10년간 동아시아 국가들의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율은 4.7%로 북미지역의 2.7%, 유럽의 2.4% 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

특히 중국은 1990년대 들어 연 12% 이상의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향후 20년간 연 7~8%의 성장을 지속한다면 총 경제규모에 있어서 미국을 능가하리라는 예측이다.³¹⁾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은 이미 1980년을 기점으로 유럽을 능가하는 미국의 최대 무역 시장으로 부상하였으며, 지난 1993년의 경우 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30%를 차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탈냉전 이후 동북아시아에서 경제적 상호의존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역동성이 미국에게 주는 이익을 중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EASR 보고서는 1994년도 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무역량이 4,35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미국인 28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³²⁾ 미국은 이러한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경제적 이해에 주목하여 개입과 확대를 기본으로 하는 EASR을 통해 이 지역의 성장과 번영의 혜택을 역내국가들과 함께 누리고자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이러한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장이 안보에 부담이 되고 있는 측면도 주목하고 있다. 즉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역내국가들 간의 불평등이 확대됨에 따라서 地域勢力構圖가 전환되어 역내 안정과 평화가 급속히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역내 패권장악에 관심이 있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강력해짐에 따라 방위비의 증가를 통한 軍事大國化의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에 대한 안보위협으로 발전될 것

31) 김성한, “미국의 신아태전략과 한반도,” 『정책연구』 119호 (1995년 3호), pp. 110~111.

32)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Feb. 1995), p. 2. 이하 EASR로 略한다.

으로 보고 있다.³³⁾ 따라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동아시아 지역의 성장과 번영의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안보면에서 지속적으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 하고 있다.

(2) 兩者同盟關係의 이완

미국은 미·일관계를 동북아시아의 양자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본은 동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며 貿易相對國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냉전이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불안요소가 잠재하고 있는 이 지역의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미·일 안보동맹체제는 양국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도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지되어야 한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클린턴 미행정부는 EASR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21세기 초까지 현수준의 美軍兵力을 일본에 계속 전진배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미·일동맹의 장래를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이 사라짐으로써 동맹의 근본적인 이유가 불확실해졌으며, 貿易摩擦을 비롯한 미·일간 경제적 대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본내 믿음직한 동반자인 자민당이 절대적인 우위를 상실했으며, 아직 두드러진 현상은 아니지만 일본이 동남아국가들로부터 미국과 동남아 어느 한쪽을 택일

33) EASR, p. 7; 윤현근, “클린턴 행정부의 동아시아지역 정책과 우리의 안보,” 「정책연구」, 121호 (1996년 1호), pp. 46~47.

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이 기존의 미·일관계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³⁴⁾

더욱이 미국은 일본의 軍事大國化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역내국가들의 의구심과 불안을 낳게 하며 불필요한 軍備競爭과 긴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클린턴 행정부가 일본에 기대하는 것은 현재의 자위력을 유지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첨단무기를 구입하고 주일미군에 대한 주둔비용 분담을 증가하는 것이다.³⁵⁾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탈냉전기에 접어들면서 분출되기 시작한 일본의 강한 국제역할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 즉 冷戰終熄 이후 일본의 지도자들은 일본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정치적 역할을 담당하고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러한 일본과의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기존 양자관계의 복원을 위해 일본과 「新安保共同宣言」을 1996년 4월 17일 채택한 바 있다. 「신안보공동선언」은 미·일이 동북아지역의 유사시에 대비하는 방위협력과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도모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선언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신안보공동선언」이 일본의 군사적 팽창욕구를 억제하고 이완된 미·일 양국간 同盟關係를 회복하는데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지는 아직 미지수라 하겠다.

34) Harry Gelman, "An American Perspective on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a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Major Powers and Future Security in Northeast Asia, May 25~26, 1995, Seoul, Korea.

35) 김홍락, 「미국의 대일본정책」, 김덕중 편, 「미국의 동북아정책」 (서울: 세종연구소, 1995), p. 45.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미국에게 북한의 핵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미국은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직접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핵협상과 1995년 6월 13일 팔라렘푸르 경수로협상을 타결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를 일단락지은 바 있다. 그리고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등 미·북간 구체적인 관계개선책도 마련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미·북관계의 개선이 기존의 한·미간 긴밀한 盟邦關係를 훼손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미국은 미·북관계 개선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익과 정책 및 전략 등의 재조정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인식하고 있다. 즉 구소련의 위협이 사라진 상태에서 미·북관계가 개선되면 현재와 같은 미국의 군사안보중심의 대한반도 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³⁶⁾ 한국에 대한 점증되는 미국의 通商壓力, 그리고 방위분담금 증액 압력 등이 탈냉전기 미국의 對한국관계 변화의 하나이다. 따라서 앞으로 상당기간 한·미 동맹관계가 유지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탈냉전기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동북아 및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 증대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수정·조정되고 있는 한 전통적인 한·미관계의 이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3) 中國의 軍事力 增強

미국은 탈냉전 이후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우려하고 있다. 즉 미

36) 전인영, “미국의 한반도정책,” 위의 책, p. 175.

국은 중국이 1990년대에 들어 동북아지역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등 多極化 趨勢를 보임에 따라 역내에서 자국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이 一國兩制에 의한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있으나 무력에 의한 대만통일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안보위협요인이 된다고는 보지 않는다.³⁷⁾ 미국은 다만 여타 역내국가들에게 우려를 불러 일으켜 역내 軍備競爭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이 인접국들에게 위협을 주지 않으면서 자국의 안보 우려를 완화시키도록 하기 위해 ARF 등 지역안보 메카니즘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과의 軍事交流를 통하여 중국의 의도와 실제 능력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나. 東北亞 平和體制에 대한 美國의 立場

주지하는 바와 같이 냉전시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의 지역안보협력체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해 왔다. 즉 미국은 동 지역에서 자신의 우월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兩者同盟關係³⁸⁾가 지역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화되지

37) 신상진·전동진,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40~43.

38)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현재 6개의 양자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바, 이는 일본(1951.9.8), 한국(1953.10.1), 호주(1951.9.1), 필리핀(1951.8.30), 태국(1954.9.8),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안보문제에 관한 한 다자간 지역협력의 논의를 계속 거부하여 왔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지속되었다. 1990년 호주의 헤이든(Bill Hayden) 외무장관과 캐나다의 클라크(Joe Clark) 외무장관은 共同安保(common security)의 개념에 입각하여 동북아를 포함하는 아·태지역에 있어서 군사문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CSCE와 같은 다양한 信賴構築措置의 시행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당시 부시 미행정부의 베이커 국무장관은 동 지역과 유럽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유럽의 안보협력 방식을 아시아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호주와 캐나다가 제안한 공동안보의 논리를 거부한 바 있다.³⁹⁾ 같은 이유에서 미국은 1991년 일본의 나카야마 외상이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의」(ASEAN-PMC)를 아·태지역 안보협력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⁴⁰⁾

그러나 1993년 클린턴 미행정부의 발족과 더불어 미국은 유럽, 동아시아, 중동 등 주요지역에서 미국의 역할과 임무를 재평가하는 한편, 소련의 붕괴와 이에 따른 복합적인 정치·군사·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제반 군사력감축과 유엔을 중심으로

그리고 마셜군도, 미크로네시아, 팔라우(1986.11.4) 등이다.

39) 베이커가 '아시아에서의 헬싱키'(Asian Helsinki)를 반대한 것은, CSCE와 같은 다자안보협의체를 동북아에 적용할 경우 CSCE에서와 같이 소련이 정식 멤버로 참여하여 오래 전부터 추구해 온 동북아지역에서의 해군력 군비통제를 도모할 것이 분명하였고, 미국은 동 지역에서의 월등한 자신의 해군력을 그 같은 군비통제 과정에 종속시키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ndrew Mack and Pauline Kerr, "The Evolving Security Discourse in the Asia-Pacific," *The Washington Quarterly*, 18:1, p. 125.

40)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1. 8. 1.

한 平和維持活動 등을 골자로 한 「개입과 확대」(engagement and enlargement)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대외정책을 수립하면서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필요성을 최초로 주목하기 시작하였다.⁴¹⁾

미국이 「介入과 擴大」를 중심으로 한 신외교전략을 수립하게 된 배경에는 클린턴 미행정부의 냉전종식에 대한 상황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냉전종식이라는 상황은 미국으로 하여금 안보문제에 대한 지역적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 소련이 붕괴한 이후 미국의 안보이해는 특정 초강국의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방어한다기 보다는 미국이 이해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국의 이해에 대한 위협은 특정 지역패권국의 출현, 또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지역적 군비경쟁, 영토적·인종적·종교적·역사적 갈등에 의한 地域紛爭 등이며, 이는 양자동맹관계나 미군의 과다한 해외주둔 보다는 당사국과의 대화와 협력, 정보 공개라는 방법에 의해서 더 효율적으로 대처되거나 봉쇄될 수 있고, 이러한 노력은 지역적 차원의 협력으로 추진될 때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지역의 활발한 지역협력 분위기가 미국으로 하여금

41) 「개입과 확대」로 대표되는 클린턴 미행정부의 신외교정책 기조는 우방국 뿐만 아니라 러시아 및 구공산권 국가들에 대해 시장민주주의(market democracy)를 강화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침략에 단호히 대처함과 동시에 자유화를 지지하며, 인도주의적 개입을 추구함은 물론 그러한 가능성이 큰 지역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외정책의 기초하에 세가지 정책목표로 ① 세계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미국 경제의 지도력 재건, ②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군사력의 준비, ③ 전세계적인 민주주의의 확산과 견고화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The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July 1994.

지역안보대화에 참여하게 만든 점도 있다. 특히 일본은 1990년대 들어 자국의 안보를 일방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변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안보대화를 추진하였다. 1993년 일본의무성 산하 「國際問題研究所」의 마쓰나가 노부오(松永信雄) 이사장은 미국의 「카네기재단」, 러시아의 「世界經濟 및 國際關係研究所」(IMEMO)와 함께 아태 안보문제협의를 위한 「三極會」(Trilateral Forum)의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미국은 1993년 5월 ASEAN-PMC에서 1991년 일본의 나카야마가 제안한 바 있는 PMC 안에서의 안보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선언하였으며, 동년 7월 클린턴 미대통령의 일본 및 한국 방문시 「新太平洋共同體」(New Pacific Community)를 제안하였다. 「신태평양공동체」는 미국의 지역 협력을 포함한 아태지역에 대한 새로운 정책의 기본구상을 담고 있다. 즉 공동의 힘(shared strength), 공동의 번영(shared prosperity), 민주주의에 대한 공동의 책임(shared commitment to democratic values)을 바탕으로 한 「신태평양공동체」구상은 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지역안보공약 준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市場擴大 및 교역신장을 위한 지역환경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⁴²⁾

이러한 「신태평양공동체」선언의 골자는 같은 해 3월 윈스턴 로드(Winston Lord) 미 국무성 동아시아 차관보가 자신의 인준청문회에서 밝힌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구상과 맥을 같이 한다. 당시 로드는 한국, 중국, 일본, ASEAN, 베트남, 캄보디아와의

42) Bill Clinto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Japan Relationship: Dismantling Trade Barriers," A Speech delivered to Students and Faculties of Waseda University, Tokyo, Japan, July 7, 1993.

관계강화 및 현안문제해결 등 6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기초로서 ① APEC의 강화, ② 동아시아에서 기존의 양자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자안보대화 발전, ③ 環境, 난민, 보건, 마약, 핵확산금지, 무기판매 등의 세계적 문제에 대한 지역적 협력강화, ④ 民主主義와 人權促進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4개의 정책목표는 이 지역 국가들과의 지역협력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들이다.

ASEAN-PMC에 대한 미국의 참여에 따라 1994년 7월 제1차 ARF가 소집되어 아·태지역 최초의 정부간 多者安保對話가 출범하게 되었다. 또한 ARF에 대해서 로드는 “동아·태지역 지역체제의 건설은 두개의 제도를 기둥으로 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는 APEC이고 또 다른 하나는 ARF이다”라고 언급하여 미국의 정책이 양자차원 만큼이나 지역협력을 중시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클린턴 미행정부 등장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협력논의에 대한 기본입장은 지난 몇년간 “논의할 수 없다”에서 “활발한 논의가 바람직하다”라는 차원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⁴³⁾

또한 미국은 동 지역내 안보협력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NEACD를 적극 후원하고 있다. 샌디에고대학(U.C. San Diego) 산하 「國際紛爭 및 協力研究所」(Institute for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 주관으로 출범한 Track II차원의 NEACD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대화」(NEASED)의 예비단계

43) 이러한 견해는 Jagdish Bhagwati, “Regionalism versus Multilateralism,” *The World Economy*, Vol. 15, No. 3 (September 1992)에 잘 반영되어 있다.

적 성격을 띤 것으로 준비회의를 포함하여 모두 6차에 걸쳐 개최되었다.⁴⁴⁾

1993년 7월 샌디에고에서 개최된 NEACD 준비회의에는 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서 각각 1명의 정부대표(개인자격으로 참석한 외무부관리)와 1명의 민간학자가 참석하였다. 준비회의의 주요 의제는 같은해 10월 개최될 제1차 NEACD 본회의의 의제를 확정하는 것이었으나, 만장일치를 회의 진행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어 실제로 민감한 문제는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⁴⁵⁾

북한은 1993년 7월의 준비회의 참석이후 본회의에는 계속 불참하고 있다. 북한의 불참은 무엇보다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문제를 남한을 제외한 상태에서 미국과의 양자관계에 의해서 풀어나가려는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북한의 NEACD 참가는 미국과의 상호연락사무소 개설 이후에나 이루어질 전망이다.⁴⁶⁾ 한편 제4차 북경회의에서는 동북아정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다양한 신뢰구축조치들, 즉 군사정보의 공유, 군비통제, 비상통신망 구축 등이 논의되는 진전이 있었다. 이러한 NEACD에 대한 미국의 열의로 볼 때 미국이 지역내 多者間 安保協力を 정책대안으로 신중

44) NEACD는 준비회의(93.7, 미국 샌디에고), 제1차 회의(93.10, 미국 샌디에고), 제2차 회의(94.5, 일본 동경), 제3차 회의(95.4, 러시아 모스크바), 제4차 회의(96.1, 중국 북경), 그리고 제5차 회의(96.9, 서울) 순으로 각각 개최되었다.

45) 예를 들면 국내정치 문제와 인권문제는 중국과 북한의 반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으며, 미군문제와 합동군사훈련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반대로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정민,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체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지역연구논총』, 제5집(1993), pp. 227~228.

46) 필자가 1996년 6월 14일 Susan Shirk(IGCC 소장)박사와 한 면담에 의하면, NEACD를 주관하고 있는 IGCC는 북한의 참가를 계속 중용하고 있으며, 북한의 참가가 대화진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역내 다자간안보협력에 대한 이러한 정책적 관심은 국방성이 동·태지역에 대한 정책을 집약하여 1995년 2월 의회에 제출한 EASR보고서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대외정책의 방향을 밝힌 「國家安保戰略報告書: 개입과 확대」(Report of National Security Strategy: Engagement and Enlargement)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냉전시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미국은 EASR보고서에서 부시 행정부가 2000년까지 동아시아 주둔미군의 3단계 감축을 확정된 EASI I, II를 폐기시키고, 주한미군을 포함하여 현재 약 10만의 동아시아 주둔병력을 적어도 2000년까지 그대로 유지함과 동시에 경제, 외교, 군사 등 전분야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參與 및 擴大政策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EASR보고서는 미국이 기존의 한·미, 미·일 등 안보동맹관계에 따른 전진방위 전략을 전제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다자간 안보계획」(new multilateral security initiatives)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미국은 미군이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예측과 1992년 12월 미군의 필리핀기지로부터의 철수 등에서 연유된 지역안보 불확실성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점과 지역경제의 역동성에 기대할 것이 있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하여 協力安保(cooperative security)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지역안보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⁴⁷⁾

47) EASR보고서는 이러한 협력안보의 관점에서 ARF, NEACD, 그리고 미·북간 제네바 핵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한·미·일 정책협회가 동북아 안보대화체제 유

EASR보고서에 나타난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에 관한 클린턴 미행정부의 입장은 다음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첫째, 클린턴 미행정부는 동아시아지역내의 많은 새로운 문제들을 다자간 대화체제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탈냉전 이후 이 지역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군사력을 감축함으로써 야기된 불확실성과 역내국가간의 상호불신이 상승작용하여 군비경쟁이 가중될 수 있는데 대하여 다자간 대화체제는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클린턴 미행정부는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와 전통적인 安保公約이 반드시 상호배치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다자간 안보협력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일본처럼 미국과 양자간 안보동맹을 맺은 국가와의 관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⁴⁸⁾ 셋째, 최근 안보영역이 군사적인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 자원이용에서부터 국제적인 마약거래, 해적행위, 테러리즘 등과 같은 초국가적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독단적인 행동보다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더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東北亞地域 安保協力政策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미국의 동북아시아 안보협력정책은 APEC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협력에서 만큼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그리고 미국이 전통적으로 양자관계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서의 안보이해를 확보하여 온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다자간 대화가 이제 막 싹트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지역안보협력을 강조하는 미국의 정책을

도를 위한 여건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EASR, p. 8.
48) 김성한, 앞의 글, p. 130.

충분히 신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둘째, 미국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동북아에서 지역안보협력을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의제, 협의 범위, 참여국의 수 등을 담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다만 NEACD 등을 통해서 볼 때, 미국은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아시아형의 CSCE보다는 동북아와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소지역 차원의 다자간 안보협력과 信賴構築會議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지역안보협력에 관한 미국과 역내 주요국가들간의 전략과 정책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ASEAN은 역내 정부간 공식적 안보협력체인 ARF를 주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주도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ARF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ARF가 한반도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에는 부적합하다는 점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미국이 역내의 복잡한 安保問題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동북아를 중심으로한 또 하나의 안보협의체를 출범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무엇보다도 문제는 동북아에서 지역안보협력이 예방외교의 차원을 넘어서 예를 들면, 북한의 남침가능성 등 역내의 핵심적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즉 냉전종식 이후 다자간 안보협력이 공동안보, 協力安保, 포괄적 안보 등 다양한 개념정립을 통해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통제 등 구체적 사안이 냉전의 잔재가 남아 있는 동북아지역에서 과연 실천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지역안보협력을 단지 기존의 兩者的 同盟關係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을

뿐이다. 요컨대 미국은 냉전종식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과 APEC, ARF, 그리고 「新太平洋共同體」구상 등을 통하여 지역협력을 추구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그러나 미국의 지역협력정책은 ① 자국의 경제적 번영을 위한 것, ② 世界經濟를 주도하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한 것, ③ 미국을 배제하려는 동 지역의 地域主義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것, ④ 동 지역에서 일본의 배타적 세력기반화를 견제하기 위한 것, ⑤ 미국의 개입을 줄이면서 여전히 동 지역의 안보와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 등으로 분석된다.

2. 日本

가. 東北亞 安保情勢 認識

일본은 냉전종식과 소련의 사회주의체제 붕괴로 러시아의 직접적인 안보위협은 감소하였지만 아직까지 군사력은 위협적인 수준에 있으며, 미국의 개입능력 저하와 역내국가간 軍備競爭으로 인하여 지역분쟁위협은 오히려 증대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다.⁴⁹⁾ 특히 일본은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軍事力 現代化 및 군비증강을 추진하고 있어 불안한 안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인 안보위협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9) 防衛廳編, 「防衛白書」1995年版, p. 5.

(1) 위협적인 러시아 군사력

1995년판 「防衛白書」에 의하면 일본은 러시아의 극동군사력이 1990년 이후 양적으로는 감축되고 있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고, 1990년 11월 CFE이후 유럽에서 감축된 군사력의 일부가 극동지역에 재배치됨으로써 극동군 장비현대화는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⁵⁰⁾

그러나 1996년 「방위백서」 초안에 의하면 러시아의 위협과 관련, 종전의 “잠재적 위협세력, 불안정한 요인”(1995년 방위백서)이라는 표현대신 “불확실한 점이 있어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표현으로 대체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이 약해졌다는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⁵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군사력에 대한 일본의 기본 입장은 아직까지 위협적인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러시아 극동군이 최근 재정상태 악화로 인하여 활동이 약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구소련 전략미사일의 1/3, 지상군 약 24만명, 해상군사력 약 189만톤, 공군 작전기 1,220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⁵²⁾

「防衛白書」가 지적하고 있는 러시아군사력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핵전력면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나 전략폭격기가 시베리아 철도 주변에 배치되어 있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50) 防衛廳編, 「防衛白書」 1995年版, pp. 51~52.

51) 「毎日新聞」, 1996. 6. 13.

52) 防衛廳編, 「防衛白書」 1994年版, p. 59.

(SLBM)을 탑재한 델타 III급 탄도미사일 탑재 원자력잠수함(SSBN)이 오호츠크해를 중심으로 한 해역에 배치되어 있다. 또한 ICBM은 SS-25 등으로 현대화되어 있고, 전략폭격기도 사정거리 3,000km의 순항미사일 AS-15를 탑재할 수 있는 현대식 TU-95H형이 주력으로 되어 있다.⁵³⁾

둘째, 지상군사력면에서 러시아는 1990년대 이래 兵力規模를 축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27개 사단 24만명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해상군사력면에서 러시아의 태평양함대는 블라디보스톡과 페트로파브로프스크를 주요 거점으로 배치되어 있다. 「防衛白書」에 따르면 태평양함대는 최근 2척의 항공모함을 퇴역시켜 양적으로 군사력을 감축하고 있지만 오스카-II급 순항미사일탑재 원자력잠수함의 회항이나 아크라급 원자력 공격형잠수함의 건조를 계속함으로써 군사력 현대화를 지속하고 있다.

넷째, 공군력면에서 극동공군은 방공군, 공군, 해군의 작전기를 포함해서 총 1,220기를 배치하고 있다. 공군기도 양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지만 SU-25나 MIG-29 등 제4세대 전투기를 지속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질적인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北方領土와 관련, 구소련이 1978년 자국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쿠나시리(國後), 에토루후(擇捉), 시코탄(色丹)섬에 지상군을 배치한 이후 현재도 사단규모의 러시아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이 지역에 전차, 장갑차, 각종 대포, 대공미사일이나 대지상공격 헬리콥터 MI-24 하인드 등이 배치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53) 防衛廳編, 「防衛白書」, 1995年版, p. 51.

또한 일본은 러시아가 해상 및 항공전력 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오호츠크해 등에 SSBN을 전개하여 왔으며, 北方領土를 이러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오호츠크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북방4도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러시아의 군사력 통제 약화, 무기판매 증가, 핵물질과 핵기술 판매 가능성 등이 자국에 대한 안보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첫째, 명령과 통제(command and control)의 신빙성 문제와 관련, 일본의 군사전문가들은 소련 해체로 인하여 구소련 군사력에 대한 러시아의 統制體制가 약화되었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둘째, 武器擴散 問題와 관련, 일본의 정책담당자들은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판매의 급증 뿐만 아니라 핵물질 및 핵기술의 판매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러시아 정부가 외화를 획득할 목적으로 제3세계에 핵물질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적인 규모로 核擴散이 진행될 가능성에 대하여 가장 우려하고 있다.⁵⁴⁾

(2) 北韓의 軍事力 增強

일본 방위청은 사정거리 1,000km의 북한 「노동 1호」 지대지미사일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군사력증강이 극동지역의 중요한 군사적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54) 「日本經濟新聞」, 1992. 12. 31.

1993년 5월 29일 실시된 북한의 「노동1호」 발사실험 성공을 계기로 도쿄를 포함한 일본 관동지방이 북한 「노동1호」의 사정권내에 든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995년도 「방위백서」는 “한반도에 있어서 한국과 북한을 포함, 150만명이 넘는 지상군이 非武裝地帶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군사적 구조는 냉전이후시대에도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1996년 4월 17일 발표된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에 의한 「美·日 防衛協力指針」 개정과 관련하여, 한반도에서 한국과 북한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일본에 대한 공격가능성이 우려되는 사태’로 간주하기로 하였다.⁵⁵⁾

일본은 미·북 제네바합의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인식하기 보다는 핵동결차원의 문제해결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최근 북한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⁵⁶⁾

(3) 中國의 軍事現代化와 海外介入 能力 增大

일본은 최근 중국이 인민해방군의 현대화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으며, 국방계획을 종래의 「消極防衛形」으로부터 「積極防衛形」으로 전환하여 해외개입 능력을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⁵⁷⁾

일본 방위청은 1996년 防衛白書에서 사상 처음으로 중국군의 동향

55) 「讀賣新聞」, 1996. 6. 11.

56) 防衛廳編, 「防衛白書」1995年版, pp. 59~60.

57) Michael Klard, “The Next Great Arms Race,” *Foreign Affairs* (Summer 1993), pp. 141~143.

을 주시할 필요성과 정세분석평가를 명기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⁵⁸⁾ 동 백서는 “중국이 핵전력과 함께 해·공군력을 현대화하고 해양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대만 주변에서의 軍事訓練으로 양안(兩岸)의 긴장이 고조되어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동 백서는 중국이 부국강병을 국가목표의 하나로 내걸고 있고 1996년 군사비 증가율이 11%에 이르는 등 8년 연속 두자리수를 넘는 증가율을 보인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사실 중국은 비록 일본의 1/2도 안되지만 공식발표 수치의 4배에 달하는 280억달러를 1995년 軍事費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⁵⁹⁾ 지난 1985년 확정된 인민해방군 현대화계획에 따라 220만명에 이르는 병력의 축소작업과 함께 무기의 현대화 및 전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 및 이스라엘 등지에서 최신 군사장비와 기술을 도입중이다. 특히 인접국과의 領土紛爭이 잠잠해진 90년대 들어 남사군도 분쟁 및 대만을 염두에 두고서 해공군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러시아제 킬로그램 잠수함 구입에 이어 항공모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중국은 1996년 4월 러시아와의 북경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수호이(SU)-27 전투기의 라이선스생산, 잠수함, 미사일 防水시스템 및 신형공격기 슈퍼7의 공동개발검토 등에 합의하였고, 최신에 전투기인 SU-27 24기를 추가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이 밖에도 일본 및 미국과 군사균형을 이루는데 열쇠가 되

58) 「每日新聞」, 1996. 6. 13.

59) 「東亞日報」, 1996. 6. 9.

는 핵전력 증강을 위하여 1995년 5월 NPT 체결 직후 지하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세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대만과의 갈등국면에서 위력을 떨친 미사일전력에 있어서도 ICBM 14기 등 20만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⁶⁰⁾

특히 중국은 1992년 2월 領海法을 선포하였는데, 이 법을 통하여 남지나해의 南沙群島와 西沙群島에 대한 오랜 영유권 주장을 법제화하였고 일본이 자신의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센카쿠(尖閣) 열도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법제화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중국이 센카쿠 열도에 대한 주권 주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영토분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⁶¹⁾ 또한 일본은 자국의 해상수송로 방위의 견지에서 중국이 해공군의 현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⁶²⁾

이와 같은 안보위협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일본 정부는 1990년을 전후하여 미·러를 중심으로 전세계가 급속한 군비축소의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도 防衛豫算을 1995년도 보다 2.58% 늘어난 4조 8,455억엔으로 책정하였다.⁶³⁾ 1991년 이후 증가율 감소 추세를 보여온 일본의 방위비 증가율은 6년만에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이 1996년 4월 17일 미국과 신안보동맹을 구축한 것은 동북아 지역패권국으로서의 중국의 등장을 견제한다는 강력한

60) 「東亞日報」, 1995. 12. 16.

61) 일본은 중국의 석유탐사선(감탐 3호)이 1996년 2월초 東중국해의 센카쿠열도 근해에 접근, 석유 시추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시추작업장의 동쪽은 일본 영해라고 주장하며 이 해역에서의 석유 탐사작업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하였다. 「中央日報」, 1996. 2. 13.

62) 防衛廳編, 「防衛白書」 1994年版, p. 69

63) 「讀賣新聞」, 1995. 12. 19.

동기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이 러시아와 북한 및 중국으로부터 安保威脅을 인식하고 있는 일본은 냉전이후시대 미국의 상대적인 안보역할 축소로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미국 및 국제사회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 東北亞 平和體制에 대한 日本의 立場

일본은 최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다양한 역내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雙務的 安保關係를 보완하는 다자간 안보대화 와 협력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1990년까지 역내 다자간 안보문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이는 다자간 안보협력으로의 접근이 美·日 安保條約을 자국 안보의 근간으로 하여 왔던 일본과 미·일 안보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는 점, 러시아와 북방영토 영유권문제 등 쌍무적 성격의 주요 현안에 외부의 개입을 초래하여 오히려 문제해결이 어렵게 될 수 있다는 판단, 미국이 아시아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 대화에 부정적이라는 점 등 때문이었다.

냉전종식 이후 일본이 다자간 안보에 적극성을 띠게 된 이유는 냉전종식으로 역내 안보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미·일 안보관계가 영구히 지속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이 장차 아시아에서 철수하거나 중국이 군사대국으로 등장할 가능성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위협이나 역내 군비경쟁을 통한 돌발사태 발생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역내국가

들간에 다자안보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자국 역시 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⁶⁴⁾

최근 미국내에서는 미·일 안보조약 堅持에 대한 반대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첫번째 의견은 소련의 붕괴로 미국과 일본간의 동맹은 그 필요성을 상실하였으며, 따라서 미국은 국익을 위하여 일본과 중국, ASEAN간의 세력균형을 維持 해야 한다는 것이다.⁶⁵⁾

두번째 견해는 냉전시대에 고착화된 미국의 해외에 대한 過剩關與를 축소시켜야 한다고 보는 미국내 新孤立主義者들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⁶⁶⁾ 커티스 교수에 의하면 이러한 견해들은 시기적으로 완급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멀지 않아 미국 정가에서 미·일 안보조약에 대한 수정논의로 발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⁶⁷⁾

그러나 이같은 미·일 안보수정론은 미국 정부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클린턴 미행정부는 역대정권과 마찬가지로 미·일 안보체제를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 政府次元에서 多者安保協力을 제안한 것은 1990년부터였

64) Hisayoshi Ina, *A New Multilateral Approach for the Pacific: Beyond the Bilateral Security Network* (The Johns Hopkins Foreign Policy Institute, 1993).

65) Chalmers Johnson, *Japan Who Governs?: The Rise of the Developmental State* (N.Y.: W.W.Norton & Co., 1995), pp. 69~95; Chalmers Johnson, "Where's Chinton on Asia?," *New York Times*, Feb. 8, 1993.

66) Chalmers Johnson and E.B. Kechen, "The Pentagon's Ossified Strategy," *Foreign Affairs*, Vol. 74, No. 4, p. 114.

67) Gerald L. Curtis, "Meeting the Challenge of Japan in Asia," in Gerald L. Curtis (ed.), *The United States, Japan and Asia* (N.Y.: W.W.Norton & Co., 1994), pp. 216~252; Glen S. Fukushima, 「日美經濟摩擦の政治學」, (東京: 朝日新聞社, 1993), pp. 157~164.

다. 특히 1991년 7월 나카야마 外相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ASEAN-PMC의 실무자급 회의에서 아·태지역의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제의를 한 바 있다. 이 제안은 아·태지역에서 정부간에 다자안보기구의 구상이 논의될 때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입지조건을 마련하고 PKO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합법적인 메카니즘을 만들어야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⁶⁸⁾ 그러나 이 제안은 사전협약이 없었기 때문에 ASEAN 국가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으며, 한·미 등이 유보 내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채택되지 않았다.

나카야마 외상의 제안은 1년이 지난 후인 1992년 6월 22일 미야자와 수상은 아·태 안보기구안 제의에 의하여 구체화되었다.⁶⁹⁾ 이날 미야자와 수상은 CSCE 정상회담에 옵저버자격으로 참석하기 위하여 헬싱키로 가는 도중 미국 언론과의 회견을 통하여 탈냉전시대 日本外交의 주요과제를 설명하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 중국, 러시아와 함께 아시아의 새로운 안보기구를 창설하는데 협조할 것이며, 아·태지역의 안보확립방안으로 아시아版 다자안보협력기구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앞으로는 건설적인 동반자로서 대화와 협력에 참여하도록 끌어들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중국과 관련 핵확산금지조약, 미사일기술 통제정책 및 재래식무기 이전과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였으며, 러시아

68) 송영선, “亞·太地域의 多者安保協力體制는 可能한가?” 『오늘의 군사운영 분석』, 제9권, 제2호(1992. 12), p. 21.

69) 『朝日新聞』, 1992. 6. 23.

에 대해서는 ‘北方領土의 불법적인 점유’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일본은 그 후에도 수차례 걸쳐 아·태지역의 정치·안보대화를 제의하여 오다가, 미야자와 수상이 1993년 1월 ASEAN 순방길에서 「미야자와 독트린」⁷⁰⁾을 공식적으로 표방하였다. 아·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하고 일본과 ASEAN의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의 독트린은 첫째,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국가들간 정치·안보대화의 촉진 및 지역안보에 대한 장기적 비전의 개발, 둘째, 아·태지역 經濟의 開放性 제고 및 역동적 경제성장 촉진, 셋째, 민주화 촉진 및 개발과 환경보존의 동시적 추구, 넷째, 인도차이나의 평화와 번영을 겨냥한 일본과 ASEAN 국가들간 협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미야자와는 한반도의 화해를 위한 대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본, 미국, 중국 및 러시아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관하여 현재 일본, 미국 및 한국이 협력하고 있는 수준은 시작단계라고 말하면서 미·일간 정치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미야자와 독트린은 동남아시아지역과의 경제적 유대를 안보협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ASEAN-PMC를 모델로 한 것인데, APEC을 선호하는 미국은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1994년 7월에 무토 외상은 ARF의 창설을 지지하면서 이 지역 국가들의 정책에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정치적 회담이 중요하며 정치 및 안보문제에 관한 한 아·태 군사협력은 전반적인 다자간 지역회담체제에서만 논

70) 외교안보연구원, “미야자와 독트린과 일본의 아태지역 정책방향,” 「主要國際問題分析」, 1993. 2. 17, pp. 7~10.

의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⁷¹⁾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ARF는 아·태지역 최초의 정부차원 다자간 안보협력체인 바, 일본은 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1995년 5월 29일 다마자와 일본 방위청장관은 구소련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북방중시의 방위전략에서 벗어나 아·태지역에 역점을 두는 全防衛 형태의 방위전략을 지향할 것임을 밝혔다.⁷²⁾ 이는 미·일 안전보장체제가 실질적으로 양국간의 차원을 넘어 전방위로 擴大·發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냉전이후 일본 안보정책의 골간을 규정하는 「防衛計劃大綱」 改正案이 1995년 11월 28일 확정되었는데, 이 案에서 다각적 안보개념이 도입되었다.⁷³⁾ 즉 일본은 UN 국제평화유지활동(PKO)을 비롯하여 동북아 및 ASEAN, ARF 등의 회원국과 다각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보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방위청 고위간부는 “탈냉전시대의 국방정책으로는 다자간 안보대화를 추진할 수 밖에 없으며, 러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각국과의 信賴造成이 일본 방위정책의 또 하나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⁷⁴⁾

동북아지역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은 북한의 핵위협과 「노동 1호」 미사일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⁷⁵⁾ 동

71) 마코토 가와나고, “지역안보와 일본,” 동북아의 안보협력 문제점 및 전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3), p. 93.

72) 「朝日新聞」, 1995. 5. 30

73) 「朝日新聞」, 1995. 11. 29.

74) 「讀賣新聞」, 1996. 4. 27; 「世界日報」, 1996. 4. 28.

75) 일본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사정거리 1,000Km의 북한 「노동 1호」 지대지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력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아 비핵지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북아의 양자 및 다자간 安保對話가 단순한 대화를 위한 것보다는 실질적인 신뢰구축조치들이 논의되고 또 실천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동북아 비핵지대안은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NPT 탈퇴결정시 남북한만의 노력으로 한반도 非核化가 달성되기는 어렵다고 피력한 하지메 이즈미 교수에 의하여 제시되었다.⁷⁶⁾ 그는 먼저 ‘非核’이라는 말을 단 한개의 핵무기도 사용하지 않거나 배치되어서는 안된다는 식의 엄격한 의미로 해석하지 말고, NPT의 정신에 입각하여 ‘동북아 핵확산 금지지역’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자고 제안하였다. 이 개념은 전 지역을 절대적인 비핵지역으로 선포하기 이전의 과도기적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핵 미보유국들이 가능한 모든 ‘核代案’을 영구히 포기하고, 또한 핵보유국들은 핵 미보유국들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을 약속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핵 군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동북아 역내의 남한, 북한과 일본은 ‘非核’ 상태를 영구히 유지하기로 동의하고, 반면에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핵 보유 3국은 위 세 나라에 대한 선제 핵공격을 완전히 포기하며, 가능한 모든 곳에서 핵 전력의 배치를 제한하고, 역내의 핵 군축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개념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 방위청은 1994년 7월 15일 공표된 1994년 「防衛白書」에서 러시아 군사력보다 북한 군사력을 최대의 위협요인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防衛白書」, 平成6年(1994)版, pp. 47~58.

76) 하지메 이즈미, “일본과 한반도 : 동북아 핵비확산지역구상,” 제1회 KIDA/RIPS 동북아국방포럼 「동북아의 안보협력 문제점 및 전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3), pp. 95~102.

무엇보다도 한반도에 대한 핵보유국들의 위협이 줄어들 것이며,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우려도 감소될 것이다. ‘擴散禁止地域’ 개념은 동북아 및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핵무기 및 기술을 개발하려는 여하한 계획도 타당성을 잃게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으로 하여금 핵군축을 지향하게 만드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다.

국제사회가 한반도 비핵화를 신뢰하게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려야 할 것이고, 그 과정도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빨리 서둘러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지 않으면 일본이 핵무장을 하리라는 우려는 점점 더 증폭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1993년 7월 4일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클린턴 미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가 일본의 핵무장으로 이어지리라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북한의 核武裝에 대한 일본의 우려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하찮은 것이 아니라 아주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는 핵무장을 하는 나라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본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그에 따라 일본이 핵무기 보유에 따른 재정 지출, 과학 및 기술 잠재력의 전용 및 기타 부대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일본 입장로서는 경제적, 정치적 및 군사적으로 훨씬 이익이 되리라 본다. 미국과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하여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는데, 왜냐하면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은 잠재적으로나마 일본의 안보와 역내에서 일본의 경제 및 정치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⁷⁷⁾ 비록 우회적인 표현이긴

77) Yoichi Funabashi, “Clinton says Japan must make change,” *Asahi Evening News*. 1993. 7. 6.

하지만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일본의 核保有 可能性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던 것이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비핵 3원칙」의 선언만으로도 인접국들의 두려움을 불식하는데 충분하였던 시절은 이미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이제 동북아 핵비확산지역의 설정을 위한 노력을 포함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의 모색이 시급해졌다. 이러한 핵비확산지역의 모색은 호소가와 신정권이 채택한 정책방향과도 일치한다. 호소가와 총리는 1993년 9월 27일 유엔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핵비확산지역은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핵심 요소이다. 본인은 일본이 NPT의 효력을 1995년 이후까지 무기한 연장하는 것을 지지함을 천명하고자 한다. 동시에 NPT의 무기한 연장도 핵국가들의 핵보유 영속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과 러시아의 핵군비 감축을 위한 협상의 진전을 환영하며, 모든 핵보유국들이 핵군비 축소가 더욱 진전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해야함을 강조한다.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씻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⁷⁸⁾

이즈미 교수는 ‘핵비확산지역’을 창출하기 위해서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전면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그는 핵무기 없는 한반도의 실현 뿐만 아니라, 핵무기제조에 쓰일 수 있는 모든 물질의 생산까지도 금지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남북한간의 「한반도 非核化共同宣言」의 실천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미국과 일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강조하였다.

78) *Daily Yomiuri*, 1993. 9. 28. 호소가와 유엔총회 연설문.

한편 일본은 동북아지역의 민간차원에서 개최되고 있는 NEACD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동북아 NEACD(1996.1.8~10)에서 세계 군사력의 30%가 집중된 동북아지역에는 다자안보협력의 부재, 한반도 분단 등 불안정 요소가 지속되고 있어 새로운 안보균형 구축의 기초가 될 相互安心措置(MRM) 등을 개발·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일본은 향후 10년간 국제적 MRM분야에 1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자위대의 PKO참여 등을 통하여 국제적 역할을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차원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미야자와 독트린」 및 1995년의 「방위계획대강」 개정안에서도 천명되었듯이 역내 다자간 안보협약체가 미·일 안보체제를 代替하기 보다는 미국을 축으로 하는 안보협약체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페리 美국방장관은 1996년 2월 동북아지역에서 북한을 포함한 역내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정례협의체인 「東北亞 安保對話」의 창설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미국의 방침은 북한 내부사정, 중·대만간의 양안관계 등 역내 긴장요소에 대한 투명성과 유사시 비상체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국으로는 한국과 북한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등 5개국이다. 특히 중국을 봉쇄하기 보다는 건설적인 관계강화를 통하여 분쟁을 예방하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을 협의체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안정화를 지향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案에 대한 일본의 찬성이유는 미국이 중심이 되어 중국과 대만간의 양안관계, 북한문제 등 '예상되는 군사적 위기의 사전해소'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이다.⁷⁹⁾

79) 「朝鮮日報」, 1996. 6. 26 참조.

따라서 일본은 미국이 동북아지역의 안보협의회를 구성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파악하고, 미국 주도에 따른 한·미·일 안보협력의 형태로 동북아 다자간 안보대화의 창설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동북아 평화체제의 기반조성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의 준비작업으로 중국, 러시아 및 한국에 대하여 양국간의 상호투명성 확보를 높이는 군사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⁸⁰⁾

中國問題와 관련하여 일본은 중국이 분명히 이 지역의 잠재적 불안요인이므로 이러한 불안요인을 다자간 틀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중국이 다자협력의 틀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는 기능할 수 없으며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러시아와 1995년 2월 국방장관 교환방문에 합의하고 합동 해상탐색·구조훈련을 실시(1995.9.15~17)하는 등 군사교류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우스이히데오(臼井日出男) 방위청 장관은 1996년 4월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그라초프 러시아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냉전이후 지역분쟁에 대비한 양국간의 안보 및 북방영토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같은 일본의 대러 안보대화 확대는 러시아가 1993년 12월 발표한 신군사독트린에서 ‘敵對國家不在’ 선언을 하였고, 일본도 소련의 침공을 가상하여 작성하였던 전략을 수정한 「신방위계획대강」을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해서 일본은 현역군인들이 대거 참가하는 兩國 安保協議會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일간에는 1994년

80) 「朝鮮日報」, 1993. 5. 4.

11월 「공중우발충돌방지협약」이 체결되는 등 군사교류가 확대되고 있으며, 1996년 5월 이양호 국방장관은 일본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군사협력 강화에 합의하였다.⁸¹⁾

결국 일본은 전방위형태의 방위전략아래 장기적인 다자안보협력정책을 제시해 두고, 주변국들과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역할 증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안보문제와 관련, 일본은 미·일동맹의 확고한 기반위에서 ARF 같은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육성시켜 가는 것을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간주하고 있으며,⁸²⁾ 인도차이나지역의 국지분쟁에 대해서 당사자 중심의 해결을 촉구하면서 동북아지역에서는 우선 한·미·일 3국 안보협력관계 증진을 병행해 나가는 二元的인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⁸³⁾

3. 中國

가. 東北亞 安保情勢 認識

중국은 냉전체제가 종식된 1990년대 동북아질서가 유럽과 중동 등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나, 한반도문제 등 냉전의 잔재 지속, 釣魚臺列島와 北方 4個島嶼問題 등 영토문제 미

81) 「朝鮮日報」, 1996. 7. 2.

82) 前田哲南·竹田いさみ, “アジア 太平洋に多國間安保は可能か,” 「世界」, 1996. 7, p. 48; 일본은 유럽의 OSCE형이 구속력이 약하다는 점과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아·태지역에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나 OSCE 메카니즘을 그대로 아·태지역에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인 무리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위의 글 p. 54.

83) 「外交青書」, 1993, p. 407.

해결 및 국가간 이익 확보를 위한 경쟁 등으로 긴장과 갈등을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강대국간 대규모 전쟁발발 가능성이 감소되고 있으나, 소규모 지역분쟁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북아지역 정세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검토해 보고, 이를 통하여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추론해 보기로 한다.

(1) 兩極體制의 瓦解와 三極體制의 形成

1990년대 들어 중국은 역내 세력균형이 자국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아·태지역에서 소련 붕괴 이후 미·러를 중심으로 한 양극체제가 와해되고 미·일·중을 주축으로 하는 三極體制가 새로이 형성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⁸⁴⁾ 중국은 동아시아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삼극체제가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체제이지만 과거와 같이 미국이 더 이상 역내질서를 독단적으로 좌우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이 지역에서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삼극체제하에서 중국을 비롯한 역내국가들의 의지와 역량이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정치·경제·군사적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경제력의 쇠퇴로 인하여 대외문제보다도 대내문제 해결을 우선시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84) 1990년대 아·태지역에서 兩極體制가 붕괴되고, 미·일·중 三極體制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중국의 견해에 대해서는 Wang Jisi, "East Asia: Prospects for Cooperation," *Beijing Review*, July 19~25, 1993, p. 9 참조.

따라서 미국은 역내에 주둔하고 있는 10만명의 병력을 지속적으로 잔류시키고 지역안정을 위한 均衡者 役割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한국과 일본에게 방위비 분담폭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미·북간 핵합의 이후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주도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나, 일본과 「신안보공동선언」 채택을 통하여 일본 自衛隊의 활동범위 확대를 가능하게 한 것도 동북아 질서를 독자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러시아는 대내 정치·경제적 혼란으로 인하여 대외문제에 대하여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중국과의 접경지역 등 극동지역 주둔병력을 대폭 감축한 바 있고, 아프가니스탄과 蒙古로부터 주둔군을 완전 철수하였으며, 베트남내 해군기지를 폐쇄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미국과 平和的 同伴者關係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대외문제에 있어서 미국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동시에, 중국과도 국경선문제로 인한 불신 소지를 해소하는 등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복원 등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 회복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것도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동북아에서 일본과 중국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본은 신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역내에서 정치·군사적 역할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 「신안보공동선언」을 채택하여 미국과 세계질서를 공동으로 유지해 나갈 것을 약속함으로써 국제문제에 대한 발언권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점진적 정치·안보 역할증대를 용인함으로써 동아시아에 대한 안보

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미·일이 향후 동북아 질서를 공동으로 주도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이와 같이 동북아지역 국제질서가 兩極體制에서 미·일·중에 의한 三極體制로 변화되고 있는 점은 북방으로부터의 안보위협에서 벗어나게 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외교적 활동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어서 중국은 三極體制로의 변화가 중국에게 도전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새로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삼극체제가 미·일을 한축으로 하고 중국을 다른 한축으로 하는 형태로 정착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⁸⁵⁾

(2) 二重的 安保構造의 胚胎

중국은 周邊國과의 善隣關係가 강화됨에 따라서 자국의 안보환경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개선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1991년과 1994년 러시아와 국경문제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과거 양국간 분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국경선 문제를 대부분 해결하였으며, 중·러 국경지역에 주둔해 있는 러시아 병력의 감축과 경제협력 등을 통한 相互信賴 回復 노력으로 인하여 러시아로부터 직접적인 안보위협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또한 중국은 과거 적대관계에 있었던 인도, 베트남, 한국 등 주변국들과도 관계정상화를 달성함으로써

85) 중국의 이러한 우려는 1996년 4월 미국과 일본이 「신안보공동선언」을 채택한 이후 더욱 심화되는 추세에 있다. 미·일에 대한 중국의 안보적 위협 인식이 잘 나타난 중국인의 시각에 대해서는 宋强 等, 「中國可以說不」(北京: 中華工商出版社, 1996) 참조.

주변국들에 의한 안보위협을 완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역내 유일 패권국 지위유지와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 모색이 중국의 안보에 직·간접적 위협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소련 붕괴 이후 중국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和平演變」 기도가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클린턴 미행정부의 對中 인권개선요구, 1993년 미 하원의 2000년 올림픽 北京개최 반대 결의안 채택, 1994년 대만과의 관계격상 결정, 1995년 이등휘 대만총통 방미 허용, 미·베트남 관계정상화, 1996년 미·일 「신안보공동선언」 채택 등도 중국 사회주의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음모하에 전개되어 왔다고 간주하고 있다.

또한 과거 일본의 침략을 경험한 바 있는 중국은 일본의 캄보디아 파병과 군사력증강 및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 움직임 등 정치·군사적 역할증대 기도가 장기적으로 중국의 이익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改革·開放政策 채택 이후 연안지역을 전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바, 해양 세력인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 움직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중국은 남사군도와 조어대열도의 領有權을 둘러싼 분쟁, 대만의 분리 독립 움직임, 한반도문제 및 미국 주도하의 역내 다자 안보협력체 형성 움직임 등도 자신의 안보에 위협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역내에서 영향력을 유지·확대하고자 하는 중국은 이들 문제들의 國際化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직접 관련 당사국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⁸⁶⁾

(3) 經濟的 相互依存度 深化

중국은 동북아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등 여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고 있으며, 세계무역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중국은 동북아지역의 경제번영이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기여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데에도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동북아지역 국가들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市場開放 압력 등 경제공세가 적극화됨으로써 미국과 역내국가간 경제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유럽지역의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심화되고 미국과의 긴장관계가 지속될 경우, 역내경제에 대한 중국경제의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⁸⁷⁾

아울러 중국은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地域經濟블럭화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 동북아를 포함한 아·태지역에서도 지역경제블럭화 움직임을 적극화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에 의해 제창된 「東아시아 經濟協議體」(EAEC)와 「太平洋經濟協力會議」(PECC) 및 「황해경제권」구상 등도 이러한 움직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중국은 역내국가들이 대외의존적 수출주도형의 발전전략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역내 경제권이 폐쇄성을

86) Guo Zhenyuan, "Asian-Pacific Region Remains Peaceful," *Beijing Review*, February 5~11, 1996, pp. 8~10.

87) 時永明, "亞太安全環境與地區多邊主義," 「國際問題分析」, 1996年 第1期 (1996,1), pp. 41~42.

띠기 보다는 개방적 지역주의라는 구도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경제블럭화 추세가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상호간 교역 비중을 확대하도록 할 것이며, 역내 국가간 경제블럭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⁸⁸⁾

나. 東北亞 平和體制에 대한 中國의 立場

상기한 바와 같이, 중국은 탈냉전기 동북아질서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들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동북아시아 질서가 냉전시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의도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탈냉전시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동북아질서가 새롭게 재정립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대내경제 발전을 최우선적 국가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환경의 안정유지를 필요로 하고 있는 바, 동북아의 制度的 平和構築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은 동북아 평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신질서 구축은 단기간내에 불가능하며 장기적 안목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⁸⁹⁾ 중국이 이와 같이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동북아 新秩序 구축을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88) 楊成緒, “對東亞安全問題的分析,” 『國際問題分析』, 1994年 第3期(1994.7), p. 21.

89) 國家教委社會科學社編, 『世界政治經濟與國際關係』(北京: 經濟科學出版社, 1995), pp. 332~337.

중국은 동북아지역에 진정한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간의 세력균형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상호 불신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패권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역내국가간 불신이 지속되고 있는 현상하에서는 동북아지역에 불안정한 평화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즉 중국은 동북아 평화체제가 중국이 명실상부한 강대국으로 부상한 이후에 조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패권적 세력이 사라지고 다극화 추세가 보다 진전될 때까지 양자차원의 신뢰회복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⁹⁰⁾

또한 중국은 동북아지역의 평화체제는 역내국가간의 利益調整과 세력관계 재편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동북아지역 국가들은 신질서 형성과정에서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랄 것이기 때문에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에 대한 각국의 구상과 입장이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과정에서 역내국가간의 이러한 입장 차이를 여유를 갖고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⁹¹⁾

이와 관련, 현재 동북아 다자안보대화를 통한 역내국가간 신뢰회복과 분쟁의 사전예방 노력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과거 중국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기구 창설

90) 신상진,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체제 형성에 대한 중국의 입장,” 『地域研究論叢』 第5輯(1993), pp. 157~161.

91) Kazuko Mori, “China’s Pivotal Role in the Asia-Pacific Community,” *Japanes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9, No. 3 (Summer 1995), p. 232.

주장을 中國 包圍戰略의 일환으로 인식하여 반대하여 왔다. 또한 중국은 역내의 복잡한 지역분쟁과 갈등을 하나의 안보협력체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식, 우선 양자관계 개선에 의해 역내국가간 신뢰증진과 긴장완화를 도모하여 안보적 이해를 구축한 다음 다자안보협력체를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⁹²⁾

중국이 이와 같은 입장을 보여온 것은 역내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크게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해가 걸려있는 地域問題가 國際化되기 보다는 관련 당사국간 협의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더 부합된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15개의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이며, 대만문제와 남사군도 문제를 놓고 주변국과 잠재적 갈등관계에 있는 바, 다자안보 협력기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을 달갑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또한 중국은 이념대립 지속, 영토문제와 분단문제 등 현안의 미해결과 문화적 다양성 등 동북아를 포함한 아·태지역이 지닌 특수한 사정을 이유로 OSCE와 같은 포괄적인 형태의 협력체 형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⁹³⁾ 중국은 역내에 하나의 포괄적인 안보협력체를 구축할 경우, 이는 지역적 특성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

92) 과거 역내 다자안보협력기구 형성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신상진,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에 대한 중국의 입장,” pp. 55~56 참조.

93) 중국은 동북아지역이 지리적, 문화적, 이념적으로 서로 상이한 조건과 배경을 갖고 있고 광범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통하여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문제를 다루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Yan Xuetong, “Orientation of China’s Security Strategy,”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Vol. 6, No. 2 (February 1996), p. 8.

라, 지역문제에 대한 강대국들의 간섭을 야기할 구실을 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OSCE형 多者安保協力體가 인권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정치·군사적 현상의 인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수용하기가 곤란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역내 집단안보협력체가 중국을 가상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여 왔으며, 집단안보협력체에의 참여는 동북아를 포함한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이해하여 왔다.

그러나 중국은 탈냉전시대에 강대국간 세계대전 발발의 가능성이 감소된 반면 지역분쟁의 위험성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으며, 아·태지역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중국과 일본 등 지역국들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등 다극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아·태지역 국가간 경제협력력이 확대되고 經濟的 相互依存度가 심화됨으로써 역내국가들이 공동번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는 안보영역에서 지역국가간에 보다 많은 공통 인식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지난 십여년 동안 추진해온 改革·開放政策 결과 대내 정치·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고 대외적으로도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이 과거와 같이 중국을 고립시키거나 적대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1990년대에 들어 地域紛爭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자간 안보협력체 창설 구상에 점차 공감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⁹⁴⁾ 특히 중국은 자국의 군사력증강에 대한 주변국의 우

려를 불식시키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견제할 필요성을 갖고 있으며, 경제발전을 위하여 주변환경의 안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역내 다자안보협력체 형성 구상에 지지 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국가간 상호의존관계 심화와 환경과 마약문제 등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 요구의 증대로 유엔 등 국제기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증대를 모색하고 있는 중국은 국제기구의 안보협력논의에도 적극 동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⁹⁵⁾

이와 관련, 중국은 현재 아·태지역내 安保協力方案으로서 ASEAN이 주도하는 ARF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미·일·중·러 및 남북한을 포함하는 동북아 안보협력체 형성 구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남사군도 영유권문제 등 남중국해와 동북아시아를 아·태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위험잠재 지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ARF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에서의 안보논의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ARF와 관련, 말레이시아 등 ASEAN국가들이 역내 다자안보협력체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역내에서 미국의 패권추구 가능성과 일본의 역할증대를 견제해야 하는 중국

94) 1994년 3월 제8기 전인대 제2차회의시 李鵬 총리에 의해서 발표된 「정부 공작보고문」을 통하여 역내 다자안보협력논의에 적극 참여한다는 중국의 입장이 공식 정책노선으로 확정되었다. 李鵬, “政府工作報告,” 「文匯報」(香港), 1994年 3月 11日.

95) 중국이 지역 다자안보협력논의에 적극 참여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Kazuko Mori, “China’s Pivotal Role in the Asia-Pacific Community,” *Japanes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9, No. 3 (Summer 1995), pp. 231~232 참조.

의 정책목표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남사군도 영유권 문제가 중국과 동남아국가간 현안이 되고 있는 바, 중국은 ARF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남사군도 영유권문제와 관련한 갈등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울러 ASEAN이人權問題와 관련하여 중국과 유사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중국은 또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 다자안보협력체 형성 논의에 대해서도 NEACD에 적극 참여하는 등 원칙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이 4대 강국의 이해관계가 교차되고 있는 동북아 질서안정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과 동북아에서 일본의 군사역할증대를 견제하고 한반도문제를 대화로 해결함으로써 동 문제로 인한 중국의 난처한 입장을 탈피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아울러 주변국과 善隣關係를 강화하고자 하는 중국은 자신이 동북아에 대하여 안보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변국의 우려, 즉 ‘中國威脅論’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형성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은 동북아에서 4강의 이익이 첨예하게 교차되고 있고 상호 신뢰기반이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안보협력체가 구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역내국가들의 양자간 신뢰회복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⁹⁶⁾ 중국은 역내 다자안보협력체가 가까운 시일내에 형성될 경우 남사군도의 영유권 확보 및

96)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에 대한 중국의 이중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Guo Zhenyuan, "Prospects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Beijing Review*, July 11-17, 1994, pp. 21~22 참조.

홍콩과 대만에 대한 주권회복 과정에서 주변 강대국의 간섭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역내 다자안보협력 논의시 인권문제 등 대내정치 문제를 논의로 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⁹⁷⁾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중국이 역내 다자안보협력체가 內政不干涉 등 「平和共存 5原則」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5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⁹⁸⁾

첫째, 국가간 관계에서 패권주의,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강압정치, 빈국에 대한 부국의 패권행위를 반대한다. 역내국가들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아야 하고, 외국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거나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타국을 상대로 하는 군사집단이나 정치연합에 가입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국제분쟁과 각종 역사적 문제 및 향후 발생할 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영토문제와 국경문제 등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려 담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쟁해결 이전 관련국들은 안전과 신뢰조치를 통하여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유지하고 경제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은 군비를 正當防衛에 필요한 수준으로 제한해야 하며, 미국과 러시아는 핵무기와 재래식무기를 감축하면서

97) Guo Zhenyuan, "Asian-Pacific Region Remains Peaceful," *Beijing Review*, February 5-11, 1996, pp. 8~9; 時永明, "亞太安全環境與地區多邊主義," 「國際問題研究」, 1996年 第1期 (1996. 1. 13), p. 47.

98) "錢其琛在東盟論壇會議演講," 「人民日報」, 1995年 7月 26日.

이를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에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미국과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의 방대한 해군력을 감축하여야 한다.

넷째, 모든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무기의 선제사용을 금지하고 비핵국가와 비핵지대에 대한 핵무기 사용과 핵위협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지역국가들은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며 지역경제조직의 형성을 지지하고, 개발국은 미개발국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은 동북아시아이 지닌 다양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포괄적인 안보협력체를 형성하기 보다는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의 안보협력체와 信賴構築 措置를 병행하여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각 소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역내 소지역 차원의 양자 및 다자안보협력체를 형성하거나 역내국가 지도자회의 및 相互訪問의 정례화, 정보교류 채널 구축, (잠재적) 분쟁지역에 대한 신뢰구축조치를 강구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이는 아직 지역 강대국 지위에 머물고 있는 중국이 아·태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안보협력체를 구축할 경우 미국의 주도권을 용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⁹⁹⁾

요컨대 주변정세 안정을 바라는 중국은 지역 다자안보협력체 형성

99) 이와 관련, 중국이 국력을 더욱 증강하게 될 경우 지역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한 역내 다자안보협력체 형성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견해는 Yan Xuetong, "Orientation of China's Security Strategy,"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pp. 8~9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을 통하여 지역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역내 안정과 평화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역내 다자안보협력체가 미, 일 등의 주도하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 「平和共存 5原則」이 준수되어야 하며, 역내의 다양성과 상호 배타성을 고려하여 양자간 협력을 통한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러시아

가. 東北亞 安保情勢 認識

1991년 말의 소련 붕괴이후 출범한 러시아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내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호적인 대외 환경 조성을 외교목표로 설정하고 이데올로기 중심이 아닌 지정학적 이해 중심의 외교정책을 수행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우호적인 대외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진자본·민주주의 권으로의 편입, 접경국가들과의 선린관계 구축, 선진국들과의 경제관계 발전 및 투자와 경제지원 유도 등으로 확정하였다.¹⁰⁰⁾ 그리고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大西洋主義(Atlanticism) 외교정책, 즉 미국과 EC 등을 중심으로 하는 친서방 외교정책이 적극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100) Andrey Kozyrev, "Transformation or Kafkaesque Metamorphosis: Russia's Democratic Foreign Policy and Its Priorities,"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27 August 1992, p. 25.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냉전종식 이후 미국의 대유럽정책을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와 CSCE 등을 통한 동구권과 구소련 공화국들에 대한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로 이해하게 되었고, 미국내 경제침체와 러시아의 정세불안정 등을 이유로 하는 미국의 소극적인 대러 경제지원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러시아는 1992년 말~1993년 초 시기에, 즉 미국에서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로 교체되고 있던 시기에 親西方 外交路線을 독자노선으로 수정하게 되었다.¹⁰¹⁾ 러시아는 서구 뿐만 아니라 자국의 영향권으로 간주하고 있는 동구와 구소련 공화국들 및 아시아 국가들도 중시하는 정책, 즉 유라시아주의(Eurasianism)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익을 극대화하고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 러시아의 이러한 외교정책 변화는 1992년 12월 1일 발표된 「對外政策文書」¹⁰²⁾에서 명확히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는 동북아를 포함한 아·태지역에 대한 인식변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동북아 정세와 관련, 러시아는 역내국가간의 제반관계가 상호의존적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협력체제가 형성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기초로 역내에서 지도적 역할을 견지하려는 미국의 동북아정책,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 노력, 한반도 상황의 불안정 및 역내의 영토분쟁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101) Suzanne Crow, "Why Has Russian Foreign Policy Changed?" *RFE/RL Research Report*, vol. 3, no. 18 (6 May 1994), pp.1~6.

102)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2 December 1992, pp. 3~5 참조.

(1) 새로운 協力體制의 形成

냉전종식 이후 동북아 역내국가들은 다수의 양자간 정상회담과 고위인사 교류를 통하여 우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역내국가 정상들의 相互訪問을 통하여 미·일, 미·러, 한·러, 중·러간 동반자관계가 구축되었다.¹⁰³⁾ 일·중은 1992년 10월 아키히토 일본 국왕의 방중을 계기로 아시아 안정을 위한 우호관계 유지에 합의하였으며, 일·러는 1993년 10월 엘친 대통령의 방일시 「토쿄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양국관계 개선과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성공적인 北方政策으로 한·러와 한·중관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1990년 9월 한·소수교 이후 악화되었던 러·북한관계는 재정립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안보·군사면에서는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전술핵무기 철수를 단행한 한편, 러시아는 몽골주둔군의 철수를 완료하였다. 그 동안 한반도 위기를 야기하여 왔던 북한의 핵개발문제가 1994년 10월 미·북간 「제네바 기본합의문」의 채택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되었으며, 양자 및 다자간 안보협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양자간 안보협력과 관련, 1994년 미·러는 태평양 해군의 공동훈련과 블라디보스톡 근해에서의 공동상륙작전 연습, 일·러는 합동해상수색 구조훈련 등을 각각 최초로 실시하였다. 1996년 4월 정상회담에서 중·러 양국은 1991년 체결된 「중·소 동부국경협정」과 1994년 체결된 「중·러 서부국경

103) 1992년 1월 「토쿄선언」에서 미·일간 세계적 동반자관계, 동년 2월 「캠프 데이비드선언」을 통하여 미·러간 동반자관계, 1994년 6월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한·러간 상호보완적 동반자관계 및 1996년 4월 중·러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등이 각각 확립되었다.

협정」의 준수 등에 합의함으로써 상호신뢰관계를 증진시키고 있다. 한국도 또한 1993년 이후 러시아와의 軍事交流를 확대하고 있으며 1994년부터 일본과의 군사교류를 시작하였다. 다자간 안보협력과 관련, 미·일·러 3국은 연례 안보심포지움을 통하여, 또한 한·미·일·중·러 5국은 NEACD를 통하여 냉전종식 이후 동북아질서 재편에 대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면에서는 「社會主義 市場經濟」를 표방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한국의 북방정책,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극동개발정책, 일본의 아·태 경제통합 가능성 모색 등으로 양자간 및 다자간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냉전종식 이후 동북아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와 같은 정세와 관련, 러시아는 대립적인 양극구조가 광범위한 정치적·경제적 협력을 지향하는 새로운 국제체제로 대체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상이한 국가간의 정치적·전략적·경제적 제반관계가 상호 의존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역내국가들과 善隣關係를 유지하고 역내 경제협력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¹⁰⁴⁾

(2) 美國의 일방적 이익확보와 日本의 역할 증대

러시아는 미국과 동반자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이 동북아지역에

104) Alexander Z. Zhebin, "Mult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Russia," 「지역연구논총」, 제6집 (1994), p. 158; Alexander Kislov, "Russia and Northeast Asia,"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XXIII, no. 4 (Winter 1992), pp. 535~536.

서 군사적 질을 개선하고 한·일 등 동맹국들의 군사잠재력을 향상 시킴으로써 역내에서 지도적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여 왔다. 또한 러시아는 역내에서 미국의 주요 정치·군사 동맹국인 일본이 군사력을 점차 강화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安保概念에 따라서 장기정책 목표를 21세기에 아·태 및 동북아지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강대국이 되는데 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¹⁰⁵⁾

실제로 미국은 소련의 붕괴로 인한 전략적 공백상태의 발생을 방지하고 북한의 돌발적 행동 등 지역적 우발사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본 및 한국과의 安保同盟關係를 공고히 유지하면서 역내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일본을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1993년 6월 유엔에 안보리 개편안을 공식 제의하는 등 일본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역할증대를 유도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일본은 군비증강, 유엔 平和維持活動(PKO)을 위한 자위대의 캄보디아 및 모잠비크 파견 등을 통하여 자국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러시아는 1992년말 이후부터 자국의 국익과 강대국 지위 유지를 강조하는 독자외교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아·태 지역에서 러시아는 이 당시 민주주의라는 공동가치와 지역안정 유지에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동 지역에서 안보확보를 위한 책임을 러시아와 분담하여 주기를 희망하였다.¹⁰⁶⁾ 이러한 러시아의 의도는 미국과 전

105) Viktor Stefashin, "Scenarios: Development of the Military-Political Situation in the Far East," *Far Eastern Affairs*, no. 2, 1992, pp. 67~68.

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소련붕괴 이후 약화된 아·태지역에서의 자국 위상을 재확립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미·북과 일·북 접근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는 바, 1994년 10월 「제네바 기본합의문」 채택 이후 미국의 對한반도정책에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다. 데니소프 당시 러시아 외무부 아주국 부국장은 “미국은 러시아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유일국이 되려는 목적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한국 일변도의 외교와 미국 주도의 한반도문제 해결에 반대하는 외교를 적극 펼칠 것”임을 천명하였다.¹⁰⁷⁾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 모색과 관련, 러시아는 정치·경제 면에서는 美·日 同盟體制¹⁰⁸⁾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일본으로부터의 경험유도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를 제한적으로 용인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군사·안보 면에서는 일본과의 역사적 적대관계 및 역내 패권국가의 등장 견제라는 측면에서 일본의 역할증대를 자국의 군사전략, 역내국가들과의 공동군축 또는 지역안보체제 형성, 대일 신뢰구축 등을 통하여 억제하려 하고 있다.¹⁰⁹⁾

미·일은 1996년 4월 17일 「新安保共同宣言」을 채택하고 아·태지역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10만명의 병력을 동 지역에 전

106)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2 December 1992, p. 4.

107) 「중앙일보」, 1994. 11. 9.

108) 1996년 4월 「미·일 신안보공동선언」 발표 이전의 미·일 동맹체제를 의미한다.

109)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서는 길정우 등,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와 동북아질서 -1990년대 동북아질서 예측(II)-」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p. 287~346 참조.

진배치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한편, 동북아지역의 유사시에 대비하는 방위협력과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 관여하는 신안보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 러시아 정부는 미·일 양국이 아·태지역 강대국으로서 러시아의 역할을 인정한다는 점과 러시아의 개혁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내용에 포함하고 있는 동 선언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동시에 러시아는 미·일 안보협력이 아·태지역으로 확대되는 점과 관련, ‘추가적인 검토를 요하는 문제’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논평을 거부하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¹¹⁰⁾ 그러나 러시아는 4월 25일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 미·일 新安保體制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3) 韓半島 상황의 不安定

한반도에서는 「제네바 기본합의문」 채택 이후 미·북간 관계개선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경제난과 김일성의 사망으로 체제위기에 직면해 있는 북한이 관계개선을 계속 거부함에 따라서 남북한간에는 냉전시대의 相互不信과 적대감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냉전종식 이후 동북아 안보질서의 특징들 중 하나는 이와 같은 한반도 상황의 이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러시아는 자국이 지리적으로 단지 한시간 반의 비행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간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한반도 상황이 안보면에서 특별한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있다.¹¹¹⁾ 특히 러시

110)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19 April 1996, pp. 25~26.

111) Gueorgui F. Kounadze, "Russia's Foreign Policy in Evolving World and

아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이 자국의 국내개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한반도 안정을 위한 제반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첫째,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미국 등 서방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남북한과 미·일·중·러·유엔 및 「國際原子力委員會」(IAEA)가 참여하는 「8자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¹¹²⁾ 둘째,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이후에도 러시아는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한반도와 관련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기 위한 국제회의의 개최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¹¹³⁾ 셋째, 러시아는 북한의 돌발적 행동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한반도의 분쟁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61년 체결된 「朝·蘇 同盟條約」을 1996년 9월 10일 폐기하였다. 이 대신 러시아는 냉전종식 이후 동북아 신국제질서에 상응하고 남북한에 대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군사면이 배제된 새로운 우호협력조약을 북한측에 제시하고 있다.¹¹⁴⁾ 넷째, 러시아는 40여년간 유지되어온 휴전협정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당사자인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4) 領土紛爭 가능성

냉전종식 이후 동북아정세와 관련하여 러시아가 우려하는 사안들

Prospects of Russia-Korea Relationship,” 「외교」, 제31호 (1994. 9), p. 164.

112)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rch 25, 1994, p. 2.

113) 「동아일보」, 1996. 9. 1.

114) Kounadze, “Russia’s Foreign Policy ……,” pp. 165~166.

중의 하나는 역내국가들간의 영토분쟁 가능성이다. 러시아는 침예한 영토분쟁이 중·러, 일·러, 일·중, 중·북한, 한·일, 남북한, 중·대만간에 계속되고 있으며, 새로운 분쟁이 몽골·러간에도 나타날지 모른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¹¹⁵⁾

러시아가 현재 중시하는 것은 자국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 중국 및 일본과의 영토문제이다. 중·러 양국은 1996년 4월 북경 정상회담을 통하여 1991년 5월 체결된 「中·蘇 東部國境協定」과 1994년 9월 체결된 「中·러 西部國境協定」을 엄격히 준수하기로 합의하고,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일부 국경선 확정문제는 대화를 통하여 공정하게 해결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¹¹⁶⁾ 그러나 일·러간 북방 4개도서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구소련은 1960년 「美·日 安保條約」의 갱신 이후 일·소간에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되자 미야자와 일본 수상은 1991년 12월 27일 옌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 정부가 러시아를 구소련의 법적 계승국으로 공식 인정한다는 것을 밝히고 북방영토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였다. 러시아도 대일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평화조약체결의 경우 북방영토 2개섬 하보마이와 시코탄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1956년 10월 19일 「日·蘇間 共同宣言」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북방영토 문제가 러시아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에 양국 정부는 수차례 걸친 실무자협상을 갖고 ‘합법성과 정의’를 기초로 북방영토와 평화조약 문제를 1990년대 말까지 해결하기

115) Stefashin, "Scenarios: ……," p. 72.

116) 「중·러 공동성명」 내용은 「조선일보」, 1996. 4. 26 참조.

로 합의하였다.¹¹⁷⁾

그러나 북방영토 문제에 대한 양국간 입장차이가 평화조약 체결과 일본의 대러 경협에 대한 최대 장애요인으로 아직도 남아 있다. 북방영토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옐친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인 1990년 1월 동경 방문시 소련에 의한 영토문제 존재인정, 자유무역지대로의 전환, 비군사화, 평화조약 체결, 차세대에 의한 전면적 해결이라는 「5段階 解決方案」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¹¹⁸⁾ 반면 일본은 북방 4도에 대한 러시아의 일본주권 인정과 평화조약 체결시 시코탄·하보마이 2개섬 양도 및 쿠나시리·에토로후 2개섬 이양일자 명시, 쿠나시리·에토로후 2개섬 양도라는 「2단계 공식」을 제시하고 있다.¹¹⁹⁾

동북아정세에 대한 상기와 같은 인식하에서 러시아는 동북아지역이 국가간의 효과적인 상호의존과 협력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전제조건들을 아직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미해결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러시아는 세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 차원에서 새로운 변화와 도전들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역내국가들이 단순한 「平和共存」(peaceful coexistence) 상태를 초월하여 「평화적 공동발전」(peaceful codevelopment)을 위한 효과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²⁰⁾ 러시아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형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는 바, 이를 역내국가들의 평화적 공동

117)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2 March 1992, p. 16.

118) Vladimir Ovsyannikov, "USSR-Japan," *New Times*, no. 6, (February 6~12, 1990), pp. 20~21.

119) Sergey Agafonov, "V Tokio nastai vayut: snachala ostrova, potom pomoshch," *Izvestiya*, 1992. 4. 20, p. 4.

120) Stefashin, "Scenarios: ……," p. 544.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장치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 東北亞 平和體制에 대한 러시아의 立場

러시아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형성을 역내국가들의 평화적 공동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장치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고 전제할 때, 동북아 평화체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에 대한 입장에서부터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인들은 구소련시대 이래로 아시아지역에서의 안보확보와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집단안보체제 형성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다.¹²¹⁾ 러시아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양자간 및 다자간 협의를 통하여 동북아를 비롯한 아·태지역의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구소련시대와의 차이점은 구소련이 동북아지역에서 미·소·일·중·남북한이 참여하는 지역안보체제 형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반면, 러시아는 현재 동북아지역을 비롯한 아·태지역의 집단안보체제 구축이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국의 정치·경제 불안정으로 현단계에서는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안보기구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과 미국이 아·태지역에 대한 兩者間 軍事同盟條約을 견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러시아가 고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러시아는 현

121) 구소련의 아시아 집단안보체제에 대한 구상은 1969년 브레즈네프의 「아시아 집단안보 구상」, 고르바초프의 1985년 「전아시아회의」 제안과 CSCE 모델의 「태평양회담」 제안(1986년 블라디보스톡 연설) 및 「아·태안보협의기구」 창설제안(1988년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 등을 통하여 나타난 바 있다.

재 단기적으로 동북아 및 아·태지역에서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역내 안보문제에 관한 논의와 의견교환을 위한 메카니즘을 창출하려 하고 있다.¹²²⁾

동북아지역과 관련, 티타렌코 「러시아 極東問題研究所」 소장은 미·일·중·러·남북한이 역내 안보와 경제 및 기타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協力安보體制」(system of cooperative security)의 형성을 주장한 바 있다.¹²³⁾ 엘친 대통령은 1992년 11월 방한시 국회연설에서 분쟁방지를 위한 아·태 지역안보협의체의 준비단계로서 동북아국가 간의 「多者安保協議體」(multilateral security consultations)를 제의하였다. 그는 국제적 무력분쟁 조정기구와 지역전략 연구센터의 설립을 요구하였으며, 러시아가 방위에 필요한 수준까지 극동 군사력을 감축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와 함께 그는 한반도를 러시아를 포함한 역내 강대국들의 보장하에 있는 대량살상무기 자유지대로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¹²⁴⁾ 러시아인들은 구소련시대부터 접경지역을 비핵지대로 만들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는 바, 이러한 한반도 비핵화정책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쿠나제 당시 외무차관이며 현 주한대사도 역내국가에 있는 안보문제 전문가들의 「多者間 協議體」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¹²⁵⁾ 이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러시아측 제의는 남북한과 미·일·중·러

122) 파노프 前주한 러시아대사의 인터뷰 참조 *Defense News*, January 25~31, 1993, p. 38.

123) Mikhail L. Titarenko, "Disintegration of the USSR: Its Impact on the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and the Russian Policy in the Region," a paper prepared at the Fifth ISSS-IFES Joint Conference, Seoul, Hotel President (October 13~14, 1992), p. 7.

124) *The Korea Herald*, November 20, 1992.

6개국이 참가하는 「北亞·太安保協議體」 창설로서, 이를 위하여 러시아는 관련 당사국들의 의견을 타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²⁵⁾ 현재 러시아는 전술한 바와 같이 비정부간 동북아 역내국가들의 안보대화인 NEACD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의 이러한 정책은 현존의 양자간 안보체제를 견지하려는 미·일·한 등 역내국가들의 입장을 수용하는 한편, 대미 군사 긴장완화 유도, 일·중의 군사력 증대 견제, 한반도에서의 분쟁방지, 역내 안보위협 제거 및 자국 영향력 증대 등의 목적들을 달성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는 이와 같이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의 창설을 도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광역차원에서 아·태지역에 유엔헌장하에 효과적인 평화유지 능력을 보유한 「地域安保共同體」(regional security community)의 형성을 희망하고 있다. 러시아의 이러한 희망은 1993년 7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EAN-PMC에 협의대상국 자격으로 참석한 당시 코지레프 외무장관에 의하여 개진되었다. 또한 그는 엘친 대통령이 방한시 제의한 바와 같이 위기상황 방지와 군사정보 교환 및 비정규 군사활동의 협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분쟁방지센터의 창설과 지역전략연구센터의 설립을 제안하였다.¹²⁷⁾ 이와 함께 러시아는 현재 아·태지역 최초의 정부간 안보협의기구로서 1994년 출범한 ARF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바, 「地域安保共同體」 형성 의도와 ARF 참여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 아·태지역에 전통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클

125)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8 December 1992, p. 11.

126) 「중앙일보」, 1995. 5. 17.

127)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26 July 1993, p. 3.

런던 미대통령이 1993년 7월 동 지역에 정치·경제·군사 협력체제의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신태평양공동체」 구상을 발표하였다. 러시아는 아·태지역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지속하려는 미국의 정책을 「新太平洋共同體」 구상에 찬성하지 않는 ASEAN 국가들과 함께 견제하려는 것이다.

둘째, 서방시장들이 러시아에 폐쇄적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ASEAN 국가들이 공동 노력으로 이룩한 경제발전에 이해를 갖고 이들과 동반자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무역·경제관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동북아 뿐만 아니라 동남아를 포함한 전 아·태국가들과 균형된 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아·태지역의 안보와 경제통합 과정에 참여하여 소련 붕괴로 약화된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넷째,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국가들에 대한 무기수출과 군사기술 판매를 통하여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¹²⁸⁾

러시아는 상기와 같이 동북아지역 차원에서는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그리고 아·태 광역차원에서는 「亞·太地域 安保共同體」의 형성을 각각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러한 희망이 역내국가간의 상이한 이해로 가까운 시일내에 성취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동북아를 포함한 동아시아지역의 세력균형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즉, 러시아는 태평양 연안지역에 적정수준의 자국 군사력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¹²⁹⁾ 주한 미군을 비롯한 역내 주둔미군을 지역

128)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22 July 1993. p. 8; 26 July 1993, p. 2 등 참조.

129) 「중앙일보」, 1995. 3. 19. 또한 러시아는 현재 항공모함 1척만이 있는 태평양 함대에 내년초 항공모함 1척과 현대식 군함 수척을 추가 배치하는 등 소련

안정을 위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¹³⁰⁾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과의 관련, 러시아가 주목을 끄는 것은 역내국가들중 동북아지역 다자안보대화에 가장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러시아 내 일부 학자들이 정부차원의 다자안보대화가 형성되는 경우 다루어질 수 있는 의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러시아 極東問題研究所」의 체빈 연구위원은 군사적 신뢰구축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① 무기감축, ② 핵과 미사일 확산 문제, ③ 핵물질의 보안문제, ④ 원자력 발전소 개발문제, ⑤ 무기거래 문제, ⑥ 環境保護, ⑦ 해양자원의 보호, ⑧ 人權問題 등을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에서 다루어야 할 의제로 제의하고 있다.¹³¹⁾

5. 北韓

가. 東北亞 安保情勢 認識

내부 체제위기와 대외고립 국면에 처하여 있는 북한은 동북아정세가 대체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1980년대 말 이래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몰락과 소련의 해체가 자신의 안보환경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고, 한국의 대중·러 관계정상화 등 對北韓 孤立化 정책으로 자신의 대외활동 범위가 제약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¹³²⁾ 또한 북한은 역내국가간

붕괴 이후 처음으로 해군력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조선일보」, 1996. 6. 8.

130) *Defense News*, January 25~31, 1993, p. 38.

131) Zhebin, "Mult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Russia", pp. 164~168.

정치·군사적 불신, 한반도의 비대칭적 대외관계 및 중국과 북한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平和的 移行戰略도 동북아시아 국가간 긴장관계를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1) 역내국가간 정치·군사적 불신 지속

북한은 冷戰終熄 이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 긴장국면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역내국가간 정치·군사적 불신관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역내의 일부 국가 사이에 다른 국가를 상대로 하는 군사동맹체제가 지속됨으로써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영토문제, 일본의 과거사 인식, 그리고 강대국의 霸權政策 등도 지역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지속을 자신의 안보와 지역평화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대미접촉을 통하여 한·미 동맹의 이완을 모색하고 있으며, 미·일간 「新安保共同宣言」에 대해서도 “아세아태평양지역에서 랭전구조를 되살려 대결구조와 랭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며 철두철미 침략적이며 지배주의적인 범죄적 문서”라고 비난하고 있다.¹³²⁾ 이미 러시

132) 그러나 북한의 관영언론들은 여전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경쟁에서 사회주의체제가 패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 “반체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403~420.

133) 백문규, “침략적이며 지배주의적인 공동문서,” 「로동신문」, 1996. 4. 27; 강철수, “지배주의적 야망은 변하지 않았다,” 「로동신문」, 1996. 8. 31.

아와의 군사동맹조약이 폐기되고 한·중수교 이후 중국과도 안보동맹의 심도가 약화된 상황에서 한·미·일 3국간 안보동맹 지속은 북한에게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釣魚臺列島와 독도문제 등 영토주권을 둘러싼 역내국가간 마찰도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잠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南沙群島문제나 북방4도문제 등 자신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문제에 개입할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조어대열도와 독도 영유권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북한은 조어대열도 영유권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¹³⁴⁾ 북한은 이들 도서에 대한 일본의 무리한 영유권 주장이 지역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일본이 과거사를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고 역내에서 정치·군사 대국화를 기도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對日 修交交渉을 전개하면서 일본의 과거사문제를 거론하여 왔으며,¹³⁵⁾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에 대하여도 “해외에 대한 확장 야욕을 기도하는 것”이라면서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¹³⁶⁾ 북한은 일본이 진정으로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역내에서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를 용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34) 통일원, 「주간 북한동향」, 제293호 (96. 8. 10~8. 16), pp. 24~27.

135) 「로동신문」, 1993. 10. 23; 통일원, 「주간 북한동향」, 제192호 (94. 8. 28~9. 3), pp. 27~30.

136) 백문규, “과거청산 없이는 절대로 안된다,” 「로동신문」, 1996. 9. 2.

(2) 韓半島의 비대칭적 대외관계 존속

국제무대에서 한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북한은 한반도를 둘러싼 비대칭적 대외관계가 자신의 안보 뿐만 아니라 지역안정에 가장 심각한 위협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동구 사회주의권과의 접촉을 통하여 북한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던 北方政策에 의거하여, 한국은 이미 1990년 러시아와 국교를 정상화하였고, 1992년에는 중국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한국은 러시아와 정치·경제적 교류 뿐만 아니라 군사·안보면에서도 활발한 접촉을 전개하여 왔다. 러시아는 한국의 대러차관 상환조건으로 한국에게 군사무기를 제공하여 주고 있으며, 한국과 군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에도 임하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관계 심화로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구축됨으로써 러시아는 1961년 체결된 북한과의 기존 군사동맹조약을 1996년 9월 10일부로 폐기하였다.¹³⁷⁾ 러시아는 체제 변화로 인하여 사회주의권과 더 이상 긴밀한 관계유지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은 바, 북한에 대하여 과거와 같은 형태의 정치·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援助中斷이 북한의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국제환경 요인이 되었음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¹³⁸⁾

북한의 최후 國際革命 지원역량으로 간주되고 있는 중국이 1992년 8월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사실은 북한에게 심각한 타격을 미쳤

137) 여인곤,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 폐기의 의미와 평가」, pp. 7~19 참조.

138) “위대한 혼연일체,” 「로동신문」, 1994. 8. 24.

다. 중국은 러시아의 대한국 수교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상실을 초래하였던 사실을 거울삼아 한국과 수교 이후에도 북한 무마정책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한지도부는 중국의 江澤民 지도부가 사회주의적 연대보다도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여 ‘피로 맺은 血盟國’을 배신하였다고 비난하면서 고위층 인사교류 등 중국측의 요청을 거부하여 왔다.¹³⁹⁾ 중국은 아직도 북한과 긴밀한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에 대하여 정치·경제·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중국과 한국간에 전개되고 있는 정치·경제적 접근은 북한의 외교적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과거 동맹관계에 있었던 러시아와 중국이 적화통일의 대상인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함으로써 국제적 활동범위의 제약을 받게 된 북한은 미국과 일본 등 西方國家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대외적 고립을 해소하려 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에서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미·일이 북한에 대하여 적대적인 정책자세를 변화시키지 않고 있는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¹⁴⁰⁾ 따라서 북한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자신을 겨냥하는 敵對勢力으로 간주하고 있으며,¹⁴¹⁾ 한·미간 합동군사

139)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 1994. 11. 1; 『로동신문』, 1995. 6. 10.

140) 강석주 북한 외교부 부부장은 미·북 기본합의서의 서명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미 두나라 사이의 비정상적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신뢰를 조성하며 조선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사적 문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앙방송』, 1994. 10. 23. 통일원, 「주간 북한동향」, 제 200호 (94. 10. 23~10. 29), p. 3에서 재인용.

141) 그러나 최근 북한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주한 미군을 용인하는 자세를 내비치고 있다. 한호석, “개입·확장 전략과 협상·공존 전략의

훈련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난하여 왔다. 북한은 여전히 미국이 자신과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적대적인 정책을 지속할 경우에는 경수로 공급협상을 파기할 수 있다는 벼랑끝 外交戰略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통하여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해 비무장지대에 대한 군사도발과 대남 무장공비침투 등 한반도 停戰體制의 무력화를 기도하고 있다. 북한은 대미관계가 개선되어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대외관계가 대칭적인 상태로 변화될 때, 즉 자신의 국제적 고립상태가 해소되어야만 한반도 정세가 안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平和移行」戰略 전개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 국제적 고립상태에 처한 북한은 자신의 체제방어에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자신과 중국의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平和移行」 전략도 자신의 체제안정과 동북아지역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¹⁴²⁾

이와 같은 북한의 국제질서 인식은 북한으로 하여금 서방 자본주의국가에 대한 접근을 신중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대외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으나, 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 帝國主義의 경제적 침투를 배격하

대치, 그리고 한반도 통일정세의 변동방향,” 미주평화통일문제연구소 Homepage 입수자료 (1996. 5).

142)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허문영, 「북한 지도부의 정세인식 변화와 정책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78~79 참조.

기 위하여 극히 제한적인 범위내에서만 경제개방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정일은 북한에 대해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와 平等·互惠의 원칙에 입각하여 경제교류·협력을 모색하지만, 제국주의의 경제적 침투는 철저히 배격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¹⁴³⁾

북한은 미국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소위 북한에 대한 軟着陸政策도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체제변혁을 유도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한국으로부터의 경제지원 확보에 소극적인 이유도 자신의 체제유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지도부는 “서방 자본주의 나라들의 원조와 협력에 기대를 걸면서 제국주의자들에게 아부 굴종하는 것은 반동적인 부르조아적 관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¹⁴⁴⁾

나. 東北亞 平和體制에 대한 北韓의 立場

북한은 내부체제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외침략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평화에 대한 최대 위협국가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대내 정치·경제적 위기국면에 처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외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다. 북한은 對南 赤化統一政策을 포기하지 않고 있지만, 자신의 대내외정책 목표추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역내 평화질서가 구축되기를 바라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북한은 동북아지역 국가간 정치·군사적 불신과

143)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1991. 5. 27.

144) 「로동신문」, 1994. 11. 1.

한반도 정전체제 유지를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역내 平和體制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역내국가간 정치·군사적 불신이 해소되어야 하며,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¹⁴⁵⁾ 즉, 북한은 대미·일 관계개선을 통하여 자신의 국제적 고립국면이 해소되고 미·일의 霸權政策이 사라져야만 역내 평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동북아지역의 평화체제 조성을 위한 전제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역내 평화유지를 위한 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지역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기구 구성에 반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기구가 자신의 국익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즉, 북한은 지역 평화를 위한 다자간 국제기구가 자신의 내부문제에 사사건건 개입하여 압력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1993년 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을 통하여 “전아세안안보협조회의 창설구상은 미국이 아세아에서 사회주의 나라들을 말살하고 이 지역에서 자기의 지배권을 확립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지역 多者安保協力機構 창설에 반대하고 있다.¹⁴⁶⁾ 동유럽과 소련 社會主義體制 붕괴 이후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서방세계에 의해서 주도되는 지역 다자안보협력기구 형성 움직임은 단지 자신의 안보이익을 위협하는 '새로운 빨럭'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¹⁴⁷⁾

145)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는 강원식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 12~25 참조.

146) 리석윤, “무엇을 위한 전아세안안보협조회의 창설구상인가,” 「로동신문」, 1993. 3. 13.

따라서 북한은 동북아지역 다자안보협력기구가 미·북관계 개선이후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993년 7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고 분교 주관하에 개최된 NEACD 준비회의에 참석한 북한 김종수 유엔주재 부대사는 한·미간 팀스피리트훈련의 영구폐지와 미·북관계 개선을 주장한 바 있다.¹⁴⁸⁾ 또한 석창식 북한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은 1996년 2월 네팔에서 개최된 제8차 「유엔 아태지역 軍縮會議」에서 미·일과 외교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 다자안보협력기구에의 참여는 북한에 대한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참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⁴⁹⁾ 즉, 북한은 역내 안보문제를 다자기구에 의해서 해결하기 보다는 우선 양자간 협의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현재 역내 다자안보협력보다는 대미관계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역 다자안보대화를 역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만회하고 한국에 대한 外交攻勢를 강화하기 위한 계기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역내 다자안보대화에 참여하더라도 지역의 평화정착보다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자안보대화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주요 목적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역내 다자안보대화에서 내부 인권문제와 체제문제가 다루어져서는 결코 안된다는 자세를 보일 것이다. 북한은 미·일과의

147) 「로동신문」, 1993. 6. 16.

148) 이는 당시 동 회의에 한국측 대표일원으로 참석하였던 이정민 박사에 의해 민족통일연구원 원내 세미나(1993.8.5)에서 확인되었다.

149) 「아태 군축회의」에 참석한 바 있는 이서항 교수가 민족통일연구원의 원내 세미나(1996.7.25)에서 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필자가 중국 방문시(1996.7.11) 중국 외교부의 「국제문제연구소」 동아연구실장인 沈世順도 미·북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이 NEACD에 참여할 것이라는 점을 천명하였다.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人權問題와 체제문제가 논의될 경우,¹⁵⁰⁾ 역내 다자안보대화가 북한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작용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역내 다자안보대화가 한반도 내부분제를 다루는 기구로 발전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철저하게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대남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북한은 한반도문제가 다자간 국제기구 등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해결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북한은 1950년 미국의 주도하에 결성되어 한국에 파병된 유엔군의 해체를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으며, 1994년 러시아가 제안한 8자회담에 반대하는 등 다국간 협의를 통한 한반도문제 해결 제의에 반대하여 왔다.¹⁵¹⁾ 1996년 4월 한국과 미국에 의해서 제의된 4자회담에 대하여 북한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기인하고 있다.¹⁵²⁾ 다시 말해서, 북한은 한반도문제가 다자적 틀내에서 다루어지게 될 경우,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를 심화시켜 南北分斷을 고착시킬 가능성이 증대된다고 보고 있다.

6. 綜合評價

아태 및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 문제에 대한 이상과 같은

150)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는 「로동신문」, 1995. 12. 7 참조.

151) 1994년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를 남북한·미·일·중·러·국제원자력기구 및 유엔 등 8자간에 해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152)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1996년 4월 18일 한반도 평화보장문제는 북·미 사이에 토의·결정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논리를 통하여 4자회담 제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일원, 「주간 북한동향」, 제276호 (96. 4. 13~4. 19), pp. 3~5.

한반도 주변4국과 북한의 상이한 입장들을 한국의 입장을 포함하여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과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역내국가들은 아·태지역에 다자안보협력체를 형성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나, 논의의제나 제도화과정 등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 성과가 도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ARF와 APEC에 참여하고 있고 북한도 ARF에 참여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협의체들을 기반으로 하여 아·태지역의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을 위한 논의가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아·태지역에 대한 것과 비교할 때 동북아지역에 다자안보협력체를 수립하려는 역내국가들의 의지는 미미한 상태이다. 쌍무적 동맹관계를 기초로 역내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이 동북아지역의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을 위하여 세부적인 의제, 협의범위 등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가 없다. 단지 한국과 러시아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수립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역내국가들이 민간차원의 다자간 안보대화인 NEACD에 적극 참가하고 있고, 북한도 이에 대한 참가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북아 역내국가들이 냉전종식 이후 포괄적 안보개념에 따라서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인내력을 가지고 역내의 모든 국가들이 만족할 수 있는 속도와 방법으로 타협점을 찾을 때 정부차원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표 2> 지역 안보협력에 대한 각국의 입장

국명	제안유형	참가국 범위	논의의제	제도화과정	기타사항
미국	· 아태: 「신태평양 공동체」 · 동북아: 구체적 제안없음	· 아태국가들	· 핵확산금지, 무기 판매, 민주주의와 인권 등 · 전통적 안보위협 요인 중심으로 국제갈등 해결	· APEC을 통한 「신태평양공동체」 모색 · 소지역차원의 다자안보협력	· ARF참여 · NEACD의 적극 후원 · 한-미, 미-일 동맹 중시 · 한국의 NEASED 제안 지지
일본	· 아태: 아시아판 다자안보협력기구 · 동북아: 구체적 제안없음	· 아태국가들	· 핵확산금지, 미사일 기술통제, 북방영토문제 등	· 한-미-일 안보협력 통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 미-일 동맹, ARF 중시 · 민간차원의 동북아 비핵지대안 제시 · NEACD 적극 참여
중국	· 아태: CSCE유형의 포괄적 안보협력체에 소극적 입장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소극적 입장		· 남사군도, 홍콩, 대만, 인권문제 등 논의시 강대국의 간섭 초래 우려	· 양자관계 신뢰 회복 통한 다자관계 형성 · 장기적 제도화 추진	· NEACD, ARF 참여 · CSCAP 불참
러시아	· 아태: 「아태지역안보협의체」 또는 「지역안보 공동체」 · 동북아: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북-아태안보협의체」	· 아태국가들 · 동북아 6국	· 무기감축, 핵과 미사일 문제, 해양자원보호, 인권 · 분쟁방지센터와 지역전략 연구센터 설립	· 동북아지역으로 부터 아태지역으로 확대	· 한반도 비핵화 주장 · ARF, NEACD 참여 · APEC 참여 신청중
북한	· 아태: 전아시아 안보협력회의 반대 · 동북아: 다자안보 논의 반대			· 미-북관계 정상화 이후 동북아 안보협력 논의 가능	· NEACD 불참, 참가 의사 표명 · ARF 참가 타진중 · CSCAP 참여 · 한반도문제 관련 4자회담 반대
한국	· 동북아: NEASED제의	· 동북아 6국	· 포괄적 현안논의		· 한-미 동맹 중시 · ARF, NEACD 적극 참여

第IV章 새로운 東北亞 平和體제의 造成方案

본 장에서는 동북아지역 평화체제의 조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선 먼저 지역 평화체제 형성이론을 개괄하고 유럽의 경험(CSCE/OSCE)과 동남아의 경험(ARF)의 고찰·분석을 통해 동북아 평화체제의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조성방안을 강구·제시해 보기로 한다.

1. 地域 平和體制 形成의 理論과 事例

가. 平和의 概念과 地域 平和體制

(1) 平和의 概念

지난 수 십년 동안 전쟁 성격의 근본적인 변화 때문에 평화의 의미도 많이 변천되어 왔으나, 오늘날 일반적으로 평화의 개념은 消極的 平和(negative peace)와 積極的 平和(positive peace)로 구분된다. 153) 인류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 핵 위협, 강대국간 군비경쟁, 제3 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전쟁과 군사행동 등에 직면하여 평화연구는 우선 '戰爭의 不在'로서 이해되는 소극적 평화개념을 발전시켰다. 소극적 평화나 전쟁부재는 분쟁들이 군사적 무력수단에 의하지

153) Egbert Jahn, "Frieden," in Dieter Nohlen (Hrsg.), *Pipers Woerterbuch zur Politik I Politikwissenschaft* (Muenchen: R. Piper GmbH & Co. KG, 1985), p. 254.

않고 조정·해결되는 상태를 말하며,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점이 특히 중요하다.

첫째, 지역이나 세계 평화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이해되거나 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군비와 군사화 및 군조직에 대한 제반조치들이 분석대상이다. 둘째, 소극적 평화개념은 분명히 인식될 수 있고 국제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직접적 군사무력의 사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개별적·집단적 자위조치는 평화개념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의 능력과 정치적 의지 그리고 구체적 행동은 구별되어야 한다. 셋째, 和解와 평화유지 및 평화구축을 위한 전략들은 군사분쟁의 제한, 신속한 종식, 장기적 방지에 집중되어 있다. 넷째, 군사무력의 사용은 질과 양 및 강도에 따라서 구별될 수 있으며, 최후통첩이나 군사적 협박은 군사무력의 간접적 사용으로 이해된다.¹⁵⁴⁾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평화개념은 ‘批判的 平和研究’를 통하여 적극적 평화개념으로 발전되었는 바, 적극적 평화는 일반적으로 ‘구조적이고 현실적인 폭력(structural and actual violence)의 不在’를 의미한다. 현실적 폭력은 사람과 물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른 위해나 파괴로부터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폭력이다. 반면 구조적 폭력은 부당한 통치를 유지시키는데 이바지하고 단지 간접적으로, 즉 自決과 자기실현의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추론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는 구조들이다. 구조적 폭력은 객관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주관적으로는 인지되지 않기 때문에 조정·해결되지 않는 紛爭潛

154) Reimund Seidelmann, "Frieden, Freiheit und Gerechtigkeit: Normative Postulate der Internationalen Beziehungen," in Manfred Knapp und Gert Krell (Hrsg.), *Einfuehrung in die Internationale Politik* (Muenchen: R. Oldenbourg Verlag, 1990), pp. 31~32.

在力을 갖고 있다.¹⁵⁵⁾

積極的 平和概念에서는 이와 같이 현실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이 구별됨으로써 소극적 평화개념에서의 폭력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었다. 또한 이러한 확대된 폭력개념의 적용은 국제정치와 외교정책 연구에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새로운 현상을 가져오게 하였다. 첫째, 가격명령과 같은 형태의 경제적 폭력, 차관 도입시 정치적 부담의 부가, 무역전쟁, 외래문화의 침투와 같은 사회·문화적 폭력 등 비군사적 폭력형태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둘째, 「바르샤바 조약기구」(WTO)와 같은 군사동맹, 선진산업국가들에 대한 발전도상국들의 종속, 식민주의나 제국주의적 통치구조 등에서 인지되는 구조적 폭력은 국제관계에서 권력과 지배의 문제를 다시 고찰하도록 하였다.

국제관계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구조적 폭력을 극복하고 적극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부 학자들은 革命解放運動이나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한 제3세계 국가들의 요구를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평화개념은 이와 같이 구조적 폭력의 극복까지도 포함하는 적극적 의미의 평화가 아니라 분쟁들이 군사적 무력의 사용없이 조정·해결되어 전쟁이 없는 상태인 소극적 의미의 평화이다.

(2) 平和理論과 지역 평화체제

전쟁의 발발을 촉진하는 요인들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는 것과

155) Ibid., p. 34.

마찬가지로 평화를 촉진하는 요인들을 밝혀내고 무력수단의 사용을 배제시킬 수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다. 이러한 평화이론들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의 중점을 사회적, 정치적, 기타 구조적 所與性에 두는 구조이론들과 국가나 정치가의 심리적, 사회심리적 행동에 두는 行動理論들로 구분된다. 또한 이러한 구조이론과 행동이론들은 개인차원, 사회차원, 범국가차원, 국가차원, 체제차원 등의 분석차원에 따라서도 구별된다.¹⁵⁶⁾

<표 3>에 나타나 있는 여러가지의 평화이론들 중 세력균형이론과 국제기구는 평화체제 또는 평화질서에 관한 학문적, 실질 정치적 논의에서 이미 주요한 역할을 한 바 있다.

勢力均衡理論(Balance-of-Power Theory)의 핵심은 어느 국가도 타국을 지배할 수 없을 정도로 군사력이 분배되어 있을 때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일국이나 2개국 이상의 연합이 타국들을 위협할 정도의 권력을 획득하는 경우에 위협을 받는 타국들은 연합하여 패권추구 국가를 억지시킴으로써 균형상태, 즉 평화상태를 회복한다는 것이다.¹⁵⁷⁾ 리커, 모젠소, 굴릭, 왈츠 등 국제정치이론의 현실주의자들이 이러한 세력균형이론의 옹호자라고 할 수 있다.¹⁵⁸⁾

156) 평화이론들에 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Frank R. Pfetsch, *Internationale Politik* (Stuttgart: Verlag W. Kohlhammer, 1994), pp. 281~292.

157) Charles W. Kegley, Jr. & Eugene R. Wittkopf, *World Politics : Trend and Transforma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3), pp. 470~471.

158) William H. Riker, *The Theory of Political Coalitions*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62);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New York: Knopf, 1985); Edward Vose Gulick, *Europe's Classical Balance of Power* (N. Y.: Cornell University Press, 1955);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ss.:

<표 3> 평화이론

분석 차원	구조이론	행동이론
개인적 차원		예측이론 체제수호이론 중재이론
사회적 차원	사회정의이론	
범국가적 차원	자유무역이론	
국가적 차원	레짐이론 분쟁관리이론 중앙집권적 권력이론	역지이론 적용행태이론
체제 차원	세력균형이론 연합이론 국제기구 격지(隔地)이론	조정이론, 중재이론

출처: Pfetsch, *Internationale Politik*, p. 292.

국제정치에서 이러한 세력균형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시대의 아테네와 스파르타간의 적대적 균형으로부터 시작하여 1500년경 이탈리아내 諸國家間의 관계, 16~17세기 프랑스의 외교정책, 1815년 이후 메테르니히 오스트리아 재상의 외교정책, 17~20세기 영국의 大陸政策, 냉전기 동서진영간의 ‘공포의 균형’ 또는 ‘평화공존’ 등에서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1815년 빈 회의 이후의 19세기 고전적 세력균형 시대에도 유럽과 기타 지역에서 다수의 전쟁들이 발발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세력균형이 이루어지면 平和狀態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세력균형은 일정한 조건들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바, 국제정치학자 케글리와 위트코프는 다음과 같은 8가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① 국가간 연합과 해체를 가능하게 하는 다수 독립국가들의 존재, ② 한정된 지리적 영역, ③ 국가지도자들의 행동자유, ④ 비교적 동등한 국가능력, ⑤ 체제의 규칙들이 인정되고 존중되는 공동의 정치 문화, ⑥ 체제내 국가들 사이의 약간의 동질성, ⑦ 전쟁동원을 방지하고 선제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기술, ⑧ 국가들의 정책에 간섭할 수 있는 국제기관이나 초국가기관의 존재.¹⁵⁹⁾

다른 한편, 국제기구의 창설을 통하여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상은 '국제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로티우스와 칸트에 의하여 이미 오래 전에 나타났다. 칸트는 '世界共和國'과 '국제국가' 등의 창설을 주창하였다. 그에 의하면 "국가들이 전쟁을 포함한 무정부 상태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분방한 자유를 포기하고 강제규칙에 따라서 전세계 국민들이 참여하는 하나의 국제국가를 창설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¹⁶⁰⁾는 것이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윌슨 미대통령을 비롯한 이상주의자들은 세력균형을 통한 평화유지를 반대하고 集團安保(Collective Security)¹⁶¹⁾ 원칙에 의한 평화유지를 주장하였는 바, 이러한 원칙의

159) Kegley & Wittkopf, *World Politics*, p. 472.

160) Immanuel Kant, *Zum ewigen Frieden* (Stuttgart, 1979), p. 35.

161) 집단안보는 국가들이 전쟁을 방지하는데 협력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전략으로서 통상적으로 중앙화된 안보장치제도를 채택한다. 일 구성국이 전쟁을 행하는 경우 다른 구성국들은 이를 모든 구성국들에 대한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경제적·군사적 제재를 가하게 된다. 국제연맹이나 유엔이 이러한 집단안보를 주요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Roger Scruton, *A Dictionary of*

구현이 국제연맹의 창설이었다. 이들은 국제기구와 국제법 절차의 발전을 통하여 세계평화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효과적인 권력수단을 갖지 못한 국제연맹은 범규범들을 관철할 수 없었고, 독일과 이탈리아의 파시즘 및 일본 군국주의 앞에 무능함을 드러냈다. 제2차세계대전 직후 집단안보원칙에 의하여 또 다른 국제기구인 유엔이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목적으로 창설되어 기능하고 있으나, 냉전시기에는 동서진영간 이념대결의 장으로서 분쟁을 방지하고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¹⁶²⁾

따라서 어느 정도 공동의 이해와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유엔에 의한 집단안보조치에 만족하지 않고 지리적으로 한정된 범위내에서 지역 안보와 평화를 위한 다자간 접근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 안보 및 평화 유지를 위한 다자간 접근의 대표적인 유형은 集團自衛同盟(Collective Self-Defense)과 協力安保(Cooperative Security)이다.

유엔헌장 제51조는 무력공격이 유엔회원국에 가해진 경우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때까지 회원국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적 자위권의 개념에 따라서 일정한 지역에 성립된 공동방위동맹이 集團自衛同盟이다. 즉, 집단자위동맹이란 다수 국가가 평화 및 질서유지를 목표로 침략에 대비하여 공동대항할 것을

Political Thought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82), p.73; Karl W. Deutsch,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88), p. 228.

162) 유엔은 1980년대 말까지 시도한 분쟁조정들 가운데 단지 2/5만 성공하였다. Kalevi J. Holsti, *International Politics: A Framework for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8), p. 423.

합의한 안보체제이지만, 체제 내의 국가들은 서로 우방관계이고 체제 밖의 침략예상 국가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명확한 적과 동지의 구분 때문에 집단안보와는 구분이 된다. 집단안보의 주요 특징은 적과 동지를 고정시키지 않고 언제라도 적도 될 수 있고 우방도 될 수 있다는 점인 바, 바로 이러한 특성이 약소국들에게는 불안감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약소국들은 집단안보 보다는 집단자위동맹에 더욱 매력을 느낀다. 약소국들은 자국과 정치적 가치를 같이하는 강대국과 확고한 우방관계를 맺어 행동을 같이함으로써 적으로부터의 위협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거나 실제 침입을 받을 시에도 우방 강대국으로부터의 즉각적인 후원을 통하여 자국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¹⁶³⁾ NATO와 WTO가 집단자위동맹의 전형적인 예가 된다.

협력안보는 구성국들간의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豫防外交(preventive diplomacy)¹⁶⁴⁾의 성격이 매우 강하며, 직접적인 문제해결에 목표를 두고 있는 집단안보와는 달리 침략행위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힘을 동원한 강제력이 배제된다. 따라서 협력안보는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구성국들간의 대화지속과 협의과정의 개설을 권장하고 지역안보의 확립을 위하여 다자간 대화가 제도화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¹⁶⁵⁾ 이러한 협력

163) 홍규덕,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9), p. 16.

164) 예방외교는 국가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분규(disputes)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존 분규가 더 큰 분쟁(conflicts)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는 한편,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외교적 행동들이다. Mark M. Lowenthal, "Preventive Diplomacy: Prospects and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March 25, 1993), p. 2.

165) Ashton B. Carter, William J. Perry and John D. Steinbrunner, *A New Concept of Cooperative Security* (Washington D.C.: The Brookings

안보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대표적인 다자간 협력의 유형이 CSCE와 ARF이다.

勢力均衡理論과 국제기구에 의하여 세계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평화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고, 유럽에서는 OSCE에 의하여 그리고 동남아에서는 ARF에 의하여 지역 평화가 어느 정도 각각 유지되고 있다고 전제할 때, 지역 평화체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일정한 지역내 강대국과 소국들간에 세력균형 원칙이 지배하고, 지역적 안보기구가 존재하며, 구성국들이 정치·경제·군사·문화 등의 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결코 무력에 의한 영토확장을 도모하지 않고, 이해충돌에 의한 분쟁의 경우에는 협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으며 필요시에는 분쟁의 조정과 해결을 위한 중재자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의 질서”

協力安保體로서 CSCE는 유럽에서 오랫동안 지역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였으며 최근에는 OSCE로 제도화되어 유엔이 인정하는 지역적 기관으로서 냉전종식 이후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안보위협 요인들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지역에서는 ARF가 창설되어 역내 평화유지와 질서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동북아지역에 평화체제를 조성하는데 원용할 수 있는 시사점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CSCE와 ARF의 사례연구를 하고자 한다.

Institution, 1992); 홍규덕,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pp. 11~13.

나. 事例研究: 유럽(CSCE/OSCE)과 동남아(ARF)

(1) 유럽의 경험(CSCE/OSCE)

(가) 東西冷戰期の 유럽安保 논의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부터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의 시기는 이념과 권력정치 면에서 미국과 구소련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동서냉전기이다. 이 시기에 양국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상이한 목표들을 가지고 대외정책을 추진하였다. 미국의 대외정책 목표는 자국의 영토보호 및 영향력과 해외경제이익의 확대, 자본주의 질서의 안정화, 소련의 힘과 영향력 봉쇄 및 약화, 소련 이외 지역으로의 공산주의 팽창 저지 등이었다. 반면 소련의 對外政策 目標은 외부위험으로부터 자국의 보호 및 국제적 영향력 강화와 확대, 타국내 공산주의 보호와 증진 및 특히 동구권 공산통치의 강화,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들의 영향력 제한과 제거 등이었다.¹⁶⁶⁾

트루먼 미행정부는 1949년 8월 소련의 핵무기 개발에 따른 핵독점 시대의 종식과 소련의 군사력 증강, 한국전쟁의 발발 등에 직면하여 재래식무기 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대규모 증강을 통해 소련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자국의 대외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1949년 NATO의 창설을 주도한 바 있는 미국은 서구

166) Thomas B. Larson, *Soviet-American Rivalr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1978), p. 221.

국가들에 대한 軍事支援을 대폭 확대하였다. 독일의 재무장을 우려하던 대부분의 서구국가들도 한국전쟁 발발 이후 소련으로부터의 군사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서독을 유럽방위계획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한편 1950년대 초에 소련의 스탈린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재래식무기와 핵무기 증강을 통해 자국의 대외정책 목표들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0년대 전반기까지 유럽안보와 관련된 동서진영간의 두가지 논쟁점은 1949년 성립된 동서독의 재통일문제와 한국전쟁 발발에 따른 서독의 再武裝問題이었다. 독일 재통일문제와 관련, 서방과 서독은 자유로운 전독일선거를 기초로 하는 독일통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반면 소련은 1952년 3월 미국, 영국, 프랑스 3국에 독일과의 평화조약체결에 관한 각서를 보내고 무장중립하의 독일통일을 제의하였다. 소련의 이와 같은 제의는 「獨逸條約」¹⁶⁷⁾과 「유럽방위공동체(EDC)조약」¹⁶⁸⁾의 체결을 앞두고 서독의 서방으로의 통합을 저지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던 바, 서독의 안보와 자유를 위태롭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방측에 의해 거부되었다.¹⁶⁹⁾ 또한 동서독 수립 이후 최초로 독일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베를린 4국

167) 조약원명은 「서독과 서방 3국간의 관계에 관한 조약」으로서 1952년 5월 본에서 체결되었으며, 동 조약을 통해 서독에 대한 서방 3국의 점령지위가 종료되었다. 그러나 서방 3국은 독일의 재통일을 포함하여 베를린과 전독일에 대한 권리와 책임, 서독에 대한 군주둔권 등을 계속 보유하였다.

168) 서구 6국(프랑스, 이태리,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서독)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안보확보를 위하여 1952년 5월 파리에서 단일 통합군을 모색하기 위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169) Helmut Kistle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Vorgeschichte und Geschichte 1945-1983* (Bonn: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1991), pp. 132~138.

외상회담(1954.1.25~2.18)이 개최되었으나, 독일 재통일문제는 서방 3국과 소련간의 입장차이로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서독의 재무장문제와 관련, 몰로토프 소련 외상은 베를린 4국 외상회담에서 서방의 EDC 계획에 대항하여 최초로 유럽집단안보에 관한 전유럽조약의 체결을 제의하고 NATO 해체를 주장하였다. 소련측이 제시한 전유럽조약의 주요내용은 동서독을 포함하는 체약국들의 상호공격 자제, 모든 문제들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 군사침략의 위협시 상호협위,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피침국 지원, 미국과 캐나다의 옵서버 참여 등이었다.¹⁷⁰⁾ 이는 진척되어 가던 서방의 이념적·군사적 통합과정을 방해하기 위한 소련의 책동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서방측에 의해 거부되었다.

한편 프랑스 의회가 주권제한을 이유로 EDC 창설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EDC 계획은 좌절되었다. 대신 서방은 서독을 「西歐同盟」(WEU)¹⁷¹⁾과 NATO에 가입시키는 「파리條約」을 1954년 10월 체결하여 새로운 방위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반면 소련과 동구국가들은 이에 대항하여 1955년 5월 WTO를 창설하게 되었는 바, 이로써 유럽에서는 동서진영의 양 군사블럭이 대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유럽집단안보체제를 형성하고자 하는 소련의 목표는 계속 추구되었다. 「바르샤바條約」¹⁷²⁾ 제11조는 “체약국들이

170) A. A. Gromyko and B. N. Ponomarev, *Soviet Foreign Policy 1917-1980 in two volumes, Vol. II 1945-1980*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81), pp. 184 & 200.

171) WEU는 영국, 프랑스, 이태리, 서독, 베네룩스 3국이 1954년 10월 체결한 NATO 틀내의 집단원조조약이다

172)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219.

확고히 추구하는 유럽집단안보체제가 형성되고 이러한 목적에 이바지하는 집단안보에 관한 전유럽조약이 체결되는 경우 본 조약은 전 유럽조약 발효일에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서진영간의 냉전이 침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련과 동구국가들이 이와 같이 유럽집단안보체제를 모색한 것은 서독의 재무장에 따른 독일 ‘軍國主義’ 부활과 ‘복수주의’를 우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NATO를 해체시킴으로써 유럽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제한하고자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주목할 만한 점은 미행정부의 정권교체와 스탈린의 사망으로 그동안 미국과 소련의 군사전략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이다. 1953년 1월 출범한 아이젠하워 미행정부는 군사비 절감과 기술적 차원에서 재래식전력보다는 핵무기를 중시하고, 트루먼 전대통령의 封鎖政策을 한국전쟁을 계기로 소규모의 재래식 공격이라도 핵무기로 대량보복한다는 ‘新政策’(New Look)으로 수정하여 소련의 유사한 침략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소련도 1950년대 중반부터 재래식전력보다는 핵무기를 중시하는 전략을 수행하였는 바, 특히 운반수단 면에서는 미국을 목표로 하는 장거리 폭격기보다 기술면에서 덜 복잡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유럽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중거리 폭격기와 미사일 생산에 집중하였다.¹⁷³⁾

이에 따른 미국과 소련의 군비증강 때문에 1950년대 후반기에는 독일 재통일문제 뿐만 아니라, 核軍縮問題가 유럽안보의 주요 논의

173) Geir Lundestad, *East West North South: Major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Politics 1945-1986* (Oslo: Norwegian University Press, 1986), pp. 151~157.

사항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최된 제네바 4국 정상회담(1955.7.18~23)에서 동서긴장의 원인 및 성격과 관련, 서방측은 독일과 유럽의 분단문제가 극복되지 않는다면 유럽의 안보와 평화로운 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先 독일 재통일, 後 유럽평화’를 주장하였다.¹⁷⁴⁾ 반면 소련은 다음과 같이 유럽집단안보체제를 2단계로 구축하고 독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럽집단안보조약 초안을 제시하였다.

제1단계: NATO와 「파리조약」 및 WTO를 유지하되 군사력 사용 억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양독간 불신제거

제2단계: 유럽집단안보조약 당사국들의 집단안보체제 구축에 관련된 모든 사항 수용, 「북대서양조약」, 「파리조약」, 「바르샤바조약」 등의 효력정지와 군사블럭들의 해체 및 집단안보체제로의 대체, 독일문제 해결.¹⁷⁵⁾

서방측은 소련의 이러한 ‘선 유럽집단안보체제 형성, 후 독일 재통일’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는 바, 동 회담에서는 결국 독일 재통일문제를 유럽안보문제와 연계하여 4국 외상들이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이에 따라서 개최된 제네바 4국 外相會談(1955.10.27~11.16)에서는 독일 재통일, 유럽집단안보체제 형성, 구축, 동서간 접촉 확대 등의 문제들이 집중 논의되었으나 어떠한 가시적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다. 이는 서방측이 소련의 주요 이해사항인 유럽집단안보조약 초안의 토의를 반대한 반면, 소련은 서방의 주요 이해사항으로서 기정사실화된 서독의 NATO 편입에 동의할 수

174) Auswaertiges Amt, *Die Auswaertige Politik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Koeln: Verlag Wissenschaft und Politik, 1972), p. 300.

175) Gromyko and Ponomarev, *Soviet Foreign Policy 1917-1980*, pp. 190~191.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기 때문이었다.¹⁷⁶⁾

1956년 2월 제20차 소련공산당대회에서 흐루시초프는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파멸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사회주의 진영에 유리한 국제정세를 조성하기 위하여 평화공존을 소련 외교정책의 새로운 노선으로 채택하였다. 그 이후 라파키(Rapacki) 폴란드 외상은 1957년 10월 유엔총회에서 동서독과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 지역에서의 非核地帶 설치를 제안하였다.¹⁷⁷⁾ 서방측, 특히 서독 정부는 이 제안을 거부하였는 바, 이는 첫째, 「라파키 플랜」이 NATO의 방위전략을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유럽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점, 둘째, 독일 재통일에 유익하지 않다는 점, 셋째, 서방의 약화 및 협상과 조약 파트너로서 동독의 국제법적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등 때문이었다.¹⁷⁸⁾

한편 동독이 1956년 12월 제안한 「獨逸聯合案」이 서독측에 의해 거부된 이후, 양독관계 뿐만 아니라 동서관계는 1958년 11월 베를린을 비군사화된 자유도시로 전환하자는 소련의 최후통첩과 1961년 8월 베를린 장벽설치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었다. 그러나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계기로 미·소관계가 데탕트시기로 진입함에 따라서 고조되었던 유럽에서의 동서간 긴장도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유럽안보 정세의 변화는 60년대 말에 CSCE가 태동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176) Ibid., pp. 192 & 213~216.

177) 「라파키 플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Kistle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p. 178 참조.

178) Ibid., p. 179.

(나) CSCE의 成立背景과 「헬싱키 최종합의서」

1) CSCE의 성립배경

데탕트시대의 도래로 미국과 소련은 영국과 함께 1963년 「핵실험 금지조약」을 체결하는 등 군비통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에 따라서 소련과 서구국가들간의 관계에서는 냉전시대에 주요한 대립요인이었던 독일문제가 덜 중시되었다. 또한 에르하르트 서독 정부의 쉬뢰더 외상은 상호신뢰를 기초로 동구국가들과의 제반관계 확대를 위한 ‘柔軟한 東方政策’(flexible Ostpolitik)¹⁷⁹⁾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폴란드는 유럽안보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기 위한 유럽안보회의를 1964년 12월 14일 유엔총회에서 제의하였다. WTO 국가들은 폴란드의 제의를 채택하는 한편, 유럽안보회의에 대한 서구국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1965년 1월의 「WTO 성명」과 1966년 7월 「부카레스트 문서」 및 1967년 4월 유럽공산당 및 노동당의 「칼스바드 성명」은 유럽으로부터 美軍撤收와 NATO 해체 등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서독의 핵무기 보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특히 「칼스바드 성명」은 존슨 미대통령이 제안한 동서구간의 ‘架橋政策’(bridge-building)과 동독이 포함되지 않는 서독의 선택적인 긴장완화 정책을 반대하였다.¹⁸⁰⁾ 이와 같이 소련을 포함한 동구국가들의 유럽안보회의 제의

179) Gerhard Schroeder, "German Looks at Eastern Europe," *Foreign Affairs*, vol. 44, no. 1 (Oct., 1965), pp. 15~25.

180) Dieter Nohlen (Hrsg.), *Pipers Woerterbuch zur Politik: 5 Internationale Beziehungen* (Muenchen: R. Piper GmbH & Co. KG, 1984), p. 289.

는 이념적·군사적 목적들을 갖고 있었던 바, 서방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말 동서 양진영의 지속적인 긴장완화 노력, 중소 분쟁의 악화, 소련의 경제난 및 동구국가들의 유럽안보회의 관련 정책목표들의 변화 등은 CSCE를 태동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미국의 대량보복전략과 관련하여 핵무기가 대규모 침략에는 억지효과가 있으나 제한적인 국지적 분쟁에는 비효과적이라는 것이 월남전을 통해 입증되었다. 따라서 NATO는 1967년 대량보복전략을 柔軟反應(flexible response)전략¹⁸¹⁾으로 변화시키고 핵무기 뿐만 아니라 재래식전력을 다시 증강시켰다. 또한 소련도 미국과의 군사력 균형을 이루고 이러한 군사력을 기초로 초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핵 및 재래식 전력을 증강시키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핵과 재래식 전력이 증강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한편으로 동서진영간에는 이러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다. 특히 NATO는 하멜 벨기에 외상이 기초한 소위 「하멜 報告書」(The Harmel Report)에 입각하여 1967년 12월 군사안보와 테탕트정책이 상호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이라는 방위와 테탕트의 「兩支柱論」(Twin Pillars Doctrine)을 확립하였다. NATO는 이에 따라서 최초로 유럽에서 상호군사력 감축의 가능성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¹⁸²⁾ 또한 1968년에는 「核擴散禁止條約」

181) 적은 핵이든 재래식 전력이든 자신이 사용한 수단과 같은 수단에 의하여 응징되어야 한다는 맥나마라 미국방장관의 군사전략이었다.

182) NATO의 이러한 연구는 1970년대 동서간 「군사력 상호·균형 감축」(MBFR)에 관한 협상과정의 출발점이 되었다. Raymond L. Garthoff, *Detente and*

(NPT)이 미·영·소 3국간에 체결되었고, 키징거 서독정부의 브란트 외상은 소련과 동구국가들 뿐만 아니라 동독과의 제반관계 확대를 위한 「新東方政策」을 추진하고 있었다.

둘째,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중소분쟁이 악화되어 1969년 3월 우수리강에서 양국간 무력충돌이 야기되었다.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이와 같은 안보상황으로 소련은 유럽정세의 안정, 특히 유럽의 현상 유지(status quo)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셋째, 소련은 또한 이 당시 대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소련 경제가 '제2의 産業革命' 단계로 전환되기에는 생산구조가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소련은 서방과의 긴장완화 관계를 심화시키고 경제적·기술적 지원을 받아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넷째, 1968년의 체코사태 이후 동구국가들은 유럽안보회의에서 추구하고자 하였던 목표들을 변화시켰다. 즉 체코사태가 서구의 단결을 강화시키고 동서간 긴장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동구국가들은 유럽에서의 긴장완화 지속을 위해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약화시키고자 하였으며 국경승인보다는 경제협력 및 유럽에서의 동등권과 주권보전을 강조하였다.¹⁸³⁾

이러한 상황에서 WTO는 전유럽국가들을 상대로 유럽안보회의 소집에 관한 「부다페스트 메시지」를 1969년 3월 채택하였으며, 동년 10월 프라하 회담을 통해 회의 일정과 의제 및 기타 관련사항들을

Confrontation: American-Soviet Relations from Nixon to Reagan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5), pp. 110~111.

183) Nohlen (Hrsg.), *Pipers Woerterbuch zur Politik*:5, p. 289.

제시하였다.¹⁸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념적·군사적 안보 대신 비군사적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한 ‘유럽안보를 위한 실질적 기반 조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정치적 협력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권리의 평等到 기초되어 있는 …… 상업·경제·기술·과학 관계들의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프라하 성명서」는 서방국가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¹⁸⁵⁾ 특히 서방은 WTO측에서 요구하는 유럽의 현상유지를 인정함으로써 군비통제와 군축 및 경제, 과학, 기술 협력 등에 관한 포괄적인 양자 및 다자간 합의들을 도출하여 유럽안보에 새로운 기초를 놓고자 하였다.

한편 1969년 10월 집권한 브란트 서독 수상은 緊張緩和에 목표를 둔 동방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1970년 소련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한편, 일련의 협상을 통해 70년대 초에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동독과 조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미국과 영국 및 프랑스는 베를린 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베를린 4국협정」을 1971년 소련과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제조약과 협정들을 통해 동서진영은 주권존중과 相互不可侵 및 국경의 불변성 등 유럽에서의 현상유지에 상호합의를 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미·소간의 군비통제협상 결과, 1972년 5월 「탄도탄 요격미사일」(ABM) 조약과 「戰略武器制限協定」(SALT-I)이 각각 체결되었다. 이와 같이 유럽에서의 성숙된 긴장완화를 배경으로 1973년 7월 3일 CSCE 회담이 개막될 수 있었고, 「군사력 상호·균형 감축」(MBFR) 회담도 시작되었다.

184) WTO는 이 당시 미국과 캐나다의 유럽안보회의 참석 가능성도 밝혔다.

185) Nohlen (Hrsg.), *Pipers Woerterbuch zur Politik*:5, pp. 289~290.

2) CSCE 회담과 「헬싱키 최종합의서」

1972년 11월 헬싱키에서 CSCE 예비회담이 개최되었는 바, 1973년 6월경에는 국가간의 상이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타협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서 알바니아¹⁸⁶⁾를 제외한 전유럽국가들과 미국 및 캐나다를 포함한 35개국이 참여한 최초의 CSCE 외상회담이 7월 3~7일 개최되었다. 동 외상회담은 예비회담에서 조정된 의제들을 채택하였고 만장일치체에 의해 모든 사안들을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서 실무회담(1973.9.18~1975.7.21)이 제네바에서 계속된 결과 1975년 7월 30일부터 헬싱키에서 35개국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8월 1일 「최종합의서」(Final Act)가 발표되었다.

이 기간중 진행된 CSCE 협상에서는 공동의 이해분야가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호 양보함으로써(give and take) 상이한 문제들에 대한 타협도 이루어졌다. 이는 매우 복잡한 협상이었고, 미국과 소련 같은 강대국들도 자국이 원하지 않는 일부 규정들을 수용해야만 하였다.¹⁸⁷⁾ 「최종합의서」¹⁸⁸⁾는 어떠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가간 조약이나 정부간 협정이 아니며 35개국의 합의된 의도를 표명한 성명서로서 다음과 같은 3개의 주요한 ‘바스켓’(basket)¹⁸⁹⁾으로 구성

186) 알바니아는 유럽에서 자국만이 유일하게 진정한 맑스-레닌주의 대표자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본주의국가나 수정주의국가들과는 어떠한 관계도 맺으려 하지 않았다.

187) Garthoff, *Detente and Confrontation*, p. 474.

188) 「헬싱키 최종합의서」는 Theodor Schweisfurth und Karin Oellers-Frahm (Hrsg.), *Dokumente der KSZE* (Muenchen :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1993), pp. 4~70; Thomas Buergenthal (ed.), *Human Rights, International Law and the Helsinki Accord* (Montclair, New Jersey: Allanheld, Osmun & Co. Publishers Inc., 1977), pp. 161~195.

되어 있다.

바스켓 I(Basket I)은 ‘유럽안보에 관한 제문제’(Questions Relating to Security in Europe)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선적으로 참가국들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10원칙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1. 주권 평등과 주권에 고유한 제권리의 존중, 2. 무력위협 또는 무력행사의 포기, 3. 국경의 불가침성, 4. 국가의 영토보전, 5. 분쟁의 평화적 조정, 6. 내정 불간섭, 7. 인권 및 사상, 양심, 종교, 신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자유의 존중, 8. 제민족의 평등권과 자결권, 9. 국가간의 협력, 10. 국제법 의무의 성실한 이행. 이와 같은 10원칙은 국가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법적 원칙들을 유럽에서도 엄숙히 확인하기 위하여 1970년 채택된 「國家間 友好關係에 관한 유엔 결의안」을 원용한 것이었다.

CSCE는 NATO와 WTO간의 긴장완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회의이었던 바, 참가국들은 상기와 같은 10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유럽에서의 영토상 현상유지를 재차 다짐한 것이다. 특히 10원칙 중 5개 원칙(제1, 제2, 제3, 제4, 제8원칙)에서의 영토보전에 대한 중복된 언급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소련에 의해 확정된 유럽국경들을 최종적인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유럽에서 더 이상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참가국들의 의도를 나타낸 것이었다.

또한 신뢰구축조치(CBMs)와 안보 및 군축과 관련해서는 참가국

189) 「헬싱키 최종합의서」는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는 3개의 ‘바스켓’과 ‘지중해에서의 안보협력문제’ 및 ‘후속회담’ 규정이다. 「최종합의서」는 ‘바스켓’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참석자들은 CSCE회담시 「최종합의서」에 있는 3개의 주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할 때 바스켓 I, II, III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간 주요 군사훈련과 소규모 군사훈련의 사전통보, 군사훈련 참관단의 교환, 대규모 군대이동에 대한 사전통보, 전면적이고 완전한 군축의 지향 및 군사분야에서의 상호통보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적대적인 체제간의 관계에서 CBMs은 일종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는 양측 군대의 일상교육, 軍事戰略, 군사시설 등이 투명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바스켓 I은 人權保護를 국제적 과제로서 설정하고 있다. 유럽안보 정책상의 중요한 문제들은 소련과 동구국가들의 요구로 헬싱키 회담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최종합의서」는 유럽안보가 양군사불력의 군비잠재력을 단순히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정치적이며 심리적인 문제임을 명백히 하였다.

바스켓 II(Basket II)는 ‘경제, 과학·기술 및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Cooperation in the Field of Econom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of the Environment)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상업, 산업 협력, 과학과 기술, 환경, 운송, 관광진흥 및 이주노동 등 체제간 협력가능 분야들이 개별적으로 항목화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협력절차와 그 이행방법은 관련국가들간의 사안으로 이양되어 있다.

바스켓 III(Basket III)은 ‘人道主義와 기타 분야에서의 협력’(Cooperation in Humanitarian and Other Fields)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적 접촉, 정보 보급, 문화와 교육 분야의 교류 등에 관한 규정들이며 인간과 사상 및 정보의 자유이동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가족상봉과 방문, 국제결혼, 출판 및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접근, 관광, 다양한 형태의 문화와 교육 협력 등의 촉진에 관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바스켓 III은 이와 같이 상이한 체제간의 인적·물적 교

류의 확대를 규정하고 있으나, 냉전종식 이전까지 동서간 왕래의 불균형은 이를 통해 변화되지 않았다.

「최종합의서」는 마지막으로 합의서에 포함된 조치들의 실행을 검토하기 위하여 1977년 후반기에 벨그라드에서 後續會談을 개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헬싱키 CBMs은 그 한계로서 첫째, 단지 일상적인 군사활동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훈련참관만을 초청하게 되어 있어 훈련참관 초청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고, 셋째, CBMs과 군축과의 분명한 연계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¹⁹⁰⁾ 이에 따라서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유럽국가간 안보와 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CSCE 후속회담들이 현재까지 개최되고 있는 바, 「헬싱키 최종합의서」는 유럽 35개 국가들간 협상의 종료가 아니라 이와 같은 후속회담들에 대한 서막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後續會談과 CSCE의 발전

CSCE는 「헬싱키 최종합의서」에 따라서 정상회담, 전문가 회의, 특별회담, 포럼, 심포지움과 세미나 등 일련의 후속회담과 회합들을 개최(<표 8> 참조)하여 결정된 원칙과 합의된 규정들의 이행여부를 검토하였다. 또한 CSCE는 유럽의 긴장완화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규정한 문서와 헌장을 새로이 채택하였다.

190) 박홍규, 「CSCE의 역할증대와 향후전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0), pp. 9~10.

1) 벨그라드 제1차 후속회담

벨그라드 후속회담(1977.10.4~1978.3.9)에서 각국 대표들은 「헬싱키 최종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유럽의 협력과 긴장완화 과정의 지속적 발전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1975년 「헬싱키 최종합의서」 발표 이후 소련과 동구에서는 다수의 반정부 인권단체들이 결성되었는 바, 서방측 대표들은 공산국가들의 이들에 대한人權侵害를 신랄히 비판하였다. 그러나 소련과 동구국가 대표들은 「헬싱키 최종합의서」의 내정불간섭 원칙을 내세워 서방측 대표들을 비난하였다.

이와 같은 인권문제 때문에 유럽 군축문제에 대한 소련의 선전은 서방측으로부터 큰 반응을 얻지 못하였다. 벨그라드에서 개최된 제1차 CSCE 후속회담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다자간 긴장완화 과정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후속회담을 1980년 마드리드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종료되었다.¹⁹¹⁾

벨그라드와 마드리드 후속회담 사이에는 平和的 紛爭解決(1978, 몽트로), 지중해에서의 협력(1979, 발레타), 과학포럼(1980, 함부르크)과 관련, 3회의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었다.

2) 마드리드 제2차 후속회담과 CDE

소련은 1975년 월남의 공산화 이후 제3세계에 대한 膨脹政策을 추진하는 한편, 1970년대 말부터는 최신 중거리 핵미사일 SS-20을 동

191) 「벨그라드 후속회담 문서」는 *Dokumente der KSZE*, pp. 71~73 참조.

구에 배치하여 핵전력 면에서 NATO를 능가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NATO도 이에 대응하여 서구에 크루즈 미사일과 퍼싱Ⅱ 미사일 배치 결정을 내렸다(1979.12).¹⁹²⁾ 특히 1979년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으로 미·소관계가 신냉전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제2차 CSCE 후속회담(1980.11.11~1983.9.9)이 마드리드에서 개최되었는 바, 1981년 12월 폴란드에서 야루젤스키 군사정부의 계엄령 선포는 마드리드 후속회담에 부담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마드리드 후속회담의 주요한 의의는 참가국들이 동서간 군사대결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유럽 信賴·安保構築措置 및 軍縮會議」(CCSBMDE: Conference on Confidence-and Security-Building Measures and Disarmament in Europe, 약칭 CDE)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75년 헬싱키 회담에서는 소련 및 동구국가들의 요구로 광범위한 안보정책상의 문제들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마드리드 후속회담에서의 결정들은 유럽에서도 신뢰구축을 통해 군비통제와 군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헬싱키 최종합의서」보다 ‘유럽 신뢰·안보구축조치 및 군축회의’ 부분이 더 추가되어 있는 「마드리드 후속회담 문서」¹⁹³⁾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보완하고 있다. 첫째, ‘유럽안보에 관한 제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바스켓 I에 어떠한 종교나 신념에 대한 개인의 자유, 노동조합을 설치할 수 있는 노동자 권리의 인정과 존중이라는 두개의 새로운 원칙이 추가되었다. 둘째, 새로 소집될 CDE는 단계적으로 효과있고 구체적인 새로운 조치들을

192) 크루즈 미사일과 퍼싱Ⅱ 미사일의 실전배치는 1983년 12월 이루어졌다.

193) *Dokumente der KSZE*, pp. 95~120.

취해야 한다. 특히 1984년 1월 17일 스톡홀름에서 시작하는 제1단계 회담에서는 대서양으로부터 우랄까지의 신뢰구축조치들이 규정되어야 하되, 이 조치들은 군사적으로 의미있고 정치적으로 구속력있으며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제2단계 회담에서는 유럽의 軍備統制와 군축문제가 협상되어야 한다. 셋째, 바스켓 II에 규정된 '경제, 과학·기술 및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이 「유엔 유럽경제위원회」(ECE)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제3차 CSCE 후속회담을 1986년 11월 빈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마드리드 후속회담과 빈 후속회담 사이에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인권과 관련하여 전문가회의와 안보협력세미나 등이 개최되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드리드 제2차 CSCE 후속회담의 결정에 따라서 개최된 CDE라고 할 수 있다. 「헬싱키 최종합의서」에 포함된 기초적인 군사적 CBMs의 취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CSCE 참가국들의 CDE가 스톡홀름에서 개최(1984.1.17~1986.9.19)되었는바, 이 결과 유럽의 군사적 안정과 CBMs의 실효성을 강화한 「스톡홀름 문서」가 채택되었다.

「스톡홀름 문서」¹⁹⁴⁾는 무력위협이나 무력사용의 포기, 군사활동의 사전통보, 군사활동의 참관, 연중일정표, 준수와 검증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무력위협이나 武力使用의 포기에 관한 10개 원칙이 채택되었으며, 기습공격의 위협이나 오판에 의한 전쟁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하여 각종 군사활동을 노출시키고 이를 확인·감시하는 중요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정치적으로 구속력을 갖고, 군사적으로 중요하며, 적절히 검증될 수 있는 동시

194) *Dokumente der KSZE*, pp. 127~146.

에 전 유럽에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이전의 헬싱키 CBMs보다 훨씬 발전된 형태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스톡홀름 문서」에 포함된 조치들은 제1세대의 CBMs인 「헬싱키 최종합의서」에 명시된 조치들에 이어 ‘제2세대의 CBMs’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단순한 CBMs이 아닌 군사적 안전까지 보장할 수 있는 신뢰·안보구축조치(CSBMs)로 불리고 있다.¹⁹⁵⁾

3) 빈 제3차 後續會談과 CSBMs·CFE

1973년 이후 빈에서 지속된 MBFR협상이 감축병력수를 둘러싼 NATO와 WTO간의 견해차이로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WTO는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외교노선에 따라서 MBFR협상과는 별도로 대서양부터 우랄까지 재래식전력과 무기의 광범위한 감축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1986년 말에는 성공적인 스톡홀름 CDE를 계승하고 실패한 MBFR을 대신할 새로운 유럽군축회담의 개최가 예측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헬싱키 최종합의서」 채택 이후의 유럽안보와 국가간 협력을 점검하기 위한 제3차 CSCE 후속회담(1986.11.4~1989.1.19)이 빈에서 개최되었다. 빈 후속회담에서는 유럽의 CSBMs과 군축문제를 포함하여 기타 협상 관련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특히 소련은 처음부터 人權會議가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어야 한다고 제의함으로써 인권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하였다.¹⁹⁶⁾

195) 박홍규, 「CSCE의 역할증대와 향후전망」, pp. 10~11.

196) Raymond L. Garthoff, *The Great Transition: American-Soviet Relations and the End of the Cold War*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4), pp. 595~596.

참가국 대표들은 CSCE 과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신뢰강화, 새로운 협력방안 모색, 인권과 기본적 자유권의 존중 및 국제안보의 공고화 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에 합의한 이후 1989년 1월 15일 「빈 후속회담 문서」¹⁹⁷⁾를 채택하였다. 빈 후속회담과 병행하여 개최되었던 새로운 軍縮協商을 요구하기 위한 회의(1987.2.17~1989.1.10)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 바, 특히 「빈 후속회담 문서」는 새로운 CSBMs에 관한 협상과 유럽재래식군사력(CFE)에 관한 협상을 1989년 3월 9일부터 빈에서 개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스톡홀름 회담에서 얻어진 결과를 확대하고 보완적인 CSBMs을 마련하여 유럽에서 군사대결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CSCE 35개국간의 CSBMs협상¹⁹⁸⁾ 및 NATO와 WTO 23개국간의 CFE 협상이 빈에서 동시에 개시되었다.

「1990 빈 CSBMs 협상문서」¹⁹⁹⁾는 1990년 11월 17일 합의되었는 바, 1975년 헬싱키와 1986년 스톡홀름에서 협상된 CSBMs을 확대하고 변화하는 유럽정치 상황에 적절한 새로운 조치들을 취하였다. 동 문서에서 취해진 새로운 조치들은 첫째, 매년 12월 15일 이전까지 정태적인(static) 자료 뿐만 아니라 현재와 향후의 군사예산 및 새로운 무기체제 계획을 포함한 動態的인(dynamic) 군사자료의 교환, 둘째, 분쟁방지센터의 설립, 셋째, 컴퓨터화된 커뮤니케이션 망조직, 넷째, 평시 공군기지 방문, 군 고위장교와 군사전문가 교환 등 군사적 접촉확대, 다섯째, 相互査察 허용 등이었다. 또한 동 문서의 1/2

197) *Dokumente der KSZE*, pp. 147~208.

198) 빈 CSBM협상은 스톡홀름 CDE에 이어 CDE II로 불려진다.

199) 「빈 CSBMs 문서」의 전문은 *SIPRI Yearbook 1991*, pp. 475~488.

이상은 「스톡홀름 문서」 규정들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다음 사항들은 스톡홀름 CSBMs을 확대하고 있다. 첫째, 새로운 자료의 평가에 의한 검증 강화, 둘째, 사전통보 정보들의 증가, 셋째, 군사훈련 참관자들에 대한 조건 개선, 넷째, 7만 5천명으로부터 4만명으로 2년 전 통보의무 훈련병력수의 감소.²⁰⁰⁾

이와 같이 헬싱키와 스톡홀름 조치에 이은 제3세대의 새로운 CSBMs을 마련하기 위한 CDE II 회의는 군사활동과 병력에 관계된 비밀을 더욱 제거하고 분쟁을 사전방지하는 방안, 즉 ‘安定化 措置’에 중점을 두었으며,²⁰¹⁾ 동서진영간에 이러한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는 가운데 CFE협상도 진행되었다.

4) 파리 特別頂上會談과 冷戰終熄

1989년 3월부터 빈에서 시작된 제3세대의 CSBMs 협상과 CFE 협상은 유럽에서 동서진영간의 신뢰구축과 軍備競爭 緩和 및 WTO의 재래식무기에 대한 서방의 위협인식 축소 등을 약속하고 있었다. 또한 상기의 두 협상에서 서방측은 고르바초프가 실질적인 동서간 군사대립의 해소를 희망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동서관계에서 더 본질적인 변화는 1989~90년 발생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혁명적인 변혁에 의하여 야기되었다. 이러한 ‘89혁명’(Revolution of '89)²⁰²⁾은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붕괴, 12월 몰

200) SIPRI Yearbook 1991, pp. 455~456.

201) 박홍규, 「CSCE의 역할증대와 향후 전망」, pp. 11~12.

202) Garthoff, *The Great Transition*, pp. 599~604 참조.

타 미·소정상회담에서의 탈냉전 선언과 고르바초프의 「브레즈네프 독트린」 포기, 1990년 10월 독일통일로 진행되었는 바, 제2차 세계 대전 종료 이후 45년간 지속되어온 동서독간 및 유럽의 동서진영간 정치적·군사적 대립이 종식되었다.

냉전종식에 따른 이와 같은 유럽안보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고 새로운 유럽안보협력체제의 구축을 모색하기 위한 34개국 CSCE 특별정상회담(1990.11.19~21)이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이 결과 「새로운 유럽을 위한 파리헌장」(Charter of Paris for a new Europe) 및 NATO와 WTO간 「22개국 共同宣言」(Joint Declaration of Twenty-Two States)이 채택되었고 CFE 조약이 체결되었다.

첫째, 서독으로 편입된 동독을 제외한 34개국 정상들은 11월 21일 「새로운 유럽을 위한 파리헌장」²⁰³⁾을 채택하였는 바, 동서냉전이 종식되고 ‘民主와 平和 및 團합의 새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선포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경제적 자유와 책임, 참가국간의 우호관계, 안보, 단합, CSCE와 세계 등에 관한 원칙을 천명하였다. 또한 「파리헌장」은 상기와 같은 원칙들을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전문가회의 개최, 1991년까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방안 모색 및 1992년 헬싱키 후속회담시까지 CFE와 CSBMs 협상완료, 유럽통합을 위한 市場經濟에 기초한 경제협력 및 환경, 문화, 이주노동자, 지중해, 비정부기관 문제에서 상호협력 등의 향후 지침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CSCE 회원국들은 「파리헌장」의 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CSCE를 다음과 같이 정비·강화하기로 하였다: 頂上會談

203) SIPRI Yearbook 1991, pp. 603~610.

의 격년제 개최, 외무장관 회담의 최소 매년 1회 개최 및 이를 준비하기 위한 외무부 「고위간부 위원회」(Committee of Senior Officials) 개최, 프라하에 사무국(Secretariat) 설치, 빈에 「분쟁예방 센터」(Conflict Prevention Center) 설치, 바르샤바에 「자유선거사무소」(Office for Free Elections) 설치, 「CSCE 의회」(Parliamentary Assembly) 창설 모색(<표 4> 참조).

둘째, 파리 CSCE 특별정상회담에 참석한 NATO와 WTO 22개국 정상들은 별도로 상호관계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22개국 共同宣言」²⁰⁴⁾을 11월 19일 채택하였다: ① 과거의 적대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동반자적 우호관계 수립, ② 영토적·정치적 목적의 상호 무력사용 금지, ③ CSCE 내에서 공동안보 지향, ④ 재래식무기와 핵 및 화학무기의 통제·감축에 적극적 기여, ⑤ CSBMs의 진전 및 領空開放의 중요성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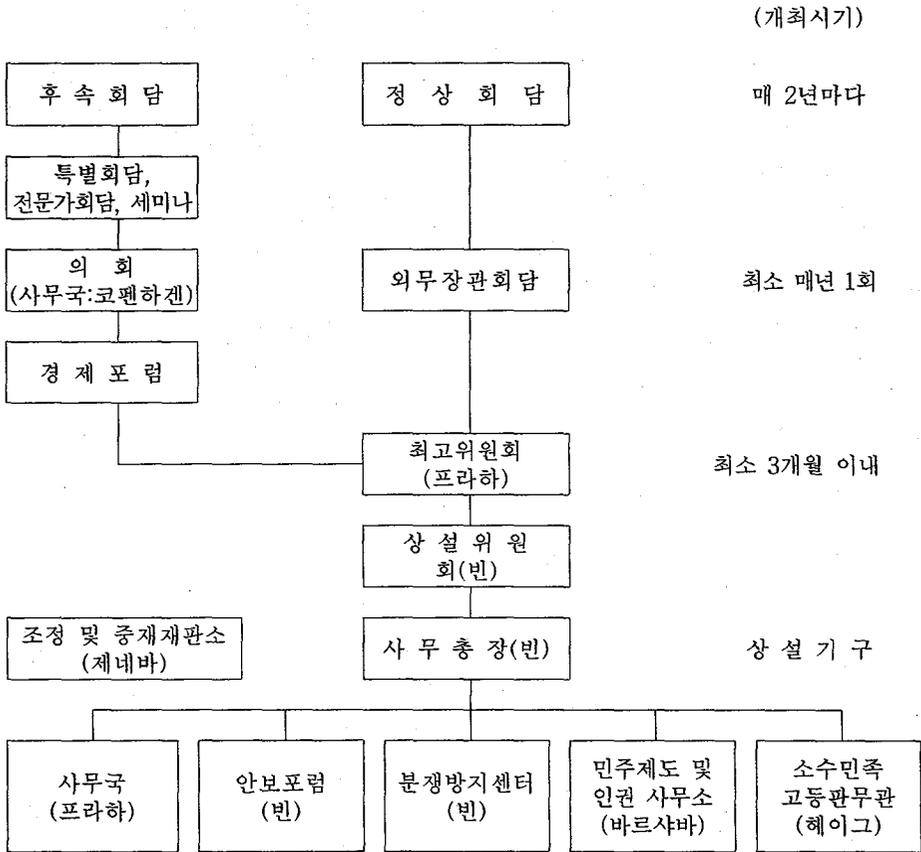
「파리헌장」과 함께 「22개국 공동선언」은 공식적으로 유럽에서 45년간 유지되어 온 전후질서에 종지부를 찍고 민주주의와 법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셋째, 1989년 3월부터 빈에서 시작된 재래식군사력 감축을 위한 CFE 협상이 NATO와 WTO 22개국간에 타결되어 CFE 조약²⁰⁵⁾이 1990년 11월 20일 체결되었다. 동 조약에서는 대서양에서 우랄까지 배치된 NATO와 WTO의 5가지 장비(전차, 야포, 장갑수송차, 항공기, 헬기)를 감축하여 양측 보유상한선을 총보유수의 1/3 이하로 하기로 합의되었다(<표 5> 참조).

204) SIPRI Yearbook 1991, pp. 601~602.

205) Ibid., pp. 459~474.

<표 4>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조직



출처: Fischer Almanach der internationalen Organisationen, pp. 480~481.

CFE 조약 체결의 의의는 ① 대서양으로부터 우랄산맥까지 배치된 병력과 무기를 향후 3년 6개월내에 획기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유럽의 동서진영간에 사실상 전쟁이 없는 시대로 진입하였다는 점, ② 군사력 감축조치의 이행여부를 상호 확인·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③ WTO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해체되고 NATO는

새로운 위상을 정립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 등이었다.

한편, 이와 같은 일련의 성과들을 도출한 파리 CSCE 특별정상회담의 의의는 유럽의 분단과 東西陣營間 軍事的 對立을 특징으로 하던 냉전시대가 종식되고 민주와 평화 및 단합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유럽질서가 시작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점에 있다. 또한 CSCE는 각종의 상설기구를 설치하는 등 조직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유럽협력체제의 제도화에 대한 최초의 움직임을 보였으며, 격년제 정상회담과 연 1회 이상의 외무장관 회담 등을 통해 정책협의를 가속화할 수 있게 되었다. 민주주의적 가치의 존중과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신생민주국가들에 대한 협력약속은 유럽에서 民主主義 理念과 시장경제제도의 확산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NATO와 WTO를 대체할 수 있는 범유럽안보기구로 CSCE를 변화시키려는 소련과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과도기에 전쟁방지를 위해 NATO 유지를 희망하는 미국 및 영국간의 이해상충, 경제력 차이에 따른 유럽내에서의 남북문제 부상가능성, 미·소의 霸權主義 常存²⁰⁶⁾ 등은 CSCE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파리 CSCE 특별정상회담이 폐막된 이후 냉전종식에 따른 새로운 유럽질서를 논의하고 구축하기 위하여 일련의 전문가 회의와 세미나 및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표 8> 참조).

206) 파리 CSCE 특별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역외문제인 걸프전과 관련하여 페르시아만 결의안 채택을 유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소련은 발트 3국의 옵서버 참가 요구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5) 헬싱키 제4차 後續會談과 PKO

냉전종식 이후 미·소는 1991년 7월 「戰略武器減縮協定」(START I)을 체결하는 등 적대적 대결이 아닌 협력관계를 갖게 되었다. 물론 양국간에는 이해가 상충하는 면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상호 공동노력이 있었다. 반면 지역차원에서 유럽은 1991년 1년 동안 5가지의 중요한 사태발전에 의하여 급속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즉 첫째, 동구로부터 소련군이 철수하고 6월 28일 「相互經濟援助委員會」(COMECON)와 7월 1일 WTO가 각각 해체되는 등 소련과 동구관계에서 급속한 변화가 나타났다. 둘째, 소련 및 동구 지역으로 NATO가 확장을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셋째, 1991년 말 소연방이 붕괴하고 「獨立國家聯合」(CIS)이 출범하는 등 대변혁이 발생하였다. 넷째, 민족분규로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되고 내전이 발발하였다. 다섯째, 유럽통합의 신속한 진전을 기대하였던 서구국가들의 욕구가 국가간 의견상이로 충족되지 않았다.²⁰⁷⁾

유럽의 CSBMs과 관련해서는 스톡홀름 회담(1984~86)과 빈 협상(1989~90)에서 합의된 형태의 CSBMs이 근거를 상실하고 다른 협력안보의 준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양 군사블럭이 대치하던 과거의 정치적·군사적 상황을 위해 입안된 조치들이 냉전종식 이후의 새로운 도전과 요구들에 직면하여 부적절하다는 점과 CSBMs 자체가 본래의 제약성을 갖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따라서 紛爭防止, 위기관리, 평화의 유지와 조성, 새로운 CSBMs의 연구 등과 같은 다른 형태의 안보대비가 국제적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특히 유고슬라비아 사태는 ‘古典的인’ CSBMs이 내전으로 시작된

207) Garthoff, *The Great Transition*, p. 608.

새로운 형태의 분쟁에는 거의 유용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 때문에 CSCE 회원국들은 헬싱키 제4차 후속회담을 앞두고 이중적 접근법을 채택하였는 바, 이는 첫째, CSBMs을 한층 더 개선·보완하고, 둘째 새로운 CSCE 안보협력포럼(FSC)의 틀내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첫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의 결과, 헬싱키 후속회담의 개최 직전인 1992년 3월 4일 「1992 빈 CSBMs 협상문서」²⁰⁸⁾가 합의되었다. 이는 「1990 빈 CSBMs 協商文書」에서 합의된 CSBMs을 정보교환, 위협축소, 군사적 접촉, 참관, 검증 등의 면에서 더욱 확대·발전시키고 더 보완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²⁰⁹⁾ 이와 함께 빈에서는 새로운 CSBMs에 관한 협의(consultations)도 진행(1991.9.17~1992.3.19)되었는 바, 합의문서는 채택되지 않았으나 헬싱키 후속회담 이후에 설립된 FSC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헬싱키에서 개최된 제4차 CSCE 후속회담(1992.3.24~7.10)에서는 먼저 빈에서 협상이 완료된 「領空開放條約」(Treaty on Open Skies)이 3월 24일 조인되었다. 이는 밴쿠버로부터 블라디보스톡까지 지역의 공중감시를 규정하는 조약으로서 유럽의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위한 진일보한 또 다른 조치로 간주될 수 있다.

7월 10일 채택된 「헬싱키 문서」²¹⁰⁾는 유럽에서의 분쟁청산, 위기관련기구의 개선, 의사결정 구조의 강화, 군축축진 및 경제협력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CSCE를 유엔헌장 제52조 1항 규정에 의한 ‘지역적 협정’²¹¹⁾으로 규정하는 합의가 이루

208) *SIPRI Yearbook 1993*, pp. 635~653.

209)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bid.*, pp. 618~619.

210) *Ibid.*, pp. 190~209.

211) 유엔은 자신의 세계적 체제와는 별도로 가맹국의 일부가 별개의 조약에 의

어졌다. 따라서 CSCE는 NATO, WEU, EU의 군인 및 민간인과 함께 平和維持活動(PKO)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평화의 실현을 위해 군대를 투입하는 형태의 강제조치들은 단지 유엔 안보리만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계속 남아 있다. 또한 만약 1국이 12개국의 지지를 받아 제의하는 경우에는 「고위간부위원회」²¹²⁾가 참여화된 위기상황을 관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매년 개최되는 「경제포럼」은 유럽의 경제협력과 구사회주의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²¹³⁾

또한 빈에서 1990년 11월 26일부터 지속되어온 각국의 병력제한에 관한 협상이 완료되어 「CFE 병력보유수 협상의 최종합의서」(CFE-1A)²¹⁴⁾가 1990년 CFE 조약 체결국 22개국과 대서양으로부터 우랄산맥까지의 지역내에 있는 7개 구소련 공화국들을 포함한 총 29개국간에 1992년 7월 10일 헬싱키 후속회담에서 채택되었다. 1990년 독일 통일시 소련의 수락조건은 통일독일이 병력을 37만명으로 감축한다는 것이었고 독일인들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통일을 달성하였다. 독일만의 일방적인 兵力減縮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국의 병력보유 상한선을 확정하고자 한 것이 CFE-1A의 주요 목적이었다. 동 합의서는 1992년 11월 9일부터 발효되었는 바; 유럽군축을 위한 일보진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여 지역분쟁의 평화적 해결 또는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유엔의 지역판을 만드는 경우 그것이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합치하는 한에서' 그 지역적 협정과 지역적 기관의 존재를 일반적으로 인정한다(유엔헌장 제52조).

212) 「고위 간부위원회」는 1994년에 개최된 부다페스트 제5차 CSCE 후속회담 이후에는 「최고위원회」로 개칭되었다.

213) Mario von Baratta and Jan Ulrich Clauss, *Fischer Almanach der internationalen Organisationen* (Frankfurt am Main: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95), pp. 479~480.

214) *SIPRI Yearbook 1993*, pp. 683~6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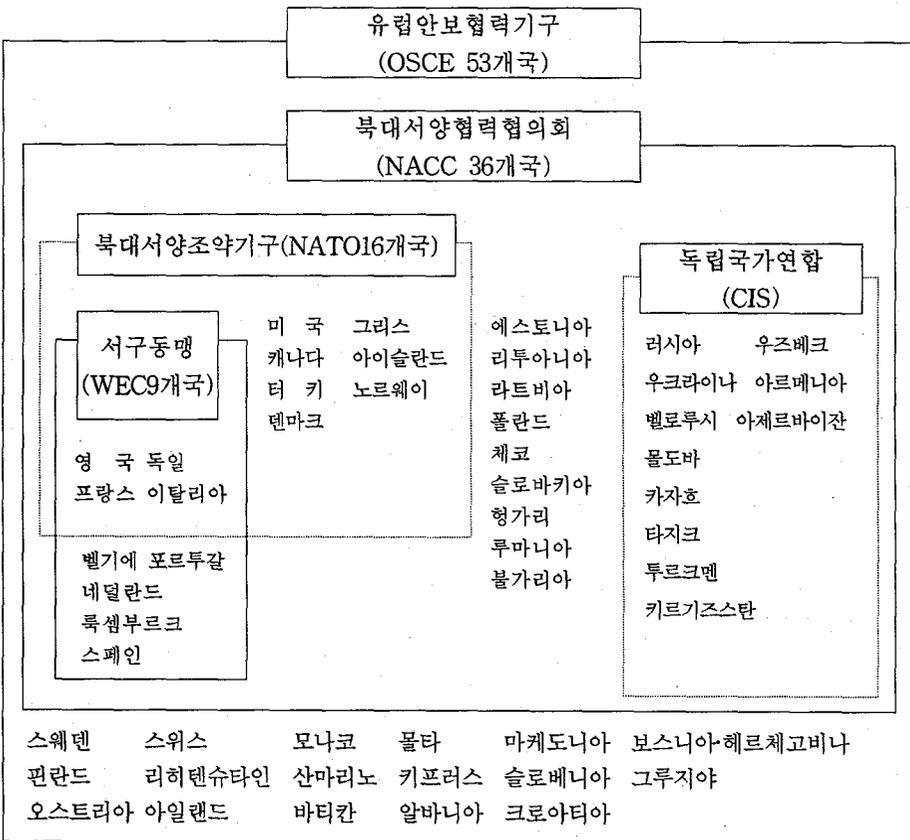
<표 5> 유럽 재래식전력(CFE) 감축협정

구 분	세 부 내 용				
조약의 목적	유럽 재래식 전력의 균형을 낮게 설정하여 기습공격, 대규모 침략능력을 배제하는데 있음.				
대 상 지 역	대서양에서 우랄까지의 참가국 영토				
주요 합의 사항	장비감축				
	장 비	NATO 전력	합의사항	구 WTO	비 고
	전 차	23,600	20,000	52,600	·국가별 보유상한선: 양측 총 보유수 1/3이하 ·병기처분: 조약발효후 16개월 내 25%, 28개월내 60%, 40개월내 완전삭감 조치 ·검증: 완료후 4개월간 확인
	야 포	17,700	20,000	41,800	
	장갑수송차	31,025	30,000	73,997	
	항공기	5,700	6,800	12,280	
	헬기	2,235	2,000	3,500	
	* 1990년 11월 20일 NATO 16개 회원국과 구WTO 6개국간 서명				
병력보유상한선(해군제외)	NATO 국가		상 한	구 WTO 국가	상 한
	미 국		250,000	러 시 아	1,450,000
	카 나 다		10,660	우 크 라 이 나	450,000
	영 국		260,000	벨 로 루 시	100,000
	프 랑 스		325,000	카 자 흐	0(해당지역협소)
	독 일		345,000	불 가 리 아	104,000
	이 태 리		315,000	체코슬로바키아	140,000
	벨 지 움		70,000	헝 가 리	100,000
	네 덜 란 드		80,000	폴 란 드	234,000
	룩셈부르크		900	루 마 니 아	230,248
	노 르 웨 이		32,000	아 르 메 니 아	내전상태로 인
	덴 마 크		39,000	아 제 르 바 이 젠	해 추 후 병력상
	스 페 인		300,000	그 루 지 아	한선 제출키로
	포 르 투 갈		75,000	몰 도 바	합의
	터 키		530,000	투르크멘, 키르기즈, 타지크, 우즈베크(4국)	*지역적인 면에서 제외(우랄 동쪽)
그 리 스		158,621			
아 이 슬 란 드		0			
* 1992년 7월 10일 헬싱키에서 개최된 CSCE 52개국 정상회담서 서명					
발 효	1992년 7월 17일				

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2~1993』(1992), p. 188.

이외에 주목할 만한 점은 1992년 기간중 CSCE 회원국수가 소련의 붕괴와 유고슬라비아의 解體 등으로 53개국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이다(<표 6> 참조). 또한 대서양으로부터 우랄산맥까지의 전유럽에 유효하던 CSCE 관련 원칙과 규정들의 적용범위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동부와 남부지역까지 확대되었다.

<표 6> 유럽의 安保機構



6) 부다페스트 제5차 後續會談과 OSCE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동서대립의 해소는 냉전시대의 안보문제를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들을 노정시키게 되었기 때문에, 유럽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은 구유고슬라비아와 구소련에서와 같은 民族紛爭의 종식과 제한 및 방지, 새로운 유럽안보 상황에서 미국의 역할, 유럽안보구조로의 러시아 편입, 유럽내의 경제력 차이, 유럽의 동부국경 확정, NATO와 EU의 확대 등에 관련된 문제들이었다.²¹⁵⁾ 따라서 1992년 헬싱키 후속회담 이후 CSCE의 활동은 다음과 같은 3가지에 정향되어 있었다: 첫째, 「파리 헌장」에서 정의된 공동가치들(인권과 기본적 자유,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경제적 자유, 사회적 정의와 환경 책임)의 증진, 둘째, 분쟁방지와 위기관리, 셋째, 협력안보의 발전.²¹⁶⁾

CSBMs 문제는 CSCE내의 FSC가 「1992 빈 CSBMs 협상문서」의 지속적 발전에 대한 위임을 받아 작업을 계속 수행하였는 바, 이전 문서규정들을 수정·확대한 새로운 CSBMs 문서인 「1994 빈 CSBMs 協商文書」²¹⁷⁾가 1994년 11월 28일 채택되었다. 「1992 빈 문서」와 비교할 때 CSCE 상임위원회(Permanent Committee)와 사무총장직이 설치되는 등 조직상의 변화가 있으며, 군사활동의 통보와 검증 및 연례평가회의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규정들이 추가되거나 보완되었다. 새로운 CSBMs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작업은 후술하는 부다페스

215) *SIPRI Yearbook 1995*, p. 265.

216) *Ibid.*, p. 287.

217) *Ibid.*, pp. 798~820.

트 후속회담에서도 FSC에 위임되었다.

부다페스트 제5차 CSCE 회담(1994.12.5~6)의 의의는 분쟁방지와 평화유지에서 CSCE의 역할 강화, 지역분쟁 해결에서 적극적 역할 수행 및 1995년 1월 1일부터 OSCE로의 명칭변경 등이 결정되었다는 점이다. 즉 구유고슬라비아에서의 민족분쟁을 조정하는데 국제기구들이 무능함을 노정하였는 바, 부다페스트 후속회담은 분쟁방지 수단들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대유엔관계와 관련, CSCE가 유엔헌장이 인정하는 '地域的 機關'인 OSCE로 변화됨에 따라서 OSCE는 향후 모든 유럽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유엔보다 우선순위를 갖게 되었다. 또한 헬싱키 제4차 CSCE 후속회담에서는 독자적인 평화유지군의 구성과 파견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부다페스트 후속회담을 통해 제3국으로부터의 병력투입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평화유지군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경우에는 다국적 OSCE 평화군을 파견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가 천명되었다.²¹⁸⁾

그러나 부다페스트 후속회담이 폐막되었을 때, 유럽과 세계 각국의 언론들은 동 회담이 '성공하지 못하였다'거나 '실망스러웠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CSCE/OSCE의 '실패'나 '종말' 등을 보도하였다. 이는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에서의 분쟁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이 공동문서를 합의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이었다.²¹⁹⁾ 다행히 효율적인 군사수단을 갖고 있는 NATO의 군사개입과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노력

218) OSCE 회원국들은 1988년 이래 전투를 수행중인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경우 분쟁지인 나고르노 카라바흐에 다국적 OSCE 평화군을 파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Fischer Almanach der internationalen Organisationen*, pp. 480~481.

219) *SIPRI Yearbook 1995*, p. 289.

으로 1995년 11월 데이턴(Dayton) 平和協定이 체결됨으로써 구유고 슬라비아 민족분쟁은 종결되었다. 휴전을 감시하기 위하여 NATO 주도의 다국적군인 平和協定移行軍(IFOR)이 창설·파견되었으며, OSCE는 1996년에 실시 예정인 보스니아 대통령과 연방의회 선거를 감독할 예정이다.

(라) CSCE/OSCE의 評價

상기와 같이 CSCE/OSCE는 1973년부터 20여년간 유럽의 안정과 안보·경제·과학·문화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환경보호문제 해결 및 군축 등의 목표를 가지고 냉전시기에는 동서진영간의 대화접촉을 위한 유일한 포럼으로서, 또한 냉전종식 이후에는 유엔 통제하의 지역기구로서 발전되어 왔다. 이와 같은 CSCE/OSCE의 기여점은 다음과 같은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냉전시대에 동서 양진영의 이념·군사적 대립구도 속에서 信賴構築과 군축에 합의하여 명실상부하게 다자간 안보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 둘째, NATO와 WTO의 대립구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유럽의 새로운 질서 창출에 이바지하였다는 점, 셋째, 냉전종식 이후 유럽의 분쟁방지와 위기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CSCE/OSCE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럽내의 분쟁을 포괄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는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속력의 결여와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意思決定 過程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 기여점

가) 信賴構築과 軍縮 增進

CBMs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 초 이후 군비통제에 관한 논의의 맥락에서 통용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고 모호하며 CBMs과 CSBMs 두 개념간의 차이도 사실상 명확하지 않다. 페더슨과 워스의 개념정의에 따르면 CBMs은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군사활동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는 기회들을 자제함으로써 안심을 시키는 조치들’이며, CSBMs은 ‘투명성과 예측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군사적 의도를 더 명백히 하여 우연이나 오산에 의한 전쟁위험을 축소시키려는 조치들’이다.²²⁰⁾ 신뢰구축에 관한 이들의 개념정의를 수용한다고 할 때, 유럽의 신뢰구축은 CSCE의 창설로 그 무대가 마련되었으며 CSCE 후속회담 및 關聯會議들에 의한 점진적인 과정(step-by-step process)을 통해 증진될 수 있었다. 즉 CSCE 회원국들에 의해 합의된 CBMs과 CSBMs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수 년 동안의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되었고 이전에 합의된 조치들의 적용경험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개선되었다.²²¹⁾

220) M. Susan Pederson and Stanley Weeks, "A Survey of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 in Ralph A. Cossa (ed.), *Asia Pacific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 (Washington, D.C.: The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1995), p. 82.

221) Cathleen S. Fisher는 유럽에서의 신뢰구축을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① CBMs 이전단계: 미·소 합의들, ② 1세대 CBMs: 개척자 (헬싱키 CBMs), ③ 2세대 CBMs: 안보구축조치들(스톡홀름과 빈 문서), ④ 3세대 CBMs: 협력안보조치들(Cooperative Security Measures). Liu Huaqiu, "Step-by-Step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for the Asian Region: A

「헬싱키 최종합의서」는 최초로 유럽 35개국간의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동서 데탕트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는데, 동 합의서 前文은 ‘자신들 사이에서 더 나은 관계를 증진시키고 그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어떠한 위협이나 안보에 반하는 어떠한 시도로부터도 벗어나 진실되고 지속적인 평화 속에서 살 수 있는 조건들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헬싱키 최종합의서」는 유럽의 분쟁방지를 위하여 영토의 현상유지와 관련된 10원칙을 천명하는 선언적 조치(Declaratory Measures), 군사훈련 통보와 참관에 관련된 투명성 조치(Transparency Measures) 등을 취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CSCE 후속회담과 專門家會談 등 일련의 회의들에서 「헬싱키 최종합의서」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신뢰·안보구축방안들이 협상·합의되었다. 마드리드 제2차 CSCE 후속회담(1980~1983)에서는 중립·비동맹 유럽국가들에 의하여 CBMs보다 더 ‘군사적으로 중요하고, 중립적이고 구속력 있으며 검증할 수 있는’ 조치들을 나타내는 CSBMs이 최초로 소개되었다. 또한 CSCE 과정의 안보포럼인 스톡홀름협상(1984~1986)을 통해 채택된 「스톡홀름 문서」는 事前通報制度를 개선시켰고 회원국들에게 자국의 군사활동 연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 문서는 특정 군사활동에 대한 참관제도를 의무화하였다(<표 7> 참조). 이러한 참관제도는 유럽 각국의 군사활동에 관한 공개성과 예측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동서 양진영간 신뢰구축을 한층 더 강화시켰다.

〈표 7〉 헬싱키 CBMs과 스톡홀름 CSBMs

	헬싱키 CBMs (1975)	스톡홀름 CSBMs (1986)
적용지역	일부 중앙유럽지역	대서양에서 우랄까지 전유럽지역
구속력	자발적인 구속력	모든 규정은 정치적 구속력을 가짐.
군사활동제한	대규모 기동훈련에만 국한	대규모 야전훈련 및 부대이동을 포함하는 모든 군사활동
통보의무대상	25,000명 이상되는 병력	지상군 13,000명 또는 탱크 300대, 상륙군 3,000명 이상, 전투기 200대 이상
참관대상		지상군 17,000명 이상 상륙군 5,000명 이상 공정대 5,000명 이상
참관제도	아주 초보적 조항	참관자의 권리와 의무조항을 자세히 규정하였음.
규제조항		시간제 규정: 사전통지(1년전) 되지 않은 40,000명 이상의 부대활동 금지, 75,000명 이상 부대활동의 2년전 통지
검증규정		의무적으로 매년 3회 현장검사

출처: Richard Danilek, "The Future of Conventional Arms Control in Europe, A Tale of Two Cities: Stockholm, Vienna," *SIPRI Yearbook 1987*, p. 349.

정보교환, 커뮤니케이션, 통보, 참관, 사찰조치 등을 포함하는 透明性措置들은 「스톡홀름 문서」 채택 이후 1990년과 1992년 「빈 CSBMs 협상문서」를 통해 보완·확대되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가 CSCE 출범시부터 회원국이기는 하였으나, CSCE 관련 제반 원칙과 규정들의 지리적 적용범위는 1980년대 말까지 우랄산맥 동부 소련

을 포함한 유럽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0년 2월부터 오타와에서 시작된 領空開放協商을 계기로 지리적 적용범위가 전유럽과 전소련 및 멕시코를 제외한 북미로 확대됨으로써 CSCE 회원국간 신뢰가 더욱 구축될 수 있었다.

CSCE는 상기와 같은 신뢰구축 증진을 기초로 하여 군축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미·소간에는 「中距離核戰力(INF) 폐기 협정」(1987)과 이를 돌파구로 START-I이 각각 체결되었다. CSCE 틀 안에서 CFE 협상이 진행되어 대서양으로부터 우랄산맥까지 NATO와 WTO 주요 무기들의 감축이 이루어졌으며, 회원국들의 병력상한선이 확정되었다(<표 5>참조). 이와 같은 신뢰구축 증진과 군축협상들은 유럽 안정과 평화 뿐만 아니라, 후술하는 바와 같은 독일통일과 신유럽질서 창출에도 이바지하게 되었다.

나) 新 유럽秩序의 創出

신뢰구축 및 군축과 더불어 CSCE의 또 다른 기여점은 동구 사회주의권의 변혁과 독일통일에 영향을 주어 45년 동안의 동서진영간 대치상황을 해소하고 단일안보체제를 형성함으로써 민주주의와 평화 및 단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유럽질서를 창출하였다는 것이다.

「헬싱키 최종합의서」 초안자들의 주요 목표는 NATO와 WTO간의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는 것이었으나 약 15년이 경과한 이후 나타난 결과들은 이들의 기대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신 유럽질서 창출에는 전술한 바와 같은 CSCE 과정을 통한 신뢰구축과 군축 뿐만 아니라, 「헬싱키 최종합의서」 채택 당시에는 안보와

경제 협력문제의 부가물로만 간주되었던 인권분야가 큰 기여를 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헬싱키 최종합의서」의 인권규정들은 원래 서구국가들의 주장에 의하여 포함되었다. 이들은 「國際人權宣言」(International Bill of Rights) 원칙들을 재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합의서」의 바스켓 I ‘유럽안보에 관한 제문제’ 중 참가국들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제 7원칙으로서 ‘인권 및 사상, 양심, 종교, 신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인 자유의 존중’을 천명하고 바스켓 III에서 ‘인도주의와 기타 분야에서의 협력’을 규정하였다. 소련과 동구국가들은 유엔총회가 1948년 「世界人權宣言」을 채택할 당시에는 기권한 바 있으나, 「헬싱키 최종합의서」의 규정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또한 소련은 이미 1966년의 「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을 조인·비준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관련 국제적 문서들은 이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통치하려는 소련 정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소련 지도층은 어느 누구도 「헬싱키 최종합의서」가 소련체제에 어떠한 위협을 야기할 것으로 의심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서 소련 정부의 지원하에 수 백만부의 복사본이 배포되었다. 그러나 「헬싱키 최종합의서」의 인권관련 규정들을 소련사회에 적용하고자 하는 지식인들이 있었는데, 물리학자 오를로프(Orlov)와 사하로프(Sakharov)가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 오를로프는 1976년 4월 「헬싱키 최종합의서」 규정에 대한 소련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다수의 지지자를 확보하였으나, 그를 비롯한 人權主義者들은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헬싱키 최종합의서」에 고무

되었던 소련의 인권운동은 사하로프가 고르키로 추방된 1980년 1월 경 분쇄되었다.²²²⁾

따라서 마드리드 제2차 CSCE 후속회담(1980~1983)은 WTO 국가들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포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동 회담에서 캠펠만(Kampelman) 미국 대표는 서방측이 소련 및 동구국가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폭로·비판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인권문제와 관련, CSCE는 오타와 인권전문가회의(1985.5.7~6.17), 베른 인적접촉 전문가회의(1986.4.15~5.27), 파리 인권회담(1989.5.30~6.23), 코펜하겐 인권회담(1990.6.5~29) 등을 개최하여 인권과 기본권의 존중이 유럽 평화와 정의 및 안보에 대한 본질적인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하여 CSCE 진행과정은 「헬싱키 최종합의서」 입안자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게 共產全體主義에 대한 민주주의의 이념적 공격을 위한 기초를 놓았고, 소련과 동구국가들에서 민주화와 인권 운동을 진전시키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²²³⁾ 이러한 민주화와 人權運動은 동구국가들에서 소위 '89 혁명'을 촉발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고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통일로 연결되어 45년간 지속된 유럽분단을 해소시키고 유럽에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222) Richard Schifter,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Ancient History or New Opportunities?"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16, no.4 (Autumn 1993), pp. 124~125.

223) *Ibid.*, p. 125.

다) 局地的 紛爭의 관리 노력

유럽에서는 냉전종식과 함께 대규모 군사충돌 가능성이 희박해졌으나 민족적·종교적 상이성으로 인한 국지적 위기와 분쟁들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OSCE는 이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OSCE의 활동목표는 표출 직전의 분쟁들을 미리 조정하는 예방외교, 중재를 통한 무력분쟁의 확산 방지, 전쟁확대 방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치주의적·민주적 관계구축 지원 등에 집중되어 있다. OSCE는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와 방법들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 단기 조사단이나 전문가단 또는 특별사절단을 통하여 분쟁원인과 과정에 대한 포괄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획득하고 OSCE의 입장을 준비한다.
- 6개월 이상의 장기사절단 정기보고를 통하여 OSCE 기구나 회원국들의 정보를 확대시킨다. 분쟁지역에 민주적·법치주의적 제도와 文明社會 조직들의 설립을 지원한다.
- 바르샤바 소재 「民主主義 制度와 人權을 위한 事務所」 개최의 세미나들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법치주의, 민주주의, 인권과 소수민족권 존중에 이바지한다.
- FSC를 통하여 전쟁지역의 휴전상태를 안정시키고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들을 논한다.²²⁴⁾

224) Peter Schlotter, "Die OSZE auf dem Abstellgleis ?" in Reinhard Mutz, Bruno Schoch and Friedhelm Solms (hrsg.), *Friedensgutachten 1995*

냉전종식 이후 국지적 분쟁의 관리를 위한 CSCE/OSCE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유고슬라비아 사태와 관련, 「高位幹部委員會」가 관여하여 전쟁범죄에 대한 평가서를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하였고 물질·제도적 지원을 위한 사절단과 소수민족을 위한 고등판무관이 파견되었다. 이들은 국지적 충돌을 중재하고 지역분쟁에 공정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민족주의적인 선동과 소문조작을 방지할 수 있었다.

둘째, 아제르바이잔 영토내에 있으나 다수의 아르메니아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에 개입하여 민스크 평화회담을 소집하였고, 협상실패 이후 OSCE 최초의 평화유지군 약 2,500명이 180km 전선에서 휴전을 감시하고 있다.

셋째, 독립을 추구하는 남부 오세티아와 그루지야 정부간의 분쟁 중재를 위하여 장기 사절단이 파견되었는 바, 지역자치를 위한 평화계획안이 제시되었고 민주주의 제도와 시민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넷째, 다수의 러시아인이 거주하고 있어 몰다비아로부터 독자성을 추구하는 트랜스드네스터 문제와 관련, 1993년 4월 이래 장기사절단이 활동중에 있다. 이들은 몰다비아의 領土保全이라는 틀에서 트랜스드네스터의 특별지위 인정이라는 형태로 분쟁을 조정하였다. 또한 몰다비아 헌법 논의에 초안을 제시하였고, 러시아 제14군의 철수에 관한 협상에 참여하였다.

다섯째, 원주민과 러시아인간의 주민권과 체류허가를 둘러싼 에스토니아 대 러시아인 분쟁 및 라트비아 대 러시아인 분쟁과 관련하

여 장기 사절단과 소수민족을 위한 高等辦務官을 파견, 국적에 관한 입법을 안내하는 한편, 원주민과 러시아인간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다.

여섯째, 체첸 사태와 관련, CFE 조약 및 1992년과 1994년 「빈 CSBMs 문서」 규정들을 위반한 러시아군의 그로즈니시 파괴와 체첸 민간인 살상 이후 대표단이 체첸에 입국하여 대규모의 인권침해를 보고하였다. 휴전 이후 OSCE 원조단 파견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민주주의 제도의 구축과 선거실시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다.

이외에 소수민족을 위한 고등판무관이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알바니아, 키르기즈스탄 등에서 소수민족의 상황과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바, CSCE/OSCE는 이들을 통하여 많은 분쟁들의 확산을 억제하고 있다.²²⁵⁾ 그러나 상기와 같은 CSCE/OSCE의 긍정적인 성과들은 단지 국지적으로 한정된 분쟁관리(conflict management) 면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2) 문제점

가) 拘束力의 결여

CSCE/OSCE는 분쟁조정을 통하여 포괄적인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합의를 도출하는 '包括的인 紛爭調整'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는 CSCE/OSCE가 어느 회원국의 규정 위반시 또는 미집행

225) Ibid., pp. 107~110; SIPRI Yearbook 1995, pp. 290~297 참조.

시 관련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國際法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는 법적의무의 이행과 완수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CSCE/OSCE의 합의 사항과 원칙들은 국제법상의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국들에게 부가된 의무도 국제법적 의무가 아닌 정치적 의무로서 정의된다. 따라서 제규정들의 위반은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고 CSCE/OSCE는 이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²²⁶⁾

더구나 「헬싱키 最終合意書」의 초안자들은 일국가가 타국가에 무력위협이나 무력사용으로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취할 행동을 규정하지 않았다. 즉 분쟁해결 방법문제에 대하여 「최종합의서」는 확실히 작동될 수 있는 메카니즘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회원국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10원칙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제5원칙은 “協商(negotiation), 調査(inquiry), 調整(mediation), 和解(conciliation), 仲裁(arbitration), 司法的 解決(judicial settlement)이나 기타 평화적 수단(other peaceful means)”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이 모두 실패하는 경우 제5원칙은 단지 “당사국들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합의할 수 있는 길을 계속 모색할 것이다”라고만 밝히고 있다. 따라서 CSCE 과정을 통한 평화의 強制(enforcement) 문제는 「헬싱키 최종합의서」 초안자들에 의해 숙고되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구유고슬라비아, 나고르노-카라바흐, 그루즈야 등의 민족 분쟁들에서 CSCE/OSCE는 이러한 영토와 국민들에게 일어난 비극

226) *Dokumente der KSZE*, p. XLVII.

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시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CSCE 과정이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리는 자들도 있다.²²⁷⁾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의 쉴로터 같은 학자는 민족분쟁을 사전에 인식하여 무력사용을 방지하고 전쟁발발 이후라도 조속히 평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안하고 있다: ① 소수민족 고등판무관 사무실의 OSCE 중앙기구로의 확대, ② 장기사절단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확대, ③ 신속한 위기관리를 위한 OSCE의 운영개선, ④ OSCE 의사결정 능력과 과정의 강화.²²⁸⁾

냉전종식 이후 지역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안전보장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CSCE는 전술한 바와 같이 1992년 헬싱키 제4차 후속회담에서 유엔이 인정하는 '지역적 협정'이 됨으로써 PKO가 가능하게 되었고, 제반의 조직과 기관들이 구성·보완되어 1995년 1월 1일부터 OSCE로 명칭이 변경되고 유엔이 인정하는 '地域的 機關'으로 되었다. 지역적 협정과 기관의 주요 기능은 지역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며, 유엔은 지역적 협정이나 기관에 의한 지역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장려하고 있다.²²⁹⁾ 그러나 유엔은 군사행동이나 기타의 강제행동을 발동하는 것에 관한 한 지역적 협정이나 기관에 방치하지 않고 일정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헌장은 지역적 협정의 당사국

227) 반면 일부 학자들은 전세계적인 집단안보체제 창출을 통하여 평화에 대한 어떠한 위협문제라도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UN헌장과는 다르게 「헬싱키 최종합의서」는 본래 NATO와 WTO간의 전쟁방지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CSCE 과정이 실패하였다는 가혹한 판단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Schifter,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 p. 122.

228) Schlotter, "Die OSZE auf dem Abstellgleis ?" pp. 112~114.

229) 유엔헌장 제52조 2, 3 항.

이나 기관이 지역적 협정에 입각한 강제행동을 발동하는 경우에는 安全保障理事會의 허가를 얻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²³⁰⁾ 이와 같이 평화회복을 위하여 분쟁지역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등의 강제조치들은 유엔안보리의 허가사항으로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OSCE는 향후에도 분쟁의 확산방지나 평화회복 차원에서 소극적인 역할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둘째, CSCE/OSCE 관련 규정들의 이행여부는 회원국들에 의하여 근본적으로 관련국의 내정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타국의 관여는 유엔헌장 제2조 4항에 의하여 금지된 내정간섭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원국이 어떠한 규정을 수용 또는 집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CSCE/OSCE는 이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²³¹⁾ 이와 같은 경우의 구속력 결여도 CSCE/OSCE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²³²⁾

일부 회원국들이 CSCE의 원칙이나 규정을 수용 또는 집행하지 않았던 전형적인 예는 인권분야이었다. 따라서 1991년 「人道的 次元에 관한 모스크바 회의」는 人權問題가 더 이상 내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정의를 내렸다. 이는 인권보호를 위한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으나 타국의 개입에 대한 일반적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안보분야에서 군비나 군사활동은 전통적으로 대내적 주권관련 사안이다. 따라서 회원국이 군축이나 군사활동 통보 등에 관

230) 유엔헌장 제53조 1항.

231) *Dokumente der KSZE*, p. XLVII.

232) 이와 관련 로펠드(Rotfeld)는 “CSCE/OSCE의 효율성이 비교적 낮은 원인은 적절한 절차들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회원국들이 채택된 행동규범을 수용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으려는데 있다”고 주장한다. *SIPRI Yearbook 1995*, p. 295.

한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CSCE/OSCE는 이에 대한 구속력을 갖고 있지 못하며 군비나 군사활동이 평화를 위협하게 될 때 비로소 개입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회원국들의 규정 위반이나 미집행시 어떠한 실질적 구속력도 갖고 있지 못한 CSCE/OSCE는 주로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한 정치적 해결을 위한 중재역할과 국제적 여론조성 등에 한정되는 소극적인 역할하고 있다. 따라서 CSCE/OSCE가 包括的 紛爭管理를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메카니즘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도 적지 않다.

나) 意思決定過程의 비효율성

다수의 국제회의들에서는 통상적으로 결정이 ‘多數決의 原則’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CSCE/OSCE의 특징은 ‘滿場一致의 原則’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수의 국가들이 하나의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바, 이에 따른 의사결정과정의 비효율성이 CSCE/OSCE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CSCE는 회원국들에게 똑같은 발언권을 부여하여 오랫동안 의제를 논의한 이후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진정한 의미의 국가간 신뢰구축이 가능하다는 기본전제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기본전제하에 만장일치의 원칙이 채택되었고, 이는 1973년 6월 8일 채택된 「CSCE 절차규칙」²³³⁾ 제4항에 “어떠한 대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이의를 나타내지 않는 경

233) *Dokumente der KSZE*, pp. 1~3.

우 이를 만장일치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SCE/OSCE에서는 원칙적으로 투표절차가 없으며, 한 결정이 내려지거나 한 문서가 채택되기 위해서는 ‘無言의 승意’가 이루어질 때까지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다수의 CSCE 회담과 관련회의들이 하나의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으며, CSCE가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는 지에 대한 의구심도 증대되었다. 특히 이와 같은 제도내에서는 결론없는 토론만이 지속될 위험성이 있으며 중요한 의사결정이 강대국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구유고슬라비아 사태에서 나타났다. CSCE는 슬로베니아 및 크로아티아 공화국의 독립선포에 따른 내전사태에 직면하여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국제감시단을 파견하는 등 사태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CSCE 회원국들은 자국의 국가 이익과 목표를 위하여 상반된 조정을 주장하였다. 즉 독일은 크로아티아에 우호적이었고 러시아와 프랑스는 세르비아를 지원하였으며 영국은 보다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는 바, 사태의 초기단계에서 적시에 행동통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유고슬라비아 사태는 장기화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유고슬라비아 위기에 직면하여 CSCE는 1992년 2월 프라하 외무장관회담에서 만장일치의 원칙에 대한 제약을 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즉 CSCE 외무장관회담이나 「高位幹部委員會」는 ‘CSCE 관련 의무들의 명백하고 현저한 위반 경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국의 동의 없이’ 적절한 조치들을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만장일치-1’ 원칙은 지금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

는 만장일치 원칙의 한 예외에 불과하다. CSCE/OSCE 의회는 특수한 경우인 바, 업무규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단순 과반수 또는 예외적으로 2/3 다수원칙에 의하여 결정된다. 「代表團長 委員會」의 결정들은 만장일치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²³⁴⁾

이와 같이 대부분의 CSCE/OSCE 관련 회담과 회의들에서 만장일치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CSCE/OSCE가 냉전종식 이후 유럽에서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안보문제들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기적으로 OSCE의 의사결정 과정과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의 제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바, 독일학자 쉘로터는 유엔안보리의 전형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 및 EU의 상임이사국과 6개국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는 「OSCE 安保協力理事會」의 창설을 제안하고 있다.²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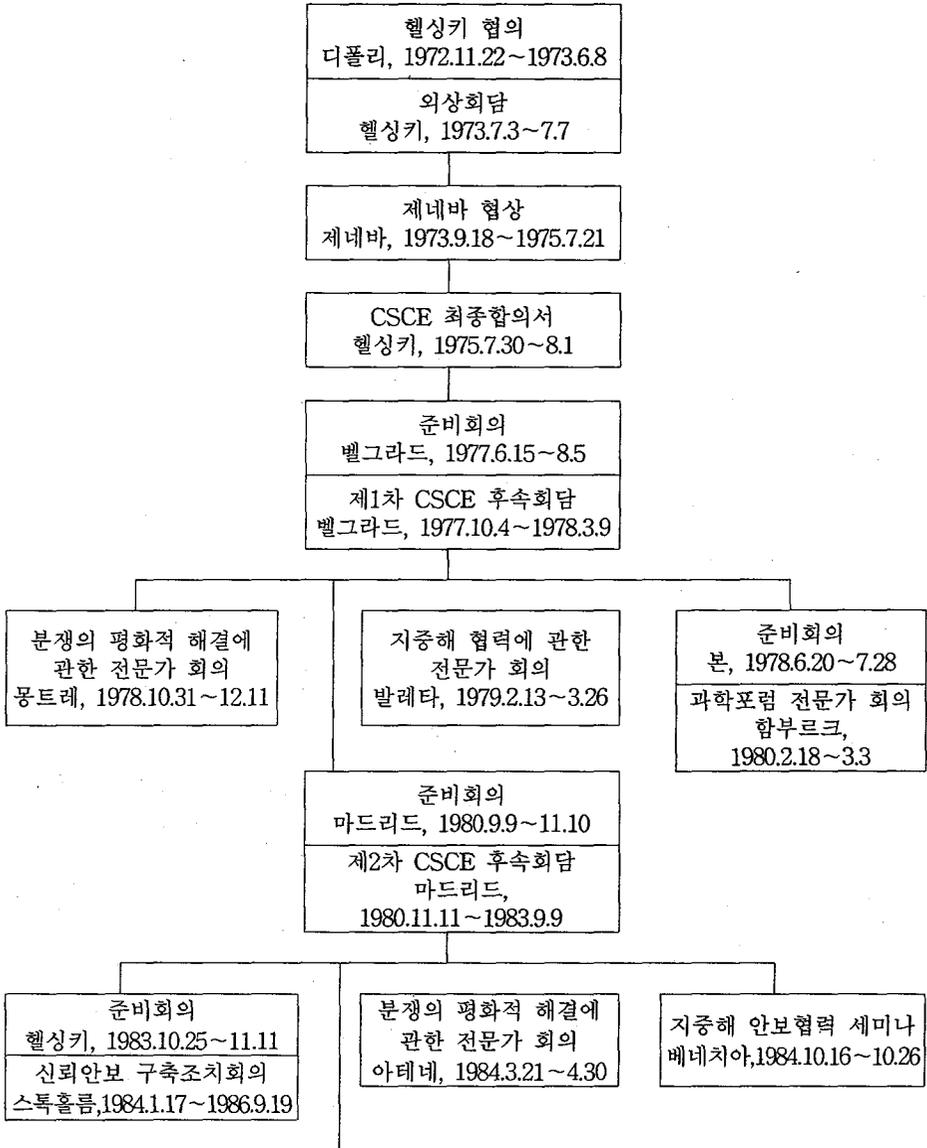
(2) 동남아의 경험(AR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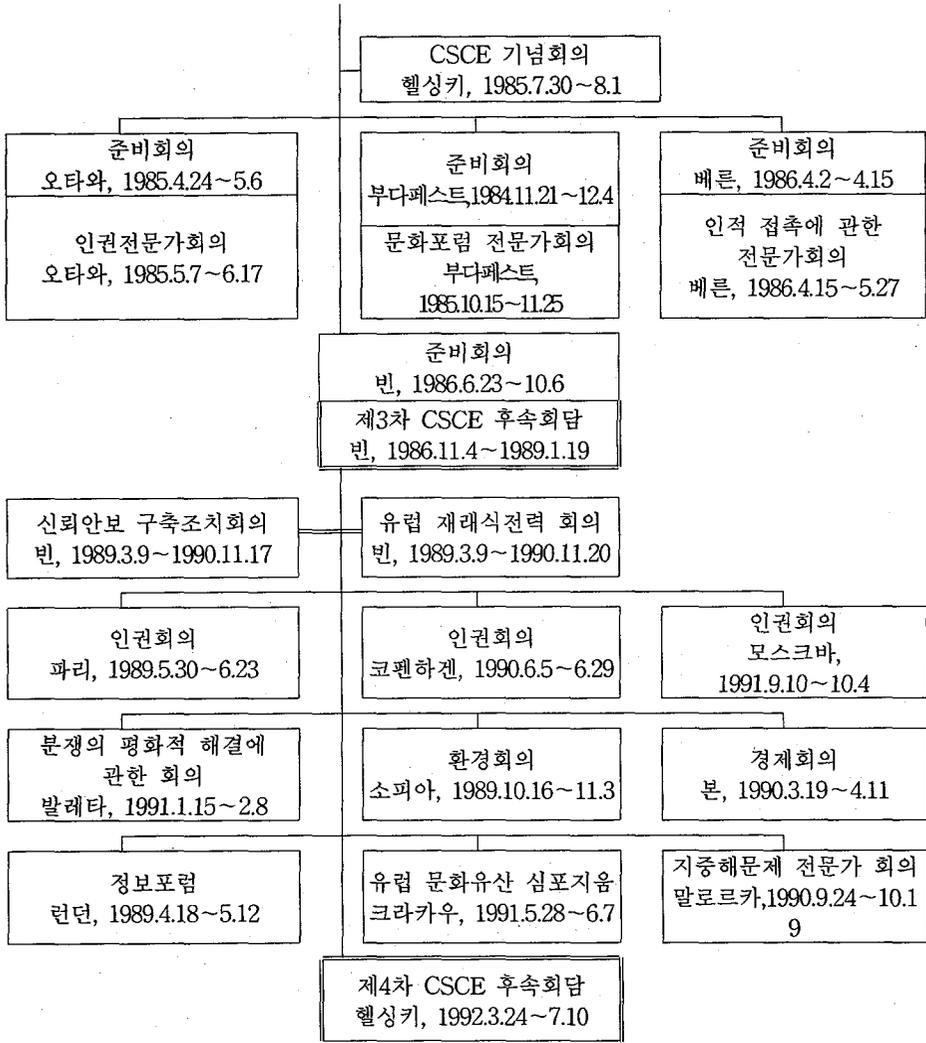
동남아에 있어서 대표적인 지역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노력은 ASEAN의 주도에 의해서 1994년 7월에 발족한 ARF를 들 수 있다. 역내 각국 지도자들의 정기적인 회합을 통하여 이해증진, 신뢰구축, 예방외교를 실천함으로써 국가간 대립과 분쟁을 해결하고 갈등의 원인을 제거해 나가자는 목적에서 설립된 ARF는 그간 두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역내국가들 사이에 정치·안보에 관한 건설적 대화와 협의의 전통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냉전이후 亞·太地域 安保論議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234) *Dokumente der KSZE*, p. XXXII.

235) Schlotter, "Die OSZE auf dem Abstellgleis ?" p. 114.

<표 8> CSCE 과정





출처: Manfred Efinger, "Vertrauens- und sicherheitsbildende Massnahmen in und fuer Europa" in Beate Kohler-Koch, *Regime in den internationalen Beziehungen* (Baden-Baden: Nomos Verlagsgesellschaft, 1989), pp. 344~345 참조.

ARF의 발족은 아태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이 ‘논의차원’에서 ‘구체적인 협의의 단계’로 진입한 것을 의미하며, 과거 냉전기간 중 적대관계에 있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베트남 등의 국가를 포함한 아태지역의 17개 주요 국가와 「유럽연합」(EU)의 대표가 처음으로 정부차원에서 이 지역의 정치 및 안보협력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참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본 절에서는 ARF의 설립 배경과 주요 논의사항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가) ARF의 설립배경

ARF의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ASEAN 회원국들은 역내 안보문제를 기본적으로 ‘ASEAN 틀 밖’(on a non-ASEAN basis)에서 다루어 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ASEAN 국가들간의 안보위협에 대한 상호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ASEAN 국가들은 각국의 지정학적 위치 등 구조적 요인에 따라 중국, 소련, 베트남 등 외부세력에 대한 상이한 위협인식을 갖고 있었다. 즉 지정학적으로 인도차이나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은 외부세력의 위협에 대하여 비교적 덜 민감한 반면,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인도차이나 인접국가들은 인도차이나 공산화 이후 외부위협에 민감할 수 밖에 없었다.

둘째, 대부분의 ASEAN 회원국들은 외부세력에 의한 직접적인 안보위협보다는 내부의 자생적인 취약요인, 즉 질병·빈곤·실업·소수민족 문제와 이로 인한 반정부 공산계렬라의 준동 등을 주요한 안보

문제로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필리핀은 1960년대 말 권위주의체제에 불만을 품고 자생적으로 발생한 신인민군 등 내부의 반정부 공산계릴라 세력퇴치에 안보정책의 핵심을 두었다.

셋째, ASEAN 회원국들이 안보협력문제를 ASEAN의 공식 의제로 다루지 않았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ASEAN이 안보협력체로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베트남 등 외부세력들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있었다. 이러한 인식하에 ASEAN은 외부세력의 위협에 대하여 「ZOPFAN 구상」²³⁶⁾을 바탕으로 중립화 논리를 펴왔다.

그러나 「ZOPFAN 구상」에도 불구하고 ASEAN 국가들은 미국의 필리핀내 군사기지의 존속을 선호하는 등 실제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긴밀히 추구하여 왔으며,²³⁷⁾ 이러한 ASEAN의 친서방 안보정책은 1970년대 중반 인도차이나 공산화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이상과 같은 ASEAN 국가들의 지역안보 인식은 동서냉전의 종식으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즉 냉전의 종식으로 1970년대 이래 지역안보의 핵심사안이 되어온 캄보디아 분쟁이 해결단계에 접어들

236) ZOPFAN 구상은 말레이시아가 동남아시아의 중립화를 목표로 제안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미·중·소의 보장에 의한 동남아의 집단적 중립화(collective neutralization), 둘째, 동남아 국가간의 상호 불간섭, 불가침의 원칙 존중과 주변 강대세력간 경쟁에 不介入. ASEAN 국가들은 1971년 칼라룸프르에서 이러한 ZOPFAN 구상을 지지하였다. Muthiah Alagappa, "Regional Arrangements and Interantional Security in Southeast: Going Beyond ZOPFAN," *Contemporary Southeast Asia* (1991 March), pp. 269~305.

237) 비동맹국가들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조차도 미군의 존재를 이 지역 공산주의의 준동에 대한 균형의 요인으로 간주해 왔다.

었으며, 중국·베트남 화해와 소련의 해체 등으로 동남아 지역에 대한 공산주의 팽창위협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冷戰의 終熄이 ASEAN 국가들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을 자동적으로 개선시켜 주지는 않았다. 즉 ASEAN 국가들은 냉전의 종식과 함께 1992년 12월 클라크·수빅 등 필리핀내 미군기지의 조기폐쇄로 미국의 '地域 安保雨傘'이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걷힐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ASEAN 국가들은 미군철수 이후 지역 내 힘의 공백상황으로 인한 외부세력의 간섭가능성에 스스로 대비해야 하였으며, 따라서 냉전종식 이후 오히려 더욱 어려운 안보상황에 처하게 되었다.²³⁸⁾ 냉전종식 이후 세계적인 탈군사화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ASEAN 국가들이 군사력 증강에 힘쓰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남중국해의 산호섬들로 구성된 남사군도(Spratly Islands) 영유권문제는 동남아 지역안정을 위협하는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중국은 역사적 이유를 들어 남사군도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섬과 동시에 남중국해 전역을 중국의 내해(inland waters)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서 남사군도를 중심으로 중국과 이 지역의 전체 혹은 일부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부르나이, 베트남 등 ASEAN 국가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다.²³⁹⁾

238) 탈냉전기 ASEAN 지역안보를 종합적으로 살피려면 Amitav Acharya, "A New Regional Order in South-East Asia: ASEAN in the Post-Cold War Era," *Adelphi Paper*, no. 279 (August 1993) 참조.

239) 남사군도 분쟁은 주변의 풍부한 석유자원의 확보라는 경제적 이유와 함께, 그 이면에 냉전 이후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역할축소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번도 본격적인 도전을 받아오지 않던 태평양 제해권이 자칫 중국의

이러한 상황에서 ASEAN 회원국은 1991년 7월 칼라룸푸르에서 ASEAN과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EC 등 7개 對話相對國들(dialogue partners)이 ASEAN-PMC²⁴⁰를 개최하여 지역 안보협력 가능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나카야마(中山太郎) 일본 외상은 당시 국제정세하에서 아·태지역 안보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치적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ASEAN-PMC를 안보·정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의하였다.

일본에 의하여 촉발된 이 의제는 과연 아·태지역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로 발전되어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개진되었다. 당시 베이커 미국무장관은 아·태지역 안보는 아직 기존의 兩者 同盟關係가 중요하며, 미·일 안보동맹이 이 지역 안보체제의 중추임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바다위(Badawi) 말레이시아 외상은 ASEAN-PMC의 확대·강화는 안보문제를 포함한 각종 아·태지역 문제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주장, 다자간 안보협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대부분의 참가국들도 일본의 안보논의 제의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으며 지역안보협의체의 필요성에 인식을 함께 하였다.²⁴¹⁾

주도아래 놓여지게 될 가능성을 보임으로써 관련 당사국 이외에 미국, 일본 등도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Leszek Buszynski, "ASEAN Security Dilemmas," *Survival*, vol. 34, no. 4 (Winter 1992~93), pp. 91~93;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2. 8. 6.

240) ASEAN은 1979년 이래 매년 7월 역외 주요국가들과 대화를 추진할 목적으로 정례 ASEAN 외무장관회의(ASEAN-AMM) 직후 ASEAN-PMC를 개최하여 오고 있다.

241)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1. 8. 1; 「경향신문」, 1991. 7. 25.

ASEAN은 19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4차 ASEAN 정상회담에서 역외 대화상대국들과 ASEAN-PMC를 통하여 아·태지역의 안보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서 1992년 7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PMC에서 ASEAN과 7개 대화상대국 외상들은 남중국해 영유권, 캄보디아 분쟁, 인도차이나 난민문제 등 지역안보 전반에 관하여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로써 ASEAN은 종래 타부시하여 왔던 지역안보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ASEAN-PMC는 아·태지역의 유일한 안보대화의 장으로 등장하였다.

1992년 ASEAN-PMC에서 ASEAN은 첫째, 역내안보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남사군도 영유권 분쟁에 대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무력사용의 반대, 동 해역에 대한 航海權 保障, 자원의 공동개발을 강조하고, 둘째, 냉전종식 이후 동아시아지역에서 힘의 공백을 우려하면서 동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미군 주둔을 지지하였다. 이는 ASEAN이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미군주둔을 처음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또한 ASEAN은 1993년 5월 싱가포르에서 한국, 미국, 일본 등 대화상대국들과 ASEAN 고위간부회의(ASEAN-PMC SOM)를 개최하여 미군감축과 관련한 지역안보문제, 클린턴 행정부의 대아시아 安保政策 등을 논의하였으며, 그 해 7월에 개최된 ASEAN-PMC에서 ARF의 창설을 적극 주장하였다.

이러한 ASEAN의 아·태지역 다자안보협의체 설립주장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사항이 아울러 고려된 것이다. 첫째, 1975년 「헬싱키 최종합의서」 채택 이래 성공적으로 기능하여 온 CSCE의 영향력 증대를 감안할 때 아·태지역에서도 국제적 안전보장을 위한 다국간 협

력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논리가 회원국 사이에서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1989년 발족한 APEC이 비교적 순조롭게 발전함으로써 ASEAN은 안보면에서의 다국간 지역협력을 병행·추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셋째, 지난 1967년 출범 이래 약 30년의 기간 동안 ASEAN이 창출하여 온 생존능력, 인도네시아와 같은 거대한국가와 싱가포르와 같은 조그만 섬나라가 '동등한 바탕' 위에서 역내결속을 다져온 특유의 응집력, 그리고 최근 경제의 괄목할만한 역동성 등을 바탕으로 한 ASEAN 확대 움직임²⁴²⁾ 등이었다.

한편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의 등장을 계기로 아·태지역의 다자안보협력체 수립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1993년 7월 클린턴 대통령은 일본의 와세다대학 연설에서 「新太平洋 共同體」(New Pacific Community) 구상을 통하여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안보논의에 있어 기존의 쌍무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다자간 안보협약체의 형성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²⁴³⁾ 같은 해 7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EAN-PMC에서 크리스토퍼(Warren Christopher) 미국무장관은 아·태지역 안보협력을 위한 ARF 설립 제안에 찬성하였다. 그 결과 1994년 7월 방콕에서 ASEAN-PMC 참여국 이외에 중국, 러시아, 베트남, 라오스, 파푸아 뉴기니 등 총 18개국이 참여하

242) 최근 ASEAN은 베트남의 기구 조기가입(1995.7),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설립(1993.1), 그리고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을 포함하는 동남아지역에서 EU와 같은 지역통합을 지향하는 「동남아공동체」(SAC) 구상(1994.5) 등을 통하여 다차원적 기구로 발돋움하고 있다.

243) 이에 앞서 1993년 3월 윈스턴 로드(Winston Lord) 미국무성 동아시아담당 차관보는 자신의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이 아·태지역의 지역안보협력체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신태평양공동체」 구상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으로는 유석진·한태준, 「신태평양공동체 구상의 주요 쟁점」 「신태평양공동체 구상과 한국」(서울: 세종연구소, 1994), pp. 9~38 참조.

는 ARF가 출범하였다(<표 9> 참조).

(나) ARF의 주요 논의사항 및 평가

1) 제1차 AR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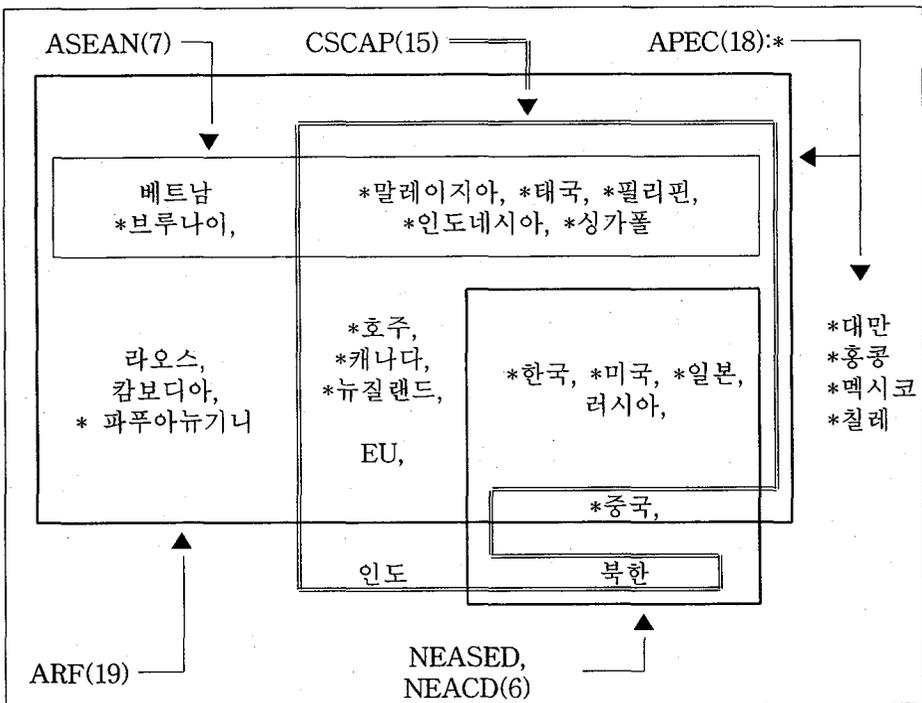
1994년 7월 방콕에서 개최된 제1차 ARF에는 총 18개국이 참가하였다. ASEAN 6개국과 ASEAN-PMC 초청대상인 대화상대국(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EU), 협의대상국(러시아, 중국), 그리고 정례 ASEAN 외무장관회의에 업저버로 참가하는 베트남, 라오스, 파푸아뉴기니 등이었다. 이렇게 아·태지역의 모든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ARF는 아·태지역의 OSCE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제1차 ARF에서 참가국들은 아·태지역의 안보문제를 위협하는 남중국해 문제, 캄보디아문제, 북한 핵문제²⁴⁴⁾, 신뢰구축방안, 군사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문제 등을 중점 논의하였으며, ARF의 정례화와 「동남아우호조약」의 준수 등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참가국들은 ARF가 아·태지역 국가들간의 신뢰구축과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한

244) 제1차 ARF에서 북한 핵문제는 지역안보 의제 중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현안으로 다루어졌으며, 참가국 외무장관들은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안보 및 세계평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북한 핵문제는 사안의 시급성 및 중대성을 감안하여 지역안보 의제로는 유일하게 회의 종료 이후 채택된 의장성명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 외교안보연구원, “최근 ASEAN의 동향: AMM, ARF 그리고 PMC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1994. 9. 7, p. 10~12.

豫防外交(preventive diplomacy)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ARF의 활동과 역할을 강화하여 나가기로 합의하였다.²⁴⁵⁾

<표 9>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성국가('95.11 현재)



한편 한국은 ARF 기간 중 고위간부회의(ARF-SOM)을 통하여 NEASED 구상을 제안하였다.²⁴⁶⁾ NEASED 구상은 동북아시아의 한

245)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4. 8. 4 p. 15; 외교안보연구원, “최근 ASEAN의 동향: AMM, ARF 그리고 PMC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1994. 9. 7, pp. 10~12. 참조.

246)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이미 1993년 5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EAN

반도문제, 북한 핵문제, 일본 및 중국을 포함한 각국의 군비증강 추세, 일·러 영토분쟁 등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동북아 평화를 위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NEASED가 동북아지역에서의 예방외교와 안보협력을 증진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아·태지역 전체의 안보문제를 다루는 ARF와 협력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병행하여 운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제안에 일본, 중국도 그 유용성을 인정한다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서 NEASED 구상의 실현 가능성이 한층 제고되었다.

제1차 ARF 회기 중 북한은 호주 및 몇몇 ASEAN 국가들을 통하여 ARF 참여 가능성을 이미 타진한 바 있으며 여러 경로를 통하여 북한의 ARF 참여문제가 거론되었다. 그러나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북한의 참여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한국 및 미국의 주장으로 북한의 참여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제1차 ARF는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에 있어서 어떠한 구체적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으나 동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정부차원의 공식적 다자안보 협의체라는 점에서 기대이상의 의의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ARF는 과거 냉전시대에 ASEAN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국가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지역안보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만남 그 자체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었다. 그러나 참석국 모두가 활발한 토론 분위기에서 ARF의 목적과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였다.²⁴⁷⁾ 특히 ARF를 매년 정례화하고

PMC-SOM에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일차 제기한 바 있다.

필요시 실무자급 관련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점과 차기 의장국이 제2차 ARF 준비를 위하여 검토할 6개 협의분야를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은 ARF의 향후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역내 안보협력의 실질적 진전 가능성을 일단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제2차 ARF

1995년 8월 부루나이의 반다르 세리 베가완에서 개최된 제2차 ARF에는 베트남이 ASEAN 정회원국 자격으로 참가하는 한편, 캄보디아가 옵저버국으로 참가하여 총 19개국의 외무장관들이 참석하였다. 제2차 ARF에서 참가국들은 ARF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하여 회원국간 합의를 도출해냄으로써 ARF는 향후 亞·太地域 安保懸案에 대한 정부간 공식적 다자협의체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부여받았다. 의장성명으로 발표된 주요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²⁴⁷⁾

첫째, 참가국들은 ARF를 아·태지역의 안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단순히 군사적 측면만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를 포함하는 ‘包括的 安保概念’(concept of comprehensive security)에 입각하여 운영할 것을 기본목표로 하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참가국들은 ARF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든 회원국들의 동등한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ASEAN 국가들이 일차적 추진세력(primary driving force)로서의 임무를 담당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247) 외교안보연구원, “최근 ASEAN의 동향: AMM, ARF 그리고 PMC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1994. 9, p. 15.

248) 앞의 글, p. 17~18.

둘째, 회원국들은 향후 역내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방안으로 ARF가 모든 절차를 회원국간 무리가 없는 선에서 광범위한 협의를 거쳐 합의(consensus)에 따라 진행시킬 것과 점진주의적 절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역내 안보환경 개선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1단계 信賴構築 増進(stage I: promotion of confidence building), 2단계 예방외교의 개발(stage II: development of preventive diplomacy), 3단계 紛爭解決 노력(stage III: elaboration of approaches to conflicts). 아울러 제2차 ARF에서 회원국들은 현재 제1단계인 신뢰구축 방안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논의함과 동시에 제2단계 예방외교 조치들 및 특히 상호중첩되는 의제들을 제1단계 의제들과 병행하여 진행할 것임을 선언하고, 분쟁해결 방안의 모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토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ARF의 정규절차로 정착시킨다는데 합의하였다.

셋째, 제2차 ARF는 보다 효율적이며 연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추진력을 얻고자 정부간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Track I 과 각국의 전략연구소 등 비정부 유관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Track II의 두가지 방식을 병행하는 절차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두차원의 활동들은 ARF 의장국을 통하여 상호연결성을 가지는 한편, 각국에 원활히 전달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안보협력을 위하여 시행가능한 구체적 조치들을 검토하기 위한 정부간 실무작업반을 구성하되, 방위백서 발간 및 안보대화를 통한 신뢰구축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회기간 지원그룹(Inter-sessional Support Group)과 平和維持 노력을 포함한 협력활동을 위한 회기간 회의(Inter-sessional Meetings) 등의 설치·운영이 합의되었다.

넷째, 제2차 ARF는 주요 지역안보 문제로 남중국해 영유권문제, 한반도문제, 캄보디아문제, 핵확산금지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회원국들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당사국들이 관련 국제법과 남중국해에 관한 1992년 ASEAN 선언을 준수하도록 촉구하였으며, 한반도문제를 아·태지역 평화와 안보에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팔라렘푸르 미·북 경수로협상을 환영하고, 1994년 10월 21일 채택된 제네바 합의의 전면적 이행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남북한간의 대화재개를 촉구하고 나아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한국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제2차 ARF의 가장 큰 의의는 창설된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ARF가 2차 회의를 통하여 기본목표와 3단계 추진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아·태지역내 안보현안에 대한 정부간 공식적 다자 협의체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남중국해 領有權 紛爭, 한반도문제, 캄보디아 문제 등 다양한 분쟁요인을 안고 있는 아·태지역의 안보문제 협의과정에서 미·일·중·러 등 주요 강대국들이 모두 적극 참여함으로써 ARF의 유용성이 제고되었다. 또한 아·태지역 19개국의 외무장관들이 동시에 참석함으로써 다자차원에서는 물론 양자간 현안해결을 위한 양자회담의 기회가 자연스럽게 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역내국가간 양자, 소지역 및 전지역 차원의 각종대화 및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ARF가 아·태지역 안보문제 협의과정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중국을 포함한 모든 참가국들이 자발적으로 자국의 國防政

策에 관한 年例白書를 ARF나 ARF-SOM에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과 참여국간 군인사교류 및 고위급 접촉을 확대하는데 합의한 것은 ARF발전을 위한 큰 진전이였다. 이와 함께 아태지역내 소지역 안보대화가 권장되었는 바, 지난 제1차 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NEASED가 병행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다) ARF의 문제점 및 향후 전망

ARF는 ASEAN의 주도에 의하여 창설되었으며, ASEAN은 ARF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자신이 일차적이며 중심적인 추진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이 참여하고 있는 ARF를 과연 비강대국 세력인 ASEAN이 주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ARF 출범시부터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미국과 중국간의 긴장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ASEAN이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향후 ARF의 방향설정과 관련하여 ARF를 보다 구체성을 띤 안보기구로 만들어 나가려는 일부 참여국들과 이러한 움직임을 자신을 봉쇄하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중국과의 견해차이로 노출된 바 있다. 즉 1995년 5월 ARF-SOM시 호주는 ARF가 紛爭解決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안보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위한 공식적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중국은 이에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⁴⁹⁾

249) 앞의 글, p. 20.

이에 따라서 이 문제는 실무그룹 대신 후원그룹(support group 또는 meeting)으로 타협이 이루어졌다.

ARF의 주도세력임을 자임하는 ASEAN은 공식의제 및 기구발전에 정계획 등을 미리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민감한 안보문제에 대하여 간접적이며 비대결적인 자세로 접근하고 있다. ASEAN의 해법은 ARF의 진전이 너무 빠르거나 반대로 너무 느려서도 안 되며, 모든 참여국들이 만족할 수 있는 속도로(at a pace comfortable to all participants)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⁵⁰⁾ 이와 같은 ASEAN의 運營方案이 다양하고 이질적인 참여국들간 이견을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ARF의 성공적 추진에 있어서 ASEAN의 중심적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떠한 세력도 부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ARF는 당분간 ASEAN을 중심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한편 제2차 ARF에는 ASEAN의 7번째 회원국이 된 베트남과 ASEAN의 업저버국 지위를 새로이 획득한 캄보디아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ARF를 주도하여 나가는 ASEAN의 입지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ARF의 장래는 현재로서는 매우 불투명하다. ARF는 아태 지역의 유일한 공식적인 다자안보협의체이다. 그러나 ARF가 ASEAN과 직접적인 이해를 갖지 않는 한반도문제, 중국·대만의 잠재적 갈등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장이 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즉 ARF가 필리핀 주둔 미군의 조기철수로 인한 동남아에서의 힘의 공백상황을 극복하는 데에는 유용한 메카니즘으로

250) 앞의 글, pp. 8~10.

작용할 수 있으나, 아직 냉전구도가 실재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안보문제를 실제 이해당사국이 아닌 ASEAN이 주도하는 ARF가 다루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는 ASEAN은 한반도문제 등 동북아시아 문제를 다루기 위한 ARF와는 별도의 소지역차원 다자안보대화를 동시에 운영하는 방안을 수용하는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ARF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있는 학자는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의 달지트 싱(Daljit Singh)이다. 그는 ARF가 역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도 미·일·중·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역학관계의 조정문제, 중국 등 일부 국가의 軍事大國化 가능성, 무기확산문제, 그리고 전반적으로 불확실한 역내 안보환경 등을 고려할 경우 투명성 증대와 부분적인 신뢰구축의 제도화를 통하여 지역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²⁵¹⁾

2.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가. 基本方向

1991년말 소련의 붕괴 이후 동북아시아는 冷戰體制로부터 새로운 탈냉전체제로의 질서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전술한

251) Daljit Singh, "East Asian Security Means Dialogue and U.S. Will,"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ly 27, 1993.

바와 같이 역내질서의 다극화추세와 經濟的 相互依存度 심화라는 긴장완화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강대국간 이해대립, 분단국과 영토문제, 군비경쟁 및 북한과 중국체제의 불확실성 등 잠재적 갈등요인들로 인하여 동북아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평화질서가 정착되지 못하고 국가간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과거 냉전시기에는 미·소라는 두개의 霸權國이 존재하여 역내국가들이 어느 일방에 편입됨으로써 국가안보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양극체제하에서 불완전하나마 나름대로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다. 냉전에서 탈냉전으로의 과도기에 처해 있는 동북아 질서는 안정요인과 불안정요인이 병존함으로써 이중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 모색되고 있는 동북아지역의 신질서가 역내 평화 뿐만 아니라 역내국가들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미, 일, 중, 러 등 4강대국이 참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남북한이 상호불신과 적대적 대립 속에 있는 동북아지역에 平和體制를 조성하는 것은 지역 평화체제에 대한 개념정의를 원용할 때,²⁵²⁾ 다음과 같은 역내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지역 역내국가들간에 세력균형 원칙이 지배하고, 지역적 안보기구가 존재하며, 역내국가들이 정치·경제·군사·문화 등의 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결코 무력에 의한 영토확장을 도모하지 않고, 이해충돌에 의한 분쟁의 경우에는 협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으며 필요시에는 분쟁의 조정과 해결을 위한 중개자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의 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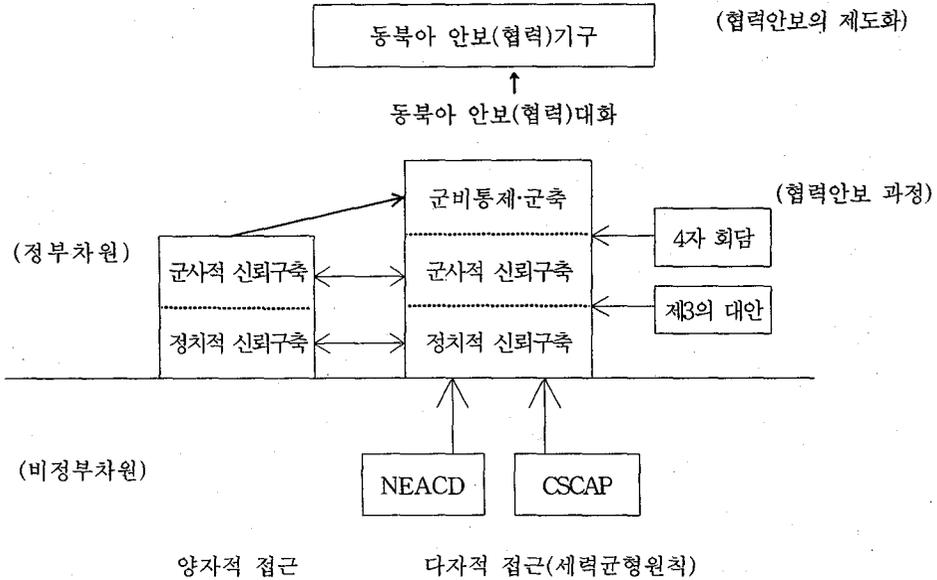
252) 본 논문의 p. 113 참조.

협력안보의 유럽지역 경험인 CSCE/OSCE와 동남아시아 경험인 ARF가 주는 시사점들을 고려할 때 상기와 같은 東北亞 平和體制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평화체제 구축, 양자적 접근과 다자적 접근의 병행추진, 다자간 협력안보의 제도화라는 3가지 기본방향이 우선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첫째, 동북아 평화체제는 역내질서의 특징과 CSCE의 역사적 경험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조성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지역을 미·일·중·러 4강대국과 남북한간의 이념적, 안보·전략적, 경제적 이해가 相互交叉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평화체제가 조성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동북아 안보정세의 특징에서 분석되었듯이 동북아지역 강대국간의 관계가 향후 역내 안보질서의 향배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표출되고 있는 미·일간 經濟摩擦, 미·중간 대만문제와 중국내 인권문제, 중국과 러시아의 대외 군사무기수출 및 일·중간 군비경쟁 등의 문제들은 각국의 중대한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해결될 사안들이 아니다. 또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냉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중·대만간 및 남북한간의 이념대립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방 4개도서와 조어대(센카쿠)열도 등의 영토분쟁 가능성은 이들을 자국영토에 일방적으로 편입시키려는 일본의 방침으로 더욱 커지고 있다.²⁵³⁾ 이러한 제반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역내국가간의 정치적·군사적 신뢰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을 필요로 할 것이다.

253) 일본 자민당은 1996년 10월 20일 총선을 앞두고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독도를 비롯하여 센카쿠열도, 북방영토가 모두 일본 영토임을 분명히 하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세계일보」, 1996. 9. 30.

<표 10>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동남아시아 지역의 안보협력체인 ARF는 나카야마 일본 외상이 1991년 7월 팔라렘푸르 ASEAN-PMC에서 이를 안보·정치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로 발전시킬 것을 제의한 이후 3년만에 출범되었다. 그러나 ARF가 이렇게 단기간내에 출범할 수 있었던 것은 'ASEAN 틀 밖'에서 1970년대 초부터 역내 安保問題를 다루어 왔다는 점, 1979년 이후 ASEAN과 ASEAN 이외의 대화상대국이 참여하는 ASEAN-PMC가 매년 개최되어 아·태지역 안보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이미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는 점 등 때문이다.

또한 1954년 베를린 4국 외상회담에서 몰로토프 소련 외상이 최초로 유럽집단안보에 관한 전유럽조약의 체결을 제의한 이후 1973년 35개국이 참여한 최초의 CSCE 회담이 개최될 때까지 약 20년이라

는 장기의 시간이 걸렸다. 이는 우선 50년대 냉전시기에는 동서진영 간 이념적·권력정치적 대립이 첨예하였기 때문이었다. 60년대 데탕트시기에는 양진영의 변화와 접근에도 불구하고 CSCE 최초 회담의 소집에 대한 합의를 하는데 5년, 그리고 회담이 작업을 완료하여 「헬싱키 最終合意書」를 채택하기까지 또 2년이 걸렸다. 이렇게 볼 때, 한 지역에 정부차원의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형성하는데 약 20~2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지역 평화체제는 역내국가들의 이념이 상이하다는 점과 안보 및 경제이해가 상호교차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동북아 평화체제는 역내국가들의 양자적 접근과 다자적 접근이 병행추진(Two-Track)되는 가운데 모색되어야 한다. 동북아질서가 소련 붕괴 이후 양극체제에서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다극체제로 변화되고 海洋安全과 환경문제 등으로 지역안보문제가 다원화되고 있는 바, 지역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한 노력이 양자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다자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동북아지역 일부 국가간에는 아직도 정식 외교관계가 없고 영토문제와 이념대립 등으로 불신이 지속되고 있는 바, 동북아지역의 平和定着을 위해서는 역내국가 양자간의 관계개선 등 신뢰구축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신뢰관계가 회복·증진된 이후에야 협력안보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련 붕괴이후 동북아에서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緊張緩和 추세는 비정부차원의 NEACD 형성 등 새로운 안보협력과 다자간 상호의존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

들이 민간차원의 다자안보협력체를 정부차원으로 격상하거나 이를 제도화하는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럽이나 동남아의 경우와 달리 동북아지역에서는 역사적으로 안보문제를 다자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전통이 결여되어 있다. 동북아 평화체제는 CSCE와 ARF의 예에서 보듯이 장기간 동안 역내국가들의 다자간 협력안보과정을 기초로 하여 구축될 수 있을 것인 바,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과 軍備統制 및 군축을 위한 다자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은 역내의 다양성과 상호 배타성을 고려하여 다자적 접근보다는 양자간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추구한다고 할 때 어느 수준까지의 양자간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한 그 수준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념과 안보·경제적 이해가 상이한 동북아 역내의 모든 국가들이 양자관계에서 일정기간 동안 그 수준에 상응하는 相互信賴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의 문제들이 발생한다. 바로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로 인하여 역내 모든 국가들의 양자간 신뢰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유럽과 동남아지역에서도 다자적 접근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양자관계에서 상호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은 「헬싱키 최종합의서」의 협상과정에서와 같이 다자간 논의와 협의과정에서 상호 양보함으로써(giue and take) 타협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에 평화체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부 국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先 兩者的 接近, 後 多者的 接近’ 방식보다는 두 접근법을 병행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동북아 평화체제는 정부차원의 다자간 협력안보과정이 지역 안보협력기구로 제도화됨으로써 공고히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제

도화란 비록 항상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상설적으로 존재하는 협의회들이 조직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협의회들이 단지 정기적인 회합만을 가질 경우에도 제도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²⁵⁴⁾ ARF는 출범한 지 2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어떠한 상설협의회도 갖고 있지 않으며 정기적 회합을 갖는 산하 협의회도 없다. 따라서 ARF는 제도화된 안보협력기구가 아니며 관련 19개국이 매년 1회씩 지역안보문제를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지역포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CSCE의 경우 冷戰終熄 이전부터 소련과 동구국가들은 CSCE의 제도화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방국가들은 CSCE의 제도화에 반대하였는 바, 이는 서방 동맹체제와 경제통합 과정에 미칠 수 있는 소련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또한 서방국가들은 어떠한 임무들이 제도화된 CSCE에 부여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도 미처 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CSCE 제도화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이러한 부정적인 입장은 냉전종식과 더불어 완전히 변화되었다. CSCE는 냉전종식을 선언한 1990년 11월 파리 특별정상회담에서 질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 이전까지의 CSCE 과정을 단지 ‘혼란스런’ 회의들의 연속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면, 「파리헌장」의 부속문서에서 CSCE의 제도화에 대한 상세한 조치들이 규정됨으로써 CSCE 과정이 새로운 常設協議會들의 창설을 통하여 조정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CSCE의 제도화는 1991년 베를린과 제1차 외무장관회담과 프라하 제2차 외무장관회담, 1992년 헬싱키 결의안과 스톡홀름 제3차 외무장관회담 등으로 계속 발전되었다.²⁵⁵⁾ 그 결과 마침내 CSCE는 1994

254) *Dokumente der KSZE*, p. XXXII.

년 12월 부다페스트 제5차 CSCE 후속회담의 결정을 통하여 1995년 1월 1일부로 OSCE로 명칭과 기능이 변화되었다. 즉 협력안보의 제도화를 통하여 OSCE가 유엔이 인정하는 ‘地域的 機關’이 되었는데, 유럽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하는데 유엔보다 우선순위를 갖게 되었다. 또한 OSCE는 활동목표를 예방외교, 중재를 통한 무력분쟁의 확산 방지, 전쟁확대 방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범치주의적·민주적 관계구축의 지원 등에 두고 유럽평화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아직까지 지역포럼의 수준에 있는 ARF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제도화됨으로써 동남아 및 아·태지역 평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볼 때 동북아지역에서도 정부차원의 多者安保協力體가 형성되고 이를 통하여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및 군축이 어느 정도 실현될 경우, 이러한 협력안보 과정을 제도화함으로써 역내 평화가 더욱 공고히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細部 推進方案

상기와 같이 東北亞 平和體制를 조성하기 위한 3가지 기본방향이 설정된 이후에는 어떻게 동북아지역의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추진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기본방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북아 평화체제는 양자적 접근과 다자적 접근을 병행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자간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문제는 당사국들이 정상회담이나 고위인사 교류, 경제·사회·문화 관계의 확대, 군사관련 기본조약이나 협정의 체결, 군사훈련시 상대국 참관단의

초청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다자간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는 관련국들의 안보·경제이해가 복잡하게 상호 얽혀 있기 때문에 간단하지가 않다. 또한 軍備統制나 군축의 문제는 대체로 다자간 안보관련 사안이지 양자간 사안이 아니다. 즉, 동북아 역내국가들 중에서 양자간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이 확보되었다고 하여도 다른 국가들이 함께 군비통제나 군축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국가도 양자간만의 군비통제나 군축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본 절에서는 다자적 접근을 중심으로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체적 造成方案들은 첫째, 비정부·민간차원의 다자안보협력체를 정부차원으로 격상시키는 방안, 둘째, 정부차원의 다자안보협력체내에서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및 군축을 달성하는 방안, 셋째, 정부차원의 다자안보협력체에 의한 협력안보 과정이 성숙되는 경우, 이를 다자안보기구로 制度化하는 방안으로 구별하여 제시되었다.

(1) 政府次元의 多者安保協力體 形成

동북아지역에서는 현재 비정부·민간차원에서 NEACD가 1993년 이래 한·미·일·중·러 5국간에 개최되고 있을 뿐 아직까지 정부차원의 다자안보협력체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非政府·民間次元의 다자안보협력체도 그 자체로 의의가 있겠지만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역내 안보환경을 개선하고 군비경쟁과 분쟁을 방지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역내국가간의 공생과 안전 및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차원의 다자안보협력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 多者安保協力體 形成方案

정부차원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에 의하여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NEACD나 민간차원의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체인 「亞·太安保協力理事會」(CSCAP)를 이용, 정부차원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격상시키는 방법이다. 북한은 1993년 7월 준비회의 참석이후 NEACD 본 회의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자신의 국익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동북아나 아·태지역의 다자안보협력체를 형성하는 것에 반대하면서도, 1994년 9월 호주를 통하여 ARF 참가를 타진하였으며, 1996년 1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5차 NEACD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앞두고 참가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하기도 하였다. 미·북, 일·북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북한이 NEACD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NEACD를 정부차원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격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CSCAP는 아·태지역 국가들의 안보협력과 관련된 제반연구사업과 정보교환을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1993년 6월 팔라렘푸르에서 설립되어 활동중인 바, 현재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한·미·일·러와 북한이 참여하고 있으나 중국이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현재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투명성

보장, 人權問題 등 다자안보의 포괄적 주요 안건들을 아직은 내정간섭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으며, 특히 남사군도와 대만문제 등이 다자안보대화에서 의제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성공을 거두어 현재보다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되는 경우, 다자안보협력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변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중국이 CSCAP에 참여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CSCAP내의 동북아 관련국들은 정부차원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형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미가 1996년 4월 제안한 한·미·중·북한의 4자회담이 성사되는 경우 여기에 일·러를 참여시켜 정부차원의 東北亞 多者安保協力體가 형성될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북한이 4자회담 제의를 수락하고 停戰協定을 남북한간 平和協定으로 대체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우선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상기와 같은 2가지 방법 이외의 제3대안이 동북아 역내나 역외의 국가 및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3의 대안이 동북아 역내 모든 국가들의 동의를 얻는 경우 정부차원의 다자안보협력체가 형성될 수 있다.

(나) 多者安保協力體의 名稱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형성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역내국가는 러시아와 한국이다. 엘친 러시아대통령은 1992년 11월 방한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창설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한승주 전 외무장관은 1993년 5월 「외교협회」 연설에서 mini-CSCE형 「東北亞

多者安保對話」 창설을 제의하였으며, 1994년 7월 제1차 ARF에서도 NEASED의 창설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차원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합의가 도출되는 경우 협력체 명칭은 한국정부가 이미 제안하고 있는 「동북아 안보대화」(NEASED)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는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분야에서의 역내국가간 협력을 확대·강화한다는 의미에서 「東北亞 安保協力對話」(NEASCD: Northeast Asia Security and Cooperation Dialogue)로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다) 多者安保協力體의 參加國과 議決方式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는 문호 개방원칙에 입각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창설 회원국으로서 이 지역의 안보와 평화에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진 남북한과 미, 일, 중, 러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안보와 평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들, 예를 들면 캐나다, 호주, 몽고 등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대화 상대국으로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국제정치 학자들은 지역이라는 개념을 지리적 인접성 이외에 사회·文化的 同質性, 공유하는 정치적 태도와 행태, 정치적 상호의존성, 경제적 상호 의존성 등 5가지의 기준에 입각해서 정의하기도 한다.

256) 이러한 개념에 입각해 볼 때에도 동북아지역 다자안보협력체에

256) Bruce M. Russett, *International Regions and the International System: A Study in Political Ecology* (Chicago: Rand McNally, 1967); Bruce M. Russett, "Delineating International Regions," in J. David Singer (ed.), *Quantitative International Politics: Insight and Evidence* (New York:

캐나다와 호주 등 동북아의 안보와 관계를 가진 국가들이 참여함으로써 지역 다자안보협력체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國家間 平等化의 폭을 넓여준다는 점에서도 참여국가 범위의 확대는 필요하다. 특히 캐나다와 호주는 검증에 관한 상당한 기술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동북아 6개국간 안보적 이해대립을 중재하고 지역평화체제 조성의 한 조건이 되는 세력균형 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ASEAN 6개국을 주축으로 하여 형성된 ARF에 한, 미, 일, 중, 캐나다, 호주, EU 등이 참여하여 동남아시아의 신뢰구축과 紛爭豫防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이의 필요성을 입증해 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²⁵⁷⁾ 또한 지리적으로 비유럽국가인 미국과 카나다가 CSCE의 창설에 참여하였다.

의결방식과 관련, CSCE/OSCE와 ARF는 기본적으로 만장일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CSCE/OSCE에서 특이한 점은 1992년부터 만장일치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이 원칙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CSCE 관련 의무들의 명백하고 현저히 위반한 경우처럼'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국의 동의없이' 적절한 조치들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CSCE/OSCE는 '만장일치-1'의 의결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가 형성되는 경우에도 만장일치의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滿場一致制의 비효율성과 복잡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국

Free Press, 1969), pp. 317~352.

257) 스나이달은 안보협력을 위한 참여국들의 수가 확대되면 원래 비협력적인 국가들도 방어적으로 협력회의에 참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Duncan Snidal, "Relative Gains and the Patter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5, No. 38 (September 1991), p. 721.

이 직접 관련되는 특정사안에는 표결에 참가할 수 없는 ‘만장일치-1’ 합의방식의 원용도 생각할 수 있다.

(2) 多者間 信賴·安保構築

東北亞地域 平和體制 造成의 성공여부는 정부차원의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체 내에서 참여국들간에 어느 수준까지 상호 신뢰·안보가 구축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1973년에 창설된 CSCE는 약 2년동안의 협상결과 안보와 경제, 과학·기술, 환경 및 인도주의 등에 관한 「헬싱키 최종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특히 ‘유럽안보에 관한 제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동 합의서의 바스켓 I 은 1970년 채택된 「국가간 友好關係에 관한 유엔 결의안」을 원용하여 참가국들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10원칙을 우선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헬싱키 최종합의서」를 기초로 하여 CSCE는 CBMs → CSBMs → 군축의 순으로 약 15년간 유럽국가간 불신을 해소하고 軍備競爭을 방지함으로써 냉전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유럽질서를 창출하였다.

또한 1995년 제2차 ARF에서 참가국들은 ARF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아·태지역의 안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로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즉 참가국들은 ARF의 기본목표를 단순히 군사적 측면만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들을 포함하는 包括的 安保概念에 입각하여 안보환경을 개선하는데 두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ARF는 이러한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信賴構築 增進 → 豫防外交의 開發 → 紛爭解決 努力이라는 3

단계 접근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에서 정부차원의 다자안보협력체가 형성되는 경우 유럽과 동남아의 경험을 準據로 삼아 초기단계에서는 주권평등, 무력위협과 무력행사의 포기, 국경의 불가침,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참여국들의 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제원칙과 협력체의 기본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한 접근법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공동합의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東北亞 多者安保協力體의 기본목표로는 동북아지역의 緊張緩和와 안정 및 평화에 대한 기여, 상호불신 극복과 신뢰증진, 모든 참여국가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와 경제·사회적 발전 및 복지증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戰爭防止, 유엔헌장의 준수 등이 상정될 수 있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에서 다루게 될 의제와 관련, 초기 단계에서는 역내국가간 분쟁문제나 내정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논의를 유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만문제나 남북한문제, 그리고 人權問題 등을 다자안보협력체의 초창기에 의제로 상정할 경우, 중국과 북한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韓半島問題의 韓半島化'라는 차원에서도 다자안보협력체 초기단계부터 남북한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헬싱키 최종합의서」 채택이후 CSCE가 추진하였던 바와 유사하게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도 정치적 信賴構築 → 軍事的 信賴構築 → 軍備統制와 軍縮이라는 3단계 접근법을 통하여 역내에 평화체제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²⁵⁸⁾ 따라서 역내국

258) 스칼라피노 교수도 동북아지역의 안보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노력이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obert Scalapino, "Opportunities

가들은 우선 제1단계로 참가국간의 이해증진과 대화관행의 촉진, 경제, 과학·기술, 문화관계의 확대, 테러방지, 난민대처, 환경보호, 해상 안전 감시, 한반도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 등을 주요 의제로 상정할 필요가 있다. 즉, 다자안보협력체 초기단계에서는 국가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제2단계인 참가국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國防豫算, 군사전략, 군사력 현황 등에 관한 정보와 군인사 교류, 군사훈련 계획의 사전 통보 및 군사훈련 참관, 군비통제와 군축의 기반조성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국들은 이와 같이 상호간의 정치·군사적 신뢰가 공고하게 조성된 이후에 民主化와 인권문제 및 영유권 분쟁 등 민감한 사안들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하여 회원국간 안보협력의 성숙되면 제3단계로 핵무기 확산금지, 非核地帶 創設, 군비축소, 무기이전 통제, 방어무기 공동개발, 공동 군사교육 및 군사·훈련기관 설치 등의 문제들이 협의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참가국들간의 참여한 이해대립으로 각 단계마다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것인 바, CSCE/OSCE의 경우같이 정기회의들 사이에 관련 사안들에 관한 각종의 전문가 회의, 포럼, 세미나 등의 개최나 ARF의 경우같이 회기간 지원그룹과 회기간 회의 등의 설치·운영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nd Challenges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A paper delivered at the AFTA after NAFTA Conference coposred by Princeton University and the Korea Institute (September 1993).

(3) 多者安保協力體의 制度化

CSCE는 1990년 채택된 「파리헌장」을 통하여 정비·강화되기 시작하였고 출범한지 22년만인 1995년 1월 1일부터 유엔헌장이 인정하는 지역적 기관인 OSCE로 제도화되었다. 이에 따라서 OSCE는 유럽내 분쟁지역에 다국적 평화군을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拘束力の 缺如'라는 CSCE의 취약점이 부분적으로 보완됨으로써 OSCE는 유럽평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동북아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본방향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차원의 다자안보협력체를 중장기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OSCE처럼 유엔헌장 제52조가 인정하는 지역적 기관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참여국 정상들간의 정례 회합, 안보·외교관계 장관급회의 개최, 외교·안보 고위실무자 접촉, 사무국 설치, 紛爭防止센터 설치 등을 「동북아 국가간 기본관계 합의서」의 형태로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내 안보문제 논의를 위한 다자안보협력체 참여국 정상들간의 회담을 2년마다 1회씩 실시하고, 1년에 1회 이상 외교·안보관계 장관 회담을 정례적으로 추진 및 정상회담과 장관급회담시 논의될 안건을 사전 조율하기 위한 실무자급 접촉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례적인 회동 이외에도 지역안보와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외교·안보 장관급 특별회의의 개최 필요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를 制度化하기 위해서는 또한 지역안보 문

제를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분쟁방지센터, 분쟁중재재판소, 군축위원회, 검증·사찰팀 등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들 사무국, 분쟁방지센터, 분쟁중재재판소 및 군축위원회 등을 OSCE의 경우같이 6개국에 분산 배치하여 역내국가간 안보관련 제반문제에 대한 다자협력을 긴밀히 도모해 나가야 한다.

第V章 結 論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발생한 인명의 大量殺傷과 산업의 대량파괴 결과로 집단안보를 지향하는 國際聯盟의 창설과 함께 항구적인 세계평화의 조건들을 연구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학문상의 평화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파멸의 가능성이 제기된 1950년대 말부터였다. 이렇게 시작된 본격적인 평화연구는 1960년대의 국제적 긴장완화과정에서 제도화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패러다임의 확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平和研究의 본격화와 제도화 및 패러다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인류사에서는 각종의 민족적, 종교적, 이념적 분쟁과 전쟁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지속된 동서진영간의 이념적·권력정치적 대립이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은 국지적으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냉전종식 이후에도 세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에서 어떻게 항구적인 평화의 조건들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더구나 東北亞地域은 금세기에 러·일전쟁,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등 수차례의 대규모전쟁을 경험한 지역이며 냉전종식 이후 역내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조성하는 문제가 더욱 시급한 실정에 있다고 하겠다.

동북아지역에 평화체제를 조성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軍備競爭, 냉전요인의 상존, 동맹체제 존속 등으로 평화체제 구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견해와 탈냉전으로 인한 역내국가간 협력 가능성 증대, 미국의 안보역할 축소 가능성, 포괄적 안보론으로의 안보개념 확대 등으로 지역협력을 통한 평화체제 조성이 어렵지 않다는 견해로 大別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입장을 종합평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냉전종식 이후 동북아 안보정세의 특징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인식과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동북아지역에는 역내질서의 多極化 추세, 경제적 상호의존도 심화라는 긴장완화 요인과 강대국간 이해대립, 분단국 문제, 영토와 군비경쟁, 중국과 북한체제의 불확실성이라는 잠재적 갈등요인이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지 못하고 이중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러한 과도기적 동북아 안보정세에 직면하여 중국과 북한을 제외한 역내국가들은 아·태지역에 多者安保協力體를 형성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논의 의제나 제도화 과정 등에 대한 이견 때문에 단기적으로 구체적 성과가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ARF나 APEC 등을 통하여 아·태지역의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을 위한 논의가 점차 활성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동북아지역에 정부차원의 다자안보협력체를 수립하려는 역내국가들의 의지는 아직 미미한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아·태지역에서의 「新太平洋共同體」와 같은 구체적인 안을 제의한 바가 없으며 한·미와 미·일 동맹관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의 동북아 안보협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과 러시아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수립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력을 가지고 역내의 모든 국가들이 만족할 수 있는 속도와 방법으로 타협점을 찾을 경우, 정부차원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을 통한 平和體制 構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동북아 역내의 모든 국가들이 냉전종식 이후 포괄적 안보개념에 따라서 정부차원의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평화 유지를 위한 협력안보체로서 1973년에 출범한 CSCE는 유럽에서 오랫동안 地域平和와 안보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였으며, 1995년 1월 1일부터는 OSCE로 제도화되어 유엔이 인정하는 지역적 기관으로서 냉전종식 이후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안보 위협 요인들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는 1994년에 ARF가 창설되어 역내 평화유지와 질서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물론 CSCE/OSCE나 ARF는 협력안보체가 갖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CSCE/OSCE는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속력의 결여와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意思決定 과정 때문에 유럽내의 분쟁을 포괄적으로 조정하지 못하여 왔다. ARF는 강대국인 미·일·중·러와 창설을 주도한 비강대세력인 ASEAN과의 주도권 경쟁, 향후 전망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CSCE는 냉전시대에 동서 양진영의 이념적·군사적 대립구도 속에서 신뢰구축과 군축에 합의하여 다자간 안보협의체 조성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유럽의 새로운 질서창출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OSCE는 현재 유럽지역의 紛爭防止와 위기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불과 2년전에 창설된 ARF도 동남아 및 아·태지역 안보문제의 투명성 증대와 信賴構築을 통하여 지역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 연구는 CSCE/OSCE와 ARF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하여 동북아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들을 도출하였고 이를 동북아 평화체제의 조성방안들을 모색하는데 원용하였다. 이 결과 동북아 평화체제의 조성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평화체제 구축, 양자적 접근과 다자적 접근의 병행추진, 다자간 협력안보 과정의 제도화라는 3가지 기본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또한 동북아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세부 추진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민간차원의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인 NEACD나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체인 CSCAP을 격상시키거나, 한·미가 제안하고 있는 4자회담 성사의 경우 일·러를 참여시켜 우선적으로 정부차원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를 형성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 때 다자안보협력체의 명칭은 한국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東北亞 安保對話」, 또는 역내국가간 협력을 확대·강화한다는 의미에서 「동북아 안보협력대화」로 할 수 있을 것이다. 「東北亞 安保(協力)對話」에 대한 참가국은 남북한·미·일·중·러를 기본으로 하되 역내 세력균형 유지 및 검증과 군비통제를 위하여 캐나다, 호주, 몽고 등이 대화상대국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의사결정방식은 만장일치의 원칙을 채택하되, 만장일치제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CSCE/OSCE의 경우와 같이 「만장일치-1」 합의방식의 원용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동북아 안보(협력)대화」의 성공여부는 참여국 상호간 신뢰·안보의 구축수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 바, 政治的 信賴構築 → 軍事的 信賴構築 → 軍備統制와 軍縮이라는 3단계 접근법을 통한 합의도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안보(협력)대화」를 「東北亞 安保(協力)機構」로 제도화함으로써 OSCE의 경우와 같이 유엔이 인정하는 지역적 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비록 이론상으로 논리적이고 훌륭한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의 기본방향과 세부 추진방안들이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안보적·경제적 이해를 달리하는 역내의 모든 국가들이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동북아 평화체제의 조성에 더욱 필요한 것은 동북아지역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역내국가들의 굳은 의지 및 모든 국가들이 만족할 수 있는 속도와 방법으로 타협점을 찾겠다는 역내국가들의 忍耐力이라고 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1. 단행본

강원식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길정우 등.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와 동북아질서 -1990년대 동북아질서 예측 (II)-」.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김규륜. 「동북아 경제협력의 발전방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박종철.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박홍규. 「CSCE의 역할증대와 향후전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0.

신상진·전동진.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여인곤.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 폐기의 의미와 평가」.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허문영. 「북한 지도부의 정세인식 변화와 정책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홍규덕.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체 형성전망과 대응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황병무. 「신중국 군사론」. 서울: 법문사, 1992.

Auswaertiges Amt. *Die Auswaertige Politik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Koeln: Verlag Wissenschaft und Politik, 1972.

- Auton, Graeme P. *Arms Control and European Security*.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89.
- Axelrod, Robert.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The Basic books, 1984.
- Baratta, Mario von and Clauss, Jan Ulrich. *Fischer Almanach der internationalen Organisationen*. Frankfurt am Main: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95.
- Bentham, Jeremy. *Plan for a Universal and Perpetual Peace*. London: Grotius Society, 1927.
- Buergenthal, Thomas ed., *Rights, Human. International Law and the Helsinki Accord*. Montclair, New Jersey: Allanheld, Osmun & Co. Publishers Inc., 1977.
- Carter, Ashton B. Perry, William J. and Steinbrunner, John D. *A New Concept of Cooperative Security*.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2.
-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Feb. 1995.
- Deutsch, Karl W.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88.
- Dieter, Nohlen hrsg. *Pipers Woerterbuch zur Politik: 5 Internationale Beziehungen*. Muenchen: R. Piper GmbH & Co. KG, 1984.
- Edward Vose Gulick. *Europe's Classical Balance of Power*. N. Y.: Cornell University Press, 1955.

- Garthoff, Raymond L. *Detente and Confrontation: American-Soviet Relations from Nixon to Reagan*.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5.
- Garthoff, Raymond L. *The Great Transition: American-Soviet Relations and the End of the Cold War*.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4.
- Grieco, Joseph M. *Cooperation among Nations*.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 Gromyko, A. A. and Ponomarev, B. N. *Soviet Foreign Policy 1917-1980 in two volumes, Vol. II 1945-1980*.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81.
- Hass, Ernst B. *The Uniting of Europ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Forces, 1950-1957*.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8.
- Holsti, Kalevi J. *International Politics: A Framework for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8.
- IISS. *The Military Balance, 1994-1995*. London: Brassey's, 1994.
- Ina, Hisayoshi. *A New Multilateral Approach for the Pacific: Beyond the Bilateral Security Network*. The Johns Hopkins Foreign Policy Institute, 1993.
- Johnson, Chalmers. *Japan Who Governs?: The Rise of the Developmental State*. N.Y.: W.W.Norton & Co. 1995.
- Kant, Immanuel. *Eternal Peace and Other International Essays*. (trans.) W. Hastie. Boston: World Peace Foundation, 1914.

- _____. *Zum ewigen Frieden*. Stuttgart, 1979.
- Kegley, Charles W. Jr. & Wittkopf, Eugene R. *World Politics : Trend and Transforma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3.
- Keohane, Robert.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 Kistler, Helmut.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Vorgeschichte und Geschichte 1945-1983*. Bonn: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1991.
- Larson, Thomas B. *Soviet-American Rivalr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1978.
- Lundestad, Geir. *East West North South: Major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Politics 1945-1986*. Oslo: Norwegian University Press, 1986.
- Mack, Andre and Ravenhill, John. *Pacific Cooperation*. Westview Press, 1995.
- Mathias Jopp, Reinhart Rummel, and Peter Schmidt eds. *Integration and Security in Western Europe: Inside the European Pillar*. Westview Press, Boulder, 1991.
- McInnes, Colin and Rolls, Mark G eds. *Post-Cold War Security Issues in the Asia-Pacific Region*. Frank Cass & Co, 1994.
- Mitrany, David. *A Working Peace System*. Chicago: Quadrangle Books. 1966.

- Morgenthau, Hans J. *Politics Among Nations*. New York: Knopf, 1948.
- Nohlen hrsg. *Pipers Woerterbuch zur Politik*:5.
- Oye, Kenneth A. ed. *Cooperation under Anarch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 Palmer, Norman D. *The New Regionalism in Asia and the Pacific*. Lexington Books, 1991.
- Pfetsch, Frank R. *Internationale Politik*. Stuttgart: Verlag W. Kohlhammer, 1994.
- Riker, William H. *The Theory of Political Coalitions*.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62.
- Russett, Bruce M. *International Regions and the International System: A Study in Political Ecology*. Chicago: Rand McNally, 1967.
- Schweisfurth. Theodor und Oellers-Frahm. Karin hrsg. *Dokumente der KSZE*. Muenchen :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1993.
- Scruton, Roger. *A Dictionary of Political Thought*.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82.
- SIPRI. *SIPRI Yearbook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 The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July 1994.
- Thucydides, *The Peloponnesian War* ed. J. H. Finley, Jr. Crawley translation. New York: Modern Library, 1951.

- UN.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219.
-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 防衛廳編, 「防衛白書」 1994年版.
- 防衛廳編, 「防衛白書」 1995年版.
- 宋强 等. 「中國可以說不」. 北京: 中華工商出版社, 1996.
- Fukusima, Glen S. 「日美經濟摩擦の政治學」. 東京: 朝日新聞社, 1993.
- 國家教委社會科學社編. 「世界政治經濟與國際關係」. 北京: 經濟科學出版社, 1995.

2. 논 문

- 김명선. “환발해경제권에 대한 전망: 발전전망과 협력모델의 연구.” 정영록 편. 「환발해만 경제협력강화 방안 모색」.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 김성한. “미국의 신아태전략과 한반도.” 「정책연구」 119호. 1995년 3호.
- 김정일.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태현. “신태평양공동체와 지역안보협력.” 「신태평양공동체 구상과 한국」. 서울: 세종연구소, 1994.
- 김홍락. “미국의 대일본정책.” 김덕중 편. 「미국의 동북아정책」 서울: 세종연구소, 1995.

마코토 가와나고. “지역안보와 일본.” 「동북아의 안보협력 문제점 및 전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3.

변진석.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정책의 등장: 다자주의인가 동맹인가?” 한국지역연구협의회 「1995년도 제1차 월례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송영선. “亞太地域의 多者安保協力體制는 可能한가?” 「오늘의 군사 운영 분석」. 제9권, 제2호. 1992. 12.

신상진.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체제 형성에 대한 중국의 입장.” 「地域研究論叢」. 第5輯. 1993.

외교안보연구원. “미야자와 독트린과 일본의 아태지역 정책방향.” 「主要國際問題分析」. 1993. 2.

_____. “최근 ASEAN의 동향: AMM, ARF 그리고 PMC 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1994. 9.

유석진·한태준. “신태평양공동체 구상의 주요 쟁점.” 「신태평양 공동체 구상과 한국」. 서울: 세종연구소, 1994.

윤현근. “클린턴 행정부의 동아시아지역 정책과 우리의 안보.” 「정책 연구」. 121호, 1996년 1호.

이삼성. “동북아 평화체제의 형성에 관하여.” 「동북아평화와 경제협력」. 서울: 아태평화재단, 1995.

이인호. “다자간 안보협력: 중국과 북한의 입장과 역할.” 이기택 외 공저. 「전환기의 국제정치이론과 한반도」. 서울: 일신사, 1996.

이정민. “남북한 신뢰구축과 군비축소방안.” 「통일문제연구」. 제4권 제1호, 1992년 봄.

_____.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체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지역연

- 구논총」. 제5집, 1993.
- 하지메 이즈미. “일본과 한반도 : 동북아 핵비확산지역구상.” 제1회 KIDA/RIPS 동북아국방포럼 「동북아의 안보협력 문제점 및 전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3.
- 한승주. “한국 신외교의 기조.” 한국외교협회 기조연설문. 1993. 5.
- 한호석. “개입·확장 전략과 협상·공존 전략의 대치, 그리고 한반도 통일정세의 변동방향.” 미주평화통일문제연구소 Homepage 입수자료. 1996. 5.
- Acharya, Amitav. “A New Regional Order in South-East Asia: ASEAN in the Post-Cold War Era.” *Adelphi Paper*. no. 279, August 1993.
- Aggarwal, Vinod. “Building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 Asia-Pacific.” *Asian Survey*. November 1993.
- Alagappa, Muthiah. “Regional Arrangements and Interantional Security in Southeast: Going Beyond ZOPFAN.” *Contemporary Southeast Asia*. 1991 March.
- _____. “Regionalism and Security: A Conceptual Investigation.” in Andrew Mack and John Ravenhill eds. *Pacific Cooperation: Building Economic and Security Regimes in the Asia-Pacific Region*. Boulder: Westview Press, 1995.
- Auton, Graeme P. “The CSCE Process: A Way to European Peace in Security.” in Graeme P. Auton (ed.). *Arms Control and European Security*.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89.

- Awanohara, Susumu and Kaye, Lincoln. "Number Game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ly 15, 1993.
- Bhagwati, Jagdish. "Regionalism versus Multilateralism." *The World Economy*. Vol. 15, No. 3. September 1992.
- Buszynski, Leszek. "ASEAN Security Dilemmas." *Survival*. vol. 34, no. 4, Winter 1992-93,
- Chiu, Hungdah. "The Koo-Wang Talks and the prospect of Building Constructive and Stable Relations Across the Taiwan Straits." *Issues and Studies*. Vol. 29, No. 8, August 1993.
- Crone, Donald. "Does Hegemony Matter?: the Reorganization of the Pacific Political Economy." *World Politics*. July 1993.
- Crow, Suzanne. "Why Has Russian Foreign Policy Changed?" *RFE/RL Research Report*. vol. 3, no. 18, May 6, 1994.
- Curtis, Gerald L. "Meeting the Challenge of Japan in Asia." in Gerald L. Curtis ed.. *The United States, Japan and Asia*. N.Y.: W.W.Norton & Co., 1994.
- Funabashi, Yoichi. "Clinton says Japan must make change." *Asahi Evening News*. 1993. 7. 6.
- Gelman, Harry. "An American Perspective on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A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Major Powers and Future Security in Northeast Asia, May 25~26, 1995, Seoul, Korea.
- Jahn, Egbert. "Frieden." in Dieter Nohlen hrgs. *Pipers*

- Woerterbuch zur Politik 1 Politikwissenschaft*. Muenchen: R. Piper GmbH & Co. KG, 1985.
- Jisi, Wang. "East Asia: Prospects for Cooperation." *Beijing Review*. July 19~25, 1993.
- Johnson, Chalmers and Keoben, E.B. "The Pentagon's Ossified Strategy." *Foreign Affairs*. Vol. 74, No. 4.
- Khanna, Jane and Lee, Chang-jae. "Northeast Asia in an Era of Change: Opportunity and Challenges for Economic Cooperation in the Yellow Sea." in Jane Khanna and Chang-jae Lee, ed.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Challenges To The Nation-State: Economic Cooperation in the Yellow Rim*. Seoul: Pacific Forum CSIS/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996.
- Kislov, Alexander. "Russia and Northeast Asia."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XXIII, no. 4, Winter 1992.
- Klard, Michael. "The Next Great Arms Race." *Foreign Affairs*. Summer 1993.
- Kounadze, Gueorgui F. "Russia's Foreign Policy in Evolving World and Prospects of Russia-Korea Relationship." 「외교」, 제31호, 1994. 9.
- Krasner, Stephen D.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Regimes as Intervening Variables." in Stephen D.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Lowenthal, Mark M. "Preventive Diplomacy: Prospects and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March 25, 1993.

Mack, Andrew and Kerr, Pauline. "The Evolving Security Discourse in the Asia-Pacific." *The Washington Quarterly*. 18:1.

Mori, Kazuko. "China's Pivotal Role in the Asia-Pacific Community." *Japanes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9, No. 3, Summer 1995.

Pederson, M. Susan and Weeks, Stanley. "A Survey of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 in Ralph A. Cossa ed. *Asia Pacific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 Washington, D.C.: The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1995.

Portyakov, V. "Are the Chinese Coming? Migration Processes in Russia's Far East." *International Affairs*. Vol. 42, No. 1, January-February 1996.

Powell, Robert. "Absolute and relative Gai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5, December 1991.

Ruggie, John G. "Multilateralism: The Anatomy of an Institution." in John G Ruggie ed., *Multilateralism Matter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Russett, Bruce M. "Delineating International Regions." in David

- J. Singer ed. *Quantitative International Politics: Insight and Evidence*. New York: Free Press, 1969.
- Scalapino, Robert.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A paper delivered at the AFTA after NAFTA Conference coposored by Princeton University and the Korea Institute, September 1993.
- Schifter, Richard.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Ancient History or New Oppornities?"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16, no. 4, Autumn 1993.
- Schlotter, Peter. "Die OSZE auf dem Abstellgleis?" in Reinhard Mutz, Bruno Schoch and Friedhelm Solms hrsg. *Friedensgutachten 1995*. Muenster: Lit Verlag, 1995.
- Schroeder, Gerhard. "German Looks at Eastern Europe." *Foreign Affairs*. vol. 44, no. 1, Oct., 1965.
- Seidelmann, Reimund. "Frieden, Freiheit und Gerechtigkeit: Normative Postulate der Internationalen Beziehungen." in Manfred Knapp und Gert Krell (Hrsg.). *Einfuehrung in die Internationale Politik*. Muenchen: R. Oldenbourg Verlag, 1990.
- Snidal, Dunc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Relative gain Maximizers." *International Security Quarterly*. 35, December 1991.
- _____. "Relative Gains and the Patter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5,

No. 38, September 1991.

Stefashin, Viktor. "Scenarios: Development of the Military-Political Situation in the Far East." *Far Eastern Affairs*. no. 2, 1992.

Sutter, Robert G. "Korea: Improved South Korean-Chinese Relations - Motives and Implications." 「연합통신」. 1996. 3.

Titarenko, Mikhail L. "Disintegration of the USSR: Its Impact on the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and the Russian Policy in the Region." a paper prepared at the Fifth ISSS-IFES Joint Conference, Seoul, Hotel President, October 13~14, 1992.

Xuetong, Yan. "Orientation of China's Security Strategy."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Yarbrough, Beth and Yarbrough, Robert. "Regionalism and Layered Govern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48, Spring 1994.

Zhebin, Alexander Z. "Mult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Russia." 「지역연구논총」. 제6집, 1994.

Zhenyuan, Guo. "Asian-Pacific Region Remains Peaceful." *Beijing Review*. February 5~11, 1996.

_____. "Prospects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Beijing Review*. July 11-17, 1994.

前田哲南・竹田いさみ. "アジア太平洋に多國間安保は可能か." 「世界」. 1996. 7.

庶雨. “世紀之交的多極化趨勢.” 「現代國際關係」. 1996年 第4期, 1996.

4.

時永明. “亞太安全環境與地區多邊主義.” 「國際問題分析」. 1996年 第1期. 1996. 1.

楊力宇. “美中美台關係面臨新形勢.” 「爭鳴」. 1994年 12月號. 1994. 12.

楊成緒. “對東亞安全問題的分析.” 「國際問題分析」. 1994年 第3期. 1994.

王和興. “世界經濟區域集團化的新發展及問題.” 「國際問題研究」. 1993年 第4期. 1993. 10.

陳鋒. “日本邁向政治和軍事大國的文件.” 「瞭望」. 1996年 第4期. 1996. 1.

3. 기타

「경향신문」.

「東亞日報」.

「로동신문」.

「世界日報」.

「주간북한동향」.

「中央日報」.

「朝鮮日報」.

「한겨레신문」.

Daily Report.

Defense New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The Korea Herald.

「讀賣新聞」.

「每日新聞」.

「日本經濟新聞」.

「朝日新聞」.

「文匯報」.

「外交青書」.

「人民日報」.

「中國時報」.

Izvestiya.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政勢 展望
-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中心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
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십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的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 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分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모색-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金正日 體制下의 軍部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軍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남북대화 사례를 중심으로
-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 95-18 北·美關係와 韓·美關係 變化展望
-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Ⅲ): 「근로자」 해제
- 95-21 탈냉전기 중북한관계 변화 연구
- 95-22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 95-23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 95-24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 95-25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變化 展望
- 95-26 1995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 96-06 북한의 대 주변4국 군사관계
-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周邊情勢 및 南北韓 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 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大會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廢棄의 意味와 評價
-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 96-01 北韓의 承繼政治 動向: 2·16 生日行事를 中心으로
- 96-02 中國의 對內政策과 對臺灣政策 展望: 제8기 全人大 4차회의 結果分析을 中心으로
- 96-03 北韓의 對美·中政策 懸案과 展望
- 96-04 周邊4國 頂上會談과 韓半島 安保環境

96-05 러시아大選結果 分析

96-06 金日成 死後2年: 北韓政勢의 動向 및 展望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95-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0. 1 ~ 1995. 12. 31)
 96-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1. 1 ~ 1996. 3. 31)
 96-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4. 1 ~ 1996. 6. 30)

〈年例情勢報告書〉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關係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95-0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5~1996

〈論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統一研究論叢 第4卷 2號(1995. 12)
 統一研究論叢 第5卷 1號(1996. 7)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1995)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1994)

〈資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 95-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追錄I)
- 95-02 藏書目錄: 特殊資料(追錄I)

〈통일문화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 95-01 統一과北韓社會文化(上)
- 95-02 統一과北韓社會文化(下)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研究報告書 96-08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5-19

전화: 232-9252, FAX: 235-5270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266-0892

印刷日 1996년 10월 일

發行日 1996년 10월 일
